

중소 건설업 실태 분석과 육성 방안

2005.11

강 윤 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차 례 >

| | |
|-------------------------------|-----------|
| 요 약 | i |
| 제1장 서론 | 1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
| 3. 보고서의 구성 | 3 |
| 제2장 지방 중소 건설업 현황 | 5 |
| 1. 중소 건설업체 수의 변화 | 5 |
| 2. 수주 현황 | 6 |
| (1) 1999 ~ 2004년의 수주 현황 | 6 |
| (2) 2005년의 수주 현황 | 1 |
| 3. 경영 성과 | 12 |
| 4. 소결 | 16 |
| 제3장 중소 건설업 실태 조사 | 17 |
| 1. 실태 조사 개요 | 17 |
| (1) 조사 개요 | 17 |
| (2) 조사 업체 개관 | 17 |
| 2. 경영상태 및 전망 | 19 |
| (1) 경영상태 | 19 |
| (2) 경영성과 | 23 |
| (3) 건설경기 전망 | 27 |
| (4) 경영상태 전망 | 32 |
| (5) 경영애로 요인 및 극복 과제 | 36 |
| 3. 중소 건설업 관련 정책·제도 | 41 |
| (1) 중소 건설 관련 제도 | 41 |
| (2) 건설업 업역 제한 폐지 | 54 |
| (3) PQ·적격심사 중 경영상태 평가 | 60 |

| | |
|---|------------|
| 4. 기술 개발 및 자금 조달 | 62 |
| (1) 기술개발 | 62 |
| (2) 자금 조달 | 65 |
| 5. 중점사업분야 | 68 |
| 6. 소결 | 71 |
| (1) 경영상태 및 경기 전망 | 71 |
| (2) 경영애로 요인 및 극복 과제 | 72 |
| (3) 중소 건설업 관련 정책·제도 | 72 |
| (4) 기술개발 및 자금조달 | 73 |
| (5) 중점사업분야 | 73 |
| 제4장 육성 방안 | 75 |
| 1. 중소 건설업 정책의 기본 방향 | 75 |
| (1) 무자격 부실업체의 철저한 배제 | 75 |
| (2) 중소 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 76 |
| 2. 지방계약법의 적극적 활용 | 77 |
| (1) 발주 방식 및 발주 규모 검토 조항 신설 | 77 |
| (2) 입찰우대(bid preference) 제도 도입·시행 | 78 |
| 3.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한 정부 재정의 운용 | 80 |
| 4. 중소 건설업체 기술 개발 유도 정책의 실시 | 81 |
| 5.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 81 |
| 제5장 결론 | 85 |
| 부록 1 | 87 |
| 부록 2 | 105 |
| 부록 3 | 111 |
| 참고문헌 | 123 |
| Abstract | 125 |

〈 표 차례 〉

| | |
|---|----|
| 〈표Ⅱ-1〉 건설업체 수의 변화 | 5 |
| 〈표Ⅱ-2〉 중소 건설업체 지역별 수주 추이(전체공사) | 7 |
| 〈표Ⅱ-3〉 중소 건설업체 지역별 수주 추이(공공공사) | 8 |
| 〈표Ⅱ-4〉 중소 건설업체 지역별 수주 추이(정부공사) | 9 |
| 〈표Ⅱ-5〉 중소 건설업체 지역별 수주 추이(지자체공사) | 10 |
| 〈표Ⅱ-6〉 중소 건설업체 지역별 수주 추이(민간공사) | 11 |
| 〈표Ⅱ-7〉 2005년 수주물량 CBSI조사 결과 | 2 |
| 〈표Ⅱ-8〉 규모별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주요 지표 추이 | 14 |
| 〈표Ⅱ-9〉 규모별 활동성, 생산성 주요 지표 추이 | 15 |
| 〈표Ⅲ-1〉 응답업체 개관-규모, 시공능력순위 | 18 |
| 〈표Ⅲ-2〉 지역별 경영상태 | 19 |
| 〈표Ⅲ-3〉 시공능력순위별 경영상태 | 20 |
| 〈표Ⅲ-4〉 매출액의 변화 | 24 |
| 〈표Ⅲ-5〉 경상이익률의 변화 | 25 |
| 〈표Ⅲ-6〉 부채비율의 변화 | 26 |
| 〈표Ⅲ-7〉 지역별 건설경기 전망 | 28 |
| 〈표Ⅲ-8〉 시공능력순위별 건설경기 전망 | 29 |
| 〈표Ⅲ-9〉 건설 경기 부정적 전망 근거 | 31 |
| 〈표Ⅲ-10〉 경영상태 전망 | 32 |
| 〈표Ⅲ-11〉 시공능력순위별 경영상태 전망 | 34 |
| 〈표Ⅲ-12〉 경영애로요인 | 37 |
| 〈표Ⅲ-13〉 시공능력순위별 경영애로요인 | 37 |
| 〈표Ⅲ-14〉 경영애로 극복 과제 | 39 |
| 〈표Ⅲ-15〉 시공능력순위별 경영애로 극복 과제 | 40 |
| 〈표Ⅲ-16〉 경영애로 극복 정책 및 과제 | 41 |
| 〈표Ⅲ-17〉 중소 건설업 관련 정책·제도 평가 | 42 |
| 〈표Ⅲ-18〉 지방계약법 제정·시행에 대한 평가 | 43 |
| 〈표Ⅲ-19〉 BTL사업 확대에 대한 평가 | 45 |
| 〈표Ⅲ-20〉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 48 |

| | |
|--|----|
| <표Ⅲ-21> 중소 건설업체 직접시공비율 | 51 |
| <표Ⅲ-22> 시공능력순위별 직접시공비율 | 51 |
| <표Ⅲ-23> 기타 제도에 대한 평가 | 52 |
| <표Ⅲ-24>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조달청 등급별 입찰 공사 비중 | 53 |
| <표Ⅲ-25> 지역제한, 지역의무, 조달청 등급별 입찰제도 | 54 |
| <표Ⅲ-26> 업역제한 철폐에 관한 의견 | 55 |
| <표Ⅲ-27> 시공능력순위별 업역제한 폐지에 관한 의견 | 55 |
| <표Ⅲ-28> 업역제한 폐지 시 전문업종 진출 의사 | 58 |
| <표Ⅲ-29> 시공능력순위별 업역제한 철폐시 전문업종 진출 의사 | 58 |
| <표Ⅲ-30> 업역제한 철폐시 진출 전문업종 | 59 |
| <표Ⅲ-31> 시공능력순위별 업역제한 철폐시 진출 전문업종 | 60 |
| <표Ⅲ-32> PQ, 적격심사 경영상태 개선 필요성 | 60 |
| <표Ⅲ-33> 재무비율 평가 항목 중 적절치 못한 것 | 61 |
| <표Ⅲ-34> 신기술개발에 대한 의견 | 62 |
| <표Ⅲ-35> 신기술 개발 실적 | 63 |
| <표Ⅲ-36> 관련 제도의 평가 | 64 |
| <표Ⅲ-37> 신기술개발 유도 대책 | 64 |
| <표Ⅲ-38> 지역별 차입금 의존도 | 65 |
| <표Ⅲ-39> 자금조달방법 | 66 |
| <표Ⅲ-40> 자금조달 상황 | 67 |
| <표Ⅲ-41>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사항 | 67 |
| <표Ⅲ-42> 중소 건설업체 중점 사업 분야(지역별) | 68 |
| <표Ⅲ-43> 중소 건설업체 중점 사업 분야(시공능력순위별) | 69 |
| <표Ⅲ-44> 향후 진출 사업 분야 | 70 |
| <표Ⅲ-45> 향후 진출 사업 분야 | 71 |
| <표Ⅳ-1> 캘리포니아주의 입찰 우대 제도 적용 방법(Ⅰ) | 79 |
| <표Ⅳ-2> 캘리포니아주의 입찰 우대 제도 적용 방법(Ⅱ) | 80 |
| <표Ⅳ-3>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애로 극복 과제 | 82 |
| <표Ⅳ-4> 일본의 중소 건설업 신분야 진출 지원 제도 | 83 |

< 그림 차례 >

| | |
|--------------------------------------|----|
| <그림Ⅲ-1> 경영상태 개선 이유 | 21 |
| <그림Ⅲ-2> 경영상태 악화 이유 | 22 |
| <그림Ⅲ-3> 건설경기 낙관적 전망 근거 | 30 |
| <그림Ⅲ-4> 경영상태 개선 전망 이유 | 35 |
| <그림Ⅲ-5> 경영상태 악화 전망 이유 | 36 |
| <그림Ⅲ-6> 지방계약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유 | 44 |
| <그림Ⅲ-7> 지방계약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 | 45 |
| <그림Ⅲ-8> BTL 사업 확대 부정적 평가 이유 | 46 |
| <그림Ⅲ-9> BTL 사업 확대 긍정적 평가 이유 | 47 |
| <그림Ⅲ-10>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긍정적 평가 이유 | 49 |
| <그림Ⅲ-11>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부정적 평가 이유 | 50 |
| <그림Ⅲ-12> 업역제한 폐지 반대 이유 | 56 |
| <그림Ⅲ-13> 업역제한 폐지 찬성 이유 | 57 |

요 약

제1장 서론

- 본 연구는 IMF 이후의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분석을 기초로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실태 조사 및 연구 방법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업통계연보, 건설업경영분석 등의 통계자료 및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중소 건설업 현황을 파악하였고, 전국의 2,000개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여기에 전국을 5개 권역(서울·경기, 충청, 영남, 경남, 전라)으로 나누어 개최한 간담회 결과를 참고하였음.

제2장 지방 중소 건설업 현황

- 2004년 말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9년에 비해 약 150% 정도 증가한 12,990개사로, 이중 서울업체는 16.5%인 2,144개이며 지방업체는 83.5%인 10,846개사임.
- 시공능력 순위 101위 이하인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지역별 수주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에 46.7% 수준이던 101위 이하 건설업체의 수주량 비율은 46.7%에서 2003년 55.5%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 다시 50.7%로 감소하였음.
 - IMF 이후 2003년까지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은 민간 경기, 특히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금액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46.6%에서 2004년 57.1%로 증가하였으며, 1개사 평균 공공공사 수주금액은 1999년 24.8억원에서 2004년 14.1억원으로 40%이상 감소하였음.
- 시공능력순위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수주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 6조7천억원 규모로 66%의 점유율을 보이던 것이 2004년 11조 4천억원 규모에 78%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민간공사의 경우 시공능력순위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량이 민간공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46.8%에서 2004년 46.6%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2002년 약 60%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3년 56.1%를 기록하여 하락하기 시작하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매월 발표하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의 수주물량 지수를 통해 2005년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을 추정해보면 2005년 들어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은 2~9월까지 수주물량 지수가 100을 초과하고 있어 전월에 비해 계속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금년 들어 10월까지의 평균 물량지수가 43.7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금년 들어 학교공사 등의 BTL민자사업 대폭 확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대폭적인 축소, 턴키·대안입찰의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중소 건설업체의 주요 경영성과의 분석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업경영분석」의 주요 경영지표를 참고하였음.

- 우선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추이를 보면 1999년 -1.7%이던 매출액증가율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2002년을 제외하고는 10~20% 내외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2003년까지 누적·증가된 수주물량의 기성 증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정성 측면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익성 측면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 -1.8%에서 2004년 5.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액경상이익률도 1999년 -11.1%에서 2004년 5.6%로 개선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제3장 중소 건설업 실태 조사

1. 실태 조사 개요

- 실태조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2005년 7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2004년 토건 시공능력순위 78위~2077위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업체 중 조사에 응한 업체는 322업체로 응답률은 16.1%임.
- 실태조사에 응한 322개 업체 중 중기업(상시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45개 업체로 1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기업(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은 264개업체로 82.0%를 차지하고 있음.

2. 경영상태 및 전망

(1) 경영상태

- 중소기업체들의 현재 경영상태를 5년 전(2000년)과 1년 전(2004년)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IMF체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에 비해서는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구체적으로 5년 전에 비해 경영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응답한 업체가 50.7%를 차지하고 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24.8%만이 ‘개선된 것’으로 응답하여 25.9%가 감소함.
- 5년·1년 전과 비교하여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설업체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응답한 업체가 59.3%(5년 전과 비교), 68.6%(1년 전과 비교)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24.1%, 9.3%)’, ‘중점사업전환 및 다각화 추진(8.3%, 11.6%)’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2.7%, 3.5%에 그침.
- 5년·1년 전과 비교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된 이유는 5년 전과 비교해서는 ‘경쟁심화(77.9%)’가,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물량감소(37.1%)’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됨.

(2) 경영성과

- 4년(2000년)·1년(2003년) 전과 비교한 2004년의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4년 전과 비교하여 ‘11%이상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62.1%로 나타나 ‘11%이상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인 22.3%를 크게 초과하여 중소기업체들은 전반적으로 4년 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중소 건설업체의 수익성 측면을 나타내는 경상이익률의 변화를 보면 4년 전(2000년)과 비교하여 '1%이상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5.4%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1%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31.5%로 조사됨.
- 중소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의 변화를 보면 4년 전과 비교하여 부채비율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42.9%로,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인 32.8%보다 높게 나타남.

(3) 건설경기전망

- 중소 건설업체들이 전망하는 향후 건설 경기 전망은 단기(1~2년내), 중장기(3년 이후)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단기 건설경기 전망은 '부정적(이하 매우 부정적 포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4.0%에 달하고 있음.
- 향후 건설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을 통한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응답한 경우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수요 창출(28.0%)', '경제 활성화(16.0%)', '건설 산업 구조개편(12.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중장기적으로 건설경기를 낙관하는 이유로는 '신수요 창출'로 인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31.5%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제도 발전'이 24.7%로 그 뒤를 이음.
- 향후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소규모공사의 축소 및 BTL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물량 축소'로 응답한 경우가 39.5%, '국가경제 회복 난망'으로 응답한 경우가 3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경쟁의 심화'로 인해 건설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8.9%로 조사됨.

(4) 경영상태 전망

- 향후 자사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개선(이하 대폭 개선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경우가 36.0%로 ‘악화(이하 대폭 악화 포함)될 것’으로 응답한 경우인 30.3%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중장기적으로는 경영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단기보다 다소 증가하여 45.1%로 조사되었으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도 다소 증가하여 33.5%로 조사됨.
- 향후 경영상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단기, 중장기 모두 부정적인 건설 경기 전망에 대응하여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경영 상태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향후 경영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경쟁의 심화’가 53.8%(단기), 46.9%(중장기)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물량 감소’가 28.6%(단기), 28.3%(중장기)로 조사됨.

(5) 경영애로 요인 및 극복 과제

-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은 물량부족으로 조사되었음.
 - 다음으로 ‘경쟁의 심화’로 응답한 경우가 11.0%,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침체’가 8.2%로 조사되었으며, ‘건설 산업 규제(3.5%)’,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미비(1.9%)’, ‘원가상승(1.6%)’ 등으로 조사됨.
- 현재의 경영 애로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건설업체 자율적인 과제로는 ‘영업력 강화’로 응답한 경우가 47.7%로 조사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다각화’가 26.0%, ‘경비 절감’이 13.2% 등으로 나타남.
 - 주목할만한 것은 ‘인재 육성(3.3%)’, ‘기술 개발(2.3%)’ 등을 경영 애로 요인 극복과제로 응답한 경우가 매우 적게 조사됨.

- 중소 건설업체의 주요 경영 애로 요인인 건설 물량 부족과 경쟁의 심화를 극복할 정부의 정책 및 제도로는 전체 응답업체 중 51.3%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물량 확대’로 응답함.
- 어떤 형식으로든 공사 물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업체의 약 74%에 이르고 있음.
- 향후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계약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3. 중소 건설업 관련 정책·제도

(1) 중소 건설 관련 제도

-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는 ‘지역업체 가산점 부과 제도’이며, 다음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제한입찰공사 확대’, ‘「지방계약법」의 제정·시행’·‘조달청 등급별 입찰제도’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음.
-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는 ‘BTL사업의 확대’, ‘턴키·대안공사의 확대’ 등으로 조사됨.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이 한창인 「지방계약법」의 제정·시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이하 매우 긍정적 포함)’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경우가 응답업체의 63.6%로, ‘부정적(이하 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예상하고 있는 경우인 4.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발주 물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41.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발전(29.9%)’, ‘지역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시행(25.8%)’ 등으로 조사됨.

- 부정적인 평가 이유는 현재 준비중인 「지방계약법」의 내용이 ‘중소 건설업체에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교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에 대한 BTL방식의 민자사업 확대는 예상대로 중소 건설업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BTL 방식의 민자사업 확대가 중소 건설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중소 건설업체의 물량 축소’라고 응답한 경우가 52.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중소 건설업체 참여가 불리’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2.0%로 조사됨.
-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신규 건설시장의 창출(36.7%)’, ‘정부 재정 부담 축소(26.7%)’, ‘민간 창의 반영(23.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해서는 ‘중소 건설업체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9.2%에 달했으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7.6%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13.3%보다 높게 조사됨.
- 중소 건설업체들의 직접 시공비율을 조사한 결과 40~60%미만 직접시공하고 있는 응답한 비율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이상 직접 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35.8%에 달하고 있음.
- ‘지역제한입찰대상 공사’ 확대에 대해서는 80.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7%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제도는 전체 응답업체의 86.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조달청 등급별 입찰제도는 65.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모두 중소 건설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터키·대안공사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51.2%로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4.8%에 달하고 있어 중소 건설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제한입찰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조달청 등급별 입찰공사가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연간 공사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조달청 등급별 입찰 공사 비중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지역제한 입찰공사 | 소계 |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 | 소계 | 조달청등급별 입찰공사 |
|------------|-----|--------------|-----|----------------|-----|----------------|
| 전체 | 289 | 58.4 | 285 | 17.7 | 285 | 18.7 |
| 서울 | 12 | 36.9 | 11 | 23.0 | 11 | 26.5 |
| 경기 | 32 | 51.0 | 31 | 19.6 | 32 | 20.6 |
| 인천 | 10 | 29.6 | 10 | 18.1 | 10 | 23.0 |
| 충북 | 23 | 68.6 | 23 | 14.4 | 23 | 14.9 |
| 충남(대전) | 31 | 53.1 | 30 | 21.2 | 31 | 23.9 |
| 경북(대구) | 57 | 57.0 | 56 | 17.9 | 56 | 18.9 |
| 경남(부산, 울산) | 40 | 64.3 | 41 | 19.7 | 40 | 16.8 |
| 전북 | 10 | 64.2 | 9 | 20.3 | 10 | 9.5 |
| 전남(광주) | 33 | 58.8 | 33 | 15.0 | 33 | 21.3 |
| 강원 | 22 | 76.5 | 22 | 12.4 | 21 | 12.4 |
| 제주 | 10 | 68.5 | 10 | 7.0 | 9 | 7.2 |
| 무응답 | 9 | 55.6 | 9 | 22.0 | 9 | 22.4 |

(2) 건설업 업역 제한 폐지

-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겸업제한의 폐지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61.3%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경우인 25.5%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일반·전문간 업역 제한 규제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중소 건설업체 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의 심화’와 ‘중소 건설업체들의 전문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38.6%로 같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16.5%로 조사되었음.
- 일반·전문간 업역 규제의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는 ‘건설 산업의 구조 개편’,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수익증대’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일반건설업체인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규제가 폐지될 경우 전문 업종에 진출할 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 업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63.5%로 ‘진출하겠다’는 의견 36.5%보다 높게 나타남.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규제가 폐지될 경우 전문건설업종 진출할 경우 진출을 희망하는 전문건설업종을 조사한 결과 ‘토공사업(32.2%)’,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8%)’, ‘시설물유지관리업(12.3%)’, ‘실내건축공사업(8.2%)’, ‘상하수도설비공사업(7.6%)’ 등의 순서로 조사됨.

(3) PQ적격심사 중 경영상태 평가

- PQ 및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항목 중 적절하지 못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업체 중 20.1%가 ‘매출액순이익률’로 응답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9.2%, ‘부채비율’이 12.2%로 각각 조사되었음.

4. 기술 개발 및 자금 조달

(1) 기술개발

- 중소기업체들의 최근 3년 동안 기술 개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191개 업체의 평균 기술 개발 실적은 0.3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충북 지역이 평균 1.5개로 기술 개발 실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유도할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주문한 경우가 전체의 48.0%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중소기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유도할 구체적 제도를 조사한 결과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기술개발 실적의 각종 입찰심사에 반영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구체적으로 공사발주시 관련신기술 의무적인 설계반영 법제도화, 업체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개발정보공유, 기술개발 이후의 철저한 관리감독, 중소기업기술연구소 설립 (개별회사 연구소 통합), 중소기업체만을 위한 기술평가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기술개발관련 교육 및 세미나 제도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됨.

(2) 자금 조달

- 중소기업체의 평균 차입금의존도는 14.0%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체들의 차입금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전체적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10% 미만인 업체가 55.4%로 나타났고, 차입금 의존도가 0%인 업체도 28.5%에 달하고 있으며, 차입금의 의존도가 50% 이상인 업체는 2.8%에 그침.

- 중소 건설업체들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8%로 가장 높았으며, ‘공사대금’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41.4%로 조사됨.
- 다음으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사채와 제3금융권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의 순으로 조사됨.
-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자금 조달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과거와 비교해서 조사한 결과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49.8%)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43.3%로 조사됨.
- 금융기관 자금조달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는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온 ‘물적 담보의 요구’로 조사됨.
- 다음으로 ‘대출한도의 부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제출 서류가 과다하다’,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등의 순으로 나타남.

5. 중점사업분야

- 현재 중소 건설업체의 중점 사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인 ‘도로(교량터널 포함) 공사(24.4%)’가 가장 높게 조사됨.
- 다음으로 공공공사인 ‘학교시설(14.7%)’, ‘자재 아파트 사업(10.5%)’, ‘공용청사(7.45)’, ‘민간 도급 근린시설공사(4.3%)’의 순으로 나타남.
- 시공능력순위별 중점 사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순위가 높은 78~200위 업체들이 ‘자재 아파트 사업’을 중점 사업 분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공능력순위가 낮아질수록 공공공사 위주로 특히, ‘도로 공사(교량터널 포함)’를 중점 사업 분야로 응답한 경우가 많음.

-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현재의 중점 사업 분야와는 달리 ‘자체 아파트 사업’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비율이 22.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도로 공사(교량·터널 포함)’가 18.6%, ‘민간 아파트 도급공사’가 6.6%, ‘학교시설’이 5.8%, ‘자체 사무용빌딩분야’가 5.4% 등의 순서로 나타남.

제4장 육성 방안

1. 중소 건설업 정책의 기본 방향

- 정부는 건설한 업체가 시장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무자격 부실업체의 시장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의 기초로 삼아야 함.
-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이 필요함.
 - WTO 등 국제 질서의 범위 내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주 기회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2. 지방계약법의 적극적 활용

- 내년부터 지방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공공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방계약법」이 시행되는데, 이러한 「지방계약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차별성을 두어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쟁 요소 확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1) 발주 방식 및 발주 규모 검토 조항 신설

- 「지방계약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의 발주 방식을 결정하거나, 공사의 발주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하여 대·중소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여야 함.

(2) 입찰우대(bid preference) 제도 도입·시행

- 「지방계약법」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하는 경우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입찰우대 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도입하여 대·중소 건설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3.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한 정부 재정의 운용

- 정부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건설업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의 사정을 배려하여 재정을 운영하는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을 고려하여 민자 방식 또는 재정 투입 방식 등을 결정하고, 장기계속공사의 예산 배정 등에도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4. 중소 건설업체 기술 개발 유도 정책의 실시

- 중소 건설업체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설 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는 정책을 펴거나, 중소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기술연구소를 운영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5.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정부 차원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은 시기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을 검토하여야 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일반·전문 건설업에 대한 겸업 제한 완화, 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제도의 폐지 논의, 설계·시공의 분리발주 완화 등 건설 산업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은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의 확대 여부, 일반 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BTL(Build-Transfer-Lease) 민자사업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8.31부동산 대책과 이의 입법화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건설 산업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건설 산업 환경의 대폭적이고 급격한 변화는 건설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중소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금년 들어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은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주요 수주물량인 학교시설공사의 신규 발주 규모는 교육세 감소 등 정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금년 7월말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규모가 70~80억인 공공공사 발주규모도 전년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어려움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진행 중인 공공 건설사업 현장에 공사비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 중소 건설업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적 측면으로만 접근하여 비롯되고 있는 폐지 논란과 특히, 건설시장 개발 협상과정에서 시장개방 대상 공사를 현재 500만SDR이상에서 150만SDR로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러한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중소 건설업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중소 건설업체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 말 현재 12,922개사에 달하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소 건설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의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IMF 이후의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분석을 기초로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은 우선 중소 건설업의 현황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통계연보와 건설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지역별 업체 수와 수주 현황, 매출액 현황 및 경영성과 지표를 조사·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우선 중소 건설업체의 현재 경영상태를 IMF 이후인 5년 전과 1년 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향후 건설경기 및 자사의 경영상태 전망을 단기와 중장기로 조사하였으며 그 전망이유를 제시하였다. 또 현재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애로 요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소 건설업체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제도에 대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평가결과와 특히, 중요한 정책 변화인 일반·전문 건설업체간 겸업규제 완화 등에 대한 중소 건설업체의 입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등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현재 및 향후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중점사업 분야를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지방계약법을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 요소 확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및 연구 방법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업통계연보, 건설업경영분석 등의 통계자료 및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중소 건설업 현황을 파악하였고, 전국의 2,000개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 전국을 5개 권역(서울·경기, 충청, 영남, 경남, 전라)으로 나누어 개최한 간담회 결과를 참고하였다.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정책적 측면과 건설기업의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면담조사 결과 및 문헌조사 결과를 참조하였다.

3.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건설업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지방중소 건설업체의 현황 및 수주 현황을 소개하고, 동 협회의 건설업경영 분석을 참고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설문조사 및 지역별 간담회 결과를 통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최근의 경영 상태 및 향후 경영 전망,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중점사업분야 등을 조사·제시하였고, IV장에서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4 .중소 건설업 실태 분석과 육성 방안

제2장

지방 중소 건설업 현황

1. 중소 건설업체 수의 변화

2004년 말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체 수는 <표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에 비해 약 150% 정도 증가한 12,990개사로, 이중 서울업체는 16.5%인 2,144개이며 지방업체는 83.5%인 10,846개사이다. 전체 업체 수에서 서울업체와 지방업체의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업체수의 증가도 1999년에 비해 서울이 160%, 15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Ⅱ-1> 건설업체 수의 변화

| 구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 합계 | 5,144 | 7,975 | 11,961 | 12,634 | 12,996 | 12,990 |
| 서울 | 825 | 1,276 | 1,974 | 2,223 | 2,296 | 2,144 |
| 지방 | 4,319 | 6,699 | 9,987 | 10,411 | 10,700 | 10,846 |
| 부산 | 266 | 400 | 606 | 697 | 693 | 664 |
| 대구 | 125 | 210 | 303 | 354 | 385 | 379 |
| 인천 | 156 | 255 | 394 | 457 | 449 | 467 |
| 광주 | 76 | 106 | 184 | 194 | 247 | 238 |
| 대전 | 95 | 150 | 256 | 251 | 262 | 270 |
| 울산 | 79 | 115 | 182 | 205 | 201 | 207 |
| 경기 | 859 | 1,295 | 2,019 | 2,076 | 2,268 | 2,341 |
| 강원 | 350 | 538 | 793 | 998 | 937 | 874 |
| 충북 | 267 | 436 | 617 | 583 | 577 | 603 |
| 충남 | 285 | 486 | 662 | 575 | 616 | 650 |
| 전북 | 277 | 451 | 723 | 679 | 678 | 695 |
| 전남 | 481 | 738 | 1,057 | 1,038 | 959 | 976 |
| 경북 | 488 | 713 | 968 | 943 | 985 | 1,011 |
| 경남 | 425 | 619 | 910 | 1,059 | 1,155 | 1,176 |
| 제주 | 90 | 187 | 313 | 302 | 288 | 295 |
| 대형업체 | 60 (1.2%) | 65 (0.8%) | 72 (0.6%) | 70 (0.6%) | 77 (0.6%) | 68 (0.5%) |
| 중소업체 | 5,084 (98.8%) | 7,910 (99.2%) | 11,889 (99.4%) | 12,564 (99.4%) | 12,919 (99.4%) | 12,922 (99.5%) |

주 : ()의 숫자는 전체 업체수에 대한 비율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각 연호.

한편, 2004년 말 기준으로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의 비중¹⁾은 각각 0.5%와 99.5%로 중소 건설업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기업이 9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수는 대형 건설업체가 1999년에 비해 10% 정도 증가한 68개사이며, 중소 건설업체는 150%정도 증가한 12,922개사이다. 이러한 중소 건설업체 수의 증가는 2002년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 광주, 제주 지역의 업체 수가 1999년에 비해 200%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10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수주 현황

(1) 1999 ~ 2004년의 수주 현황²⁾

2004년을 기준으로 건설업체수가 1999년에 비해 150% 정도 증가한 반면, 건설공사 수주 물량은 약 80% 정도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건설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1사 평균 수주금액은 1999년 92억 규모에서 2004년 65억원 정도로 30% 정도 감소하였다.

시공능력 순위 101위 이하인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지역별 수주 현황은 다음의 <표 II-2>와 같다. 전체적으로 1999년에 46.7% 수준이던 101위 이하 건설업체의 수주량 비율은 46.7%에서 2003년 55.5%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 다시 50.7%로 감소하였다. 시기적으로는 2002년의 수주량이 2001년에 비해 54.9% 증가한 49조 2천억원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통계를 놓고 볼 때 IMF 이후 2003년까지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은 민간 경기, 특히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2003년 경기지역과 대전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의 2003년 수주량이 1999년과 비교하여 각각 180%, 170% 정도 증가하여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4년 들어서는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같은 시기 충북, 광주, 전남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 수주금액은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1) 여기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분류인 대기업은 상시 종업원 수 300인 이상, 중기업은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소기업은 50인 미만으로 분류.

2) 여기에서는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하의 업체를 중소 건설업체로 분류하였음.

<표Ⅱ-2> 중소 건설업체 지역별 수주 추이(전체공사)

(단위: 십억원, %)

| 구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 전체 | 47,167.7 | 49,936.3 | 60,329.9 | 85,119.1 | 93,470.5 | 83,866.8 |
| 1-100위 | 25,129.8 (53.3) | 26,214.4 (52.5) | 28,533.0 (47.3) | 35,881.3 (42.1) | 41,548.4 (44.5) | 41,377.2 (49.3) |
| 101위이하 | 22,034.9 (46.7) | 23,721.9 (47.5) | 31,796.9 (52.7) | 49,237.8 (57.9) | 51,922.1 (55.5) | 42,489.6 (50.7) |
| 서울 | 3,742.6 | 4,263.8 | 5,977.2 | 9,114.5 | 10,188.6 | 7,400.4 |
| 부산 | 1,641.7 | 1,475.2 | 2,216.6 | 3,908.0 | 3,225.8 | 2,448.3 |
| 대구 | 765.4 | 667.8 | 851.7 | 1,915.4 | 1,425.2 | 1,086.1 |
| 인천 | 797.8 | 860.0 | 1,221.2 | 1,882.7 | 1,882.3 | 1,940.2 |
| 광주 | 569.7 | 757.7 | 900.1 | 1,003.0 | 1,344.1 | 905.7 |
| 대전 | 395.9 | 425.2 | 641.7 | 986.0 | 1,061.2 | 748.4 |
| 울산 | 267.9 | 307.9 | 489.9 | 728.1 | 739.0 | 629.4 |
| 경기 | 4,409.7 | 4,873.0 | 6,846.1 | 11,387.2 | 12,369.0 | 10,180.1 |
| 강원 | 1,113.5 | 1,181.1 | 1,565.2 | 2,331.6 | 2,557.9 | 2,315.7 |
| 충북 | 803.7 | 809.2 | 1,164.7 | 1,545.0 | 1,533.4 | 1,413.2 |
| 충남 | 1,092.5 | 1,103.7 | 1,473.8 | 2,014.1 | 2,400.8 | 1,897.8 |
| 전북 | 1,292.5 | 1,250.7 | 1,479.5 | 2,126.4 | 2,259.7 | 1564/ |
| 전남 | 1,652.2 | 1,979.8 | 2,109.2 | 3,101.2 | 2,894.7 | 3,298.3 |
| 경북 | 1,558.9 | 1,626.7 | 1,941.5 | 2,669.5 | 3,050.3 | 2,629.8 |
| 경남 | 1,570.7 | 1,685.3 | 2,382.1 | 3,803.7 | 3,989.7 | 3,327.3 |
| 제주 | 360.4 | 455.0 | 536.8 | 721.8 | 1,000.6 | 704.6 |

주 : ()의 숫자는 전체 수주에 대한 비율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각연호)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금액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의 <표Ⅱ-3>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9년 46.6%에서 2004년 5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개사 평균 공공공사 수주금액은 1999년 24.8억원에서 2004년 14.1억 원으로 4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 수 증가로 중소 건설업체들이 영세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의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량이 1999년 9천억 규모에서 2004년 1조 7천억원 규모로 증가함으로써 약 90% 정도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2003년에는 120% 증가한 2조원 규모), 충남 지역도 같은 시기에 50% 정도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강원 지역의 경우는 수년 동안의 수해복구 공사가 충남 지역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공공공사 물량의 증가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은 같은 시기 공공공사 수주량이 감소하였거나, 비슷한 수주량을 보이고 있어 해당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Ⅱ-3> 중소 건설업체 지역별 수주 추이(공공공사)

(단위: 십억원, %)

| 구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 전체 | 26,914.7 | 26,572.4 | 27,570.0 | 28,425.0 | 33,700.5 | 31,909.7 |
| 1-100위 | 14,381.1 (53.4) | 14,006.5 (52.7) | 13,618.0 (49.4) | 12,616.5 (44.4) | 15,339.6 (45.5) | 13,653.1 (42.8) |
| 101위이하 | 12,533.6 (46.6) | 12,565.9 (47.3) | 13,952.0 (50.6) | 15,808.5 (55.6) | 18,360.9 (54.5) | 18,256.6 (57.1) |
| 서울 | 1,023.0 | 1,136.5 | 1,342.3 | 1,198.2 | 1,295.1 | 1,484.2 |
| 부산 | 833.8 | 555.8 | 597.5 | 631.2 | 713.8 | 888.0 |
| 대구 | 412.0 | 341.9 | 318.4 | 463.7 | 353.1 | 414.0 |
| 인천 | 386.0 | 382.5 | 395.8 | 569.4 | 528.2 | 778.7 |
| 광주 | 386.2 | 253.1 | 355.9 | 298.3 | 398.2 | 368.8 |
| 대전 | 276.1 | 203.2 | 289.0 | 273.0 | 311.7 | 247.3 |
| 울산 | 163.8 | 159.3 | 189.3 | 206.0 | 233.9 | 228.3 |
| 경기 | 2,302.3 | 2,440.5 | 2,524.5 | 2,551.0 | 3,216.7 | 3,398.6 |
| 강원 | 901.4 | 1,009.9 | 1,128.1 | 1,523.3 | 1,999.1 | 1,718.0 |
| 충북 | 519.7 | 558.1 | 690.9 | 817.7 | 842.1 | 833.0 |
| 충남 | 775.2 | 718.3 | 1,004.8 | 1,068.8 | 1,311.8 | 1,163.6 |
| 전북 | 869.0 | 836.2 | 964.0 | 1,156.8 | 1,231.5 | 942.4 |
| 전남 | 1,055.1 | 1,181.3 | 1,285.6 | 1,526.0 | 1,735.6 | 1,742.2 |
| 경북 | 1,202.1 | 1,181.2 | 1,290.1 | 1,594.5 | 1,840.9 | 1,598.8 |
| 경남 | 1,160.9 | 1,230.9 | 1,304.3 | 1,717.3 | 2,003.2 | 2,123.4 |
| 제주 | 264.7 | 292.4 | 272.6 | 314.5 | 347.4 | 326.3 |

주 : ()의 숫자는 전체 수주에 대한 비율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각연호)

시공능력순위 101위 이하의 중소 건설업체의 정부공사 수주 현황을 보면 우선 전체적인 수주금액이 1999년 3조7천억원 규모에서 2004년 3조원 규모로 20%정도 감소하였으며, 점유율은 53%정도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Ⅱ-4> 중소 건설업체 지역별 수주 추이(정부공사)

(단위: 십억원, %)

| 구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 전체 | 7,666.9 | 8,175.5 | 7,384.1 | 6,978.0 | 7,851.0 | 5,686.4 |
| 1-100위 | 4,001.0 (52.2) | 4,273.9 (52.3) | 4,061.4 (55.0) | 3,718.8 (53.3) | 4,316.0 (55.0) | 2,677.9 (47.1) |
| 101위이하 | 3,665.9 (47.8) | 3,901.6 (47.7) | 3,322.7 (45.0) | 3,259.2 (46.7) | 3,835.0 (45.0) | 3,008.5 (52.9) |
| 서울 | 458.6 | 484.5 | 434.7 | 233.5 | 238.9 | 168.5 |
| 부산 | 231.4 | 95.8 | 123.6 | 104.5 | 138.4 | 185.2 |
| 대구 | 53.1 | 60.9 | 69.0 | 57.5 | 74.0 | 67.1 |
| 인천 | 79.3 | 117.1 | 80.3 | 81.4 | 85.1 | 88.8 |
| 광주 | 154.6 | 113.5 | 78.8 | 78.0 | 78.5 | 58.5 |
| 대전 | 86.4 | 133.9 | 63.0 | 67.4 | 70.6 | 48.5 |
| 울산 | 17.9 | 33.3 | 22.5 | 21.7 | 17.9 | 18.5 |
| 경기 | 727.4 | 787.3 | 642.4 | 528.0 | 708.5 | 578.0 |
| 강원 | 377.6 | 435.3 | 302.6 | 460.7 | 458.5 | 349.1 |
| 충북 | 108.6 | 139.8 | 162.2 | 130.3 | 131.6 | 127.8 |
| 충남 | 212.7 | 234.5 | 214.1 | 218.8 | 307.0 | 216.6 |
| 전북 | 172.9 | 171.3 | 193.7 | 217.8 | 266.2 | 144.1 |
| 전남 | 276.6 | 354.9 | 279.1 | 355.4 | 438.3 | 336.4 |
| 경북 | 304.3 | 356.9 | 348.8 | 349.8 | 376.1 | 301.2 |
| 경남 | 323.4 | 307.1 | 258.3 | 300.2 | 373.9 | 264.1 |
| 제주 | 81.7 | 75.7 | 50.0 | 54.7 | 72.2 | 56.1 |

주 : ()의 숫자는 전체 수주에 대한 비율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각연호)

시공능력순위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수주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 6조7천억원 규모로 66%의 점유율을 보이던 것이 2004년 11조 4천억원 규모에 78%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같은 시기에 지방자치단체 공사 수주 물량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강원지역이 160%정도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경남지역이 125%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Ⅱ-5> 중소 건설업체 지역별 수주 추이(지자체공사)

(단위: 십억원, %)

| 구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 전체 | 10,114.4 | 9,678.4 | 11,426.4 | 13,153.4 | 14,112.2 | 14,715.8 |
| 1-100위 | 3,441.8 (34.0) | 2,958.7 (30.6) | 3,248.9 (28.4) | 3,139.8 (23.9) | 2,947.7 (20.9) | 3,262.1 (22.2) |
| 101위이하 | 6,672.6 (66.0) | 6,719.7 (69.4) | 8,177.5 (71.6) | 10,013.6 (76.1) | 11,164.5 (79.1) | 11,453.7 (77.8) |
| 서울 | 363.7 | 467.7 | 631.1 | 674.9 | 744.4 | 884.0 |
| 부산 | 396.2 | 329.3 | 373.7 | 425.6 | 462.7 | 485.2 |
| 대구 | 247.9 | 194.9 | 192.8 | 233.3 | 211.5 | 250.1 |
| 인천 | 212.1 | 222.9 | 249.6 | 353.3 | 320.8 | 440.5 |
| 광주 | 158.7 | 147.5 | 215.4 | 172.1 | 216.3 | 198.4 |
| 대전 | 111.1 | 65.7 | 186.1 | 162.3 | 172.1 | 146.3 |
| 울산 | 137.7 | 122.4 | 154.8 | 166.9 | 194.8 | 181.9 |
| 경기 | 1,110.0 | 1,115.5 | 1,330.5 | 1,542.2 | 1,849.6 | 2,046.9 |
| 강원 | 419.6 | 459.9 | 699.0 | 943.3 | 1,352.1 | 1,085.6 |
| 충북 | 350.3 | 359.6 | 402.0 | 596.6 | 546.4 | 563.8 |
| 충남 | 417.1 | 413.4 | 601.8 | 683.1 | 724.8 | 693.1 |
| 전북 | 537.8 | 514.0 | 580.0 | 713.6 | 655.5 | 604.7 |
| 전남 | 595.6 | 689.2 | 747.9 | 924.9 | 965.6 | 1,048.3 |
| 경북 | 755.3 | 678.7 | 750.8 | 976.9 | 1,176.9 | 1,047.8 |
| 경남 | 692.8 | 743.8 | 854.6 | 1,199.4 | 1,344.8 | 1,555.9 |
| 제주 | 166.8 | 202.7 | 207.9 | 245.6 | 226.6 | 22.5 |

주 : ()의 숫자는 전체 수주에 대한 비율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각연호)

민간공사의 경우 시공능력순위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량이 민간공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46.8%에서 2004년 46.6%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 약 60%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3년 56.1%를 기록하여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시기적으로는 2002년 민간 수주량이 전년에 비해 약 80%이상 크게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대형 건설업체 위주로 주택사업이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대전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민간공사 수주량이 1999년에 천백억 규모이던 것이 2003년 7천5백억 규모까지 증가했다가 2004년에는 5천억 규모로 감소하여 약 350%이상 증가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 심리로 아파트 공사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광주지역·경남지역이 약 200% 정도, 경북지역이 192%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경기지역은 1999년 2조원 규모에서 2003년 9조1천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에는 6조 7천억 규모로 2003년에 비해 약 30% 정도 감소하였다.

<표Ⅱ-6> 중소 건설업체 지역별 수주 추이(민간공사)

(단위: 십억원, %)

| 구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 전체 | 19,978.5 | 23,133.8 | 32,359.9 | 56,331.4 | 59,473.7 | 51,690.5 |
| 1-100위 | 10,635.2 (53.2) | 12,064.6 (52.2) | 14,710.7 (45.5) | 23,090.2 (41.0) | 26,135.1 (43.9) | 27,577.4 (53.3) |
| 101위이하 | 9,343.3 (46.8) | 11,069.8 (47.8) | 17,649.2 (54.5) | 33,241.2 (59.0) | 33,338.6 (56.1) | 24,113.1 (46.6) |
| 서울 | 2,644.6 | 3,067.1 | 4,528.2 | 7,818.2 | 8,719.3 | 5,854.3 |
| 부산 | 807.3 | 918.5 | 1,619.3 | 3,275.6 | 2,512.0 | 1,556.4 |
| 대구 | 353.4 | 324.8 | 531.1 | 1,451.9 | 1,070.0 | 671.6 |
| 인천 | 411.6 | 472.6 | 822.3 | 1,399.1 | 1,353.1 | 1,155.7 |
| 광주 | 183.5 | 461.1 | 544.4 | 705.0 | 945.4 | 537.3 |
| 대전 | 110.8 | 172.1 | 351.7 | 705.4 | 748.8 | 500.3 |
| 울산 | 104.1 | 148.3 | 300.6 | 522.1 | 505.0 | 401.1 |
| 경기 | 2,072.5 | 2,425.4 | 4,264.6 | 8,794.8 | 9,118.8 | 6,754.1 |
| 강원 | 210.6 | 171.1 | 432.8 | 803.5 | 557.5 | 594.4 |
| 충북 | 284.0 | 250.9 | 473.6 | 727.3 | 691.2 | 579.3 |
| 충남 | 317.6 | 385.7 | 469.2 | 944.7 | 1,088.5 | 734.3 |
| 전북 | 408.5 | 413.3 | 513.0 | 963.1 | 1,022.6 | 619.4 |
| 전남 | 577.2 | 791.0 | 805.8 | 1,562.6 | 1,157.0 | 1,542.1 |
| 경북 | 353.0 | 442.9 | 651.2 | 1,074.8 | 1,209.4 | 1,031.0 |
| 경남 | 409.0 | 463.5 | 1,078.0 | 2,086.4 | 1,986.7 | 1,204.1 |
| 제주 | 95.4 | 162.0 | 264.0 | 407.1 | 653.0 | 378.1 |

주 : ()의 숫자는 전체 수주에 대한 비율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각연호)

(2) 2005년의 수주 현황

2005년 중소 건설업체의 정확한 수주 실적은 현재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이 매월 발표하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의 수주물량 지수를 통해 2005년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을 추정해보면 2005년 들어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의 <표Ⅱ-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은 2~9월까지 수주 물량 지수가 100을 초과하고 있어 전월에 비해 계속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금년 들어 10월까지의 평균 물량지수가 43.7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년 들어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은 전년에 비해 호전된 반면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 상황이 전년에 비해 악화되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금년 들어 학교공사 등의 BTL민자사업 대폭 확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대폭적인 축소, 턴카·대안입찰의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Ⅱ-7> 2005년 수주물량 CBSI조사 결과

| 구분 | | 2004년 | 2005년 | | | | | | | | | |
|------|----|-------|-------|-------|------|-------|-------|-------|-------|-------|------|------|
| |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물량지수 | | 79.0 | 50.7 | 76.4 | 68.5 | 77.3 | 80.3 | 85.0 | 72.9 | 81.4 | 62.6 | 62.2 |
| 규모별 | 대형 | 106.7 | 60.0 | 100.0 | 80.0 | 100.0 | 100.0 | 118.2 | 118.2 | 109.1 | 58.3 | 61.5 |
| | 중견 | 75.0 | 58.3 | 79.1 | 67.7 | 71.4 | 74.2 | 79.5 | 62.5 | 78.9 | 74.4 | 76.3 |
| | 중소 | 51.2 | 31.1 | 45.7 | 56.0 | 57.4 | 64.1 | 52.3 | 31.7 | 51.6 | 54.0 | 46.8 |
| 지역별 | 서울 | 87.1 | 56.9 | 93.0 | 79.4 | 88.4 | 92.7 | 99.0 | 92.7 | 94.5 | 65.6 | 69.4 |
| | 지방 | 63.5 | 39.0 | 53.9 | 52.8 | 59.7 | 62.2 | 61.6 | 49.6 | 64.2 | 67.0 | 76.4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경영 성과

중소 건설업체의 주요 경영성과의 분석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업경영분석」의 주요 경영지표를 참고하였다. 지역별 지표를 산출할 수 없는 통계상의 한계로 중소 건설업체의 주요 지표를 대형 건설업체와 비교해 분석하였다(<표Ⅱ-8>, <표Ⅱ-9> 참조).

우선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추이를 보면 1999년 -1.7%이던 매출액증가율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2002년을 제외하고는 10~20% 내외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2003년까지 누적·증가된 수주물량의 기성 증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의 건설매출액증가율은 소기업과 중기업이 평균 32.2%, 평균 8.2%의 증가율을 각각 보이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6년 평균 5.7%의 매출액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6년 평균 매출액증가율은 소기업, 대기업, 중기업 순으로 나타나 이른바, 규모별로는 중견 기업의 경영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안정성 측면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부분의 매출 증가에 따라 발생한 여유 자금으로 향후 건설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차입금 상환이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보유량을 늘린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부채비율의 감소는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당좌비율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기업의 부채비율은 1999년 134.1%에서 2004년 102.6%로 감소하였고, 대기업은 1999년 883.0%에서 2004년 155.0%로 소기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중기업은 2002년 196.6%까지 감소하였으나 2003년 다시 230.1%로 증가하였다 2004년 208.6%로 감소하였다.

수익성 측면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 -1.8%에서 2004년 5.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액경상이익률도 1999년 -11.1%에서 2004년 5.6%로 개선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99년에서 2004년까지 2000년을 제외하고는 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기업은 같은 기간 3.5%에서 6.1%로 2배정도 증가하여 중소 건설업체 모두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도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경상이익률이 1999년 각각 -3.8%, -14.6%이던 것이 2004년 5.3%와 5.9%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최근의 건설업체의 경영 기조가 과거의 수주 중심에서 수익성 위주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Ⅱ-8> 규모별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주요 지표 추이

(단위: %)

| 구분 |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 성장성 | 건설매출액증가율 | 평균 | - 1.7 | 13.2 | 13.2 | -0.2 | 21.1 | 11.7 |
| | | 소기업 | 6.7 | 105.8 | 6.1 | 40.9 | 29.9 | 3.8 |
| | | 중기업 | 4.0 | - 43.4 | 20.6 | 18.5 | 25.5 | 24.1 |
| | | 대기업 | - 6.1 | 20.0 | 14.3 | 1.0 | 13.7 | 12.6 |
| | 총자본증가율 | 평균 | - 11.0 | - 14.3 | - 4.8 | - 10.8 | 10.0 | 10.1 |
| | | 소기업 | - 20.7 | 190.0 | - 28.3 | 13.8 | 12.7 | 28.0 |
| | | 중기업 | - 16.0 | - 41.8 | 6.9 | - 1.0 | - 12.7 | 18.0 |
| | | 대기업 | - 7.8 | - 20.4 | - 1.0 | - 19.6 | 18.2 | 2.2 |
| | 자기자본증가율 | 평균 | - 32.2 | 54.4 | 16.0 | 5.5 | 17.0 | 12.8 |
| | | 소기업 | 13.0 | 144.8 | - 9.0 | 13.0 | 16.8 | 34.3 |
| | | 중기업 | 5.2 | - 8.1 | 6.4 | 18.4 | - 21.6 | 26.2 |
| | | 대기업 | - 51.7 | 67.6 | 32.9 | 1.3 | 32.0 | 1.9 |
| 안정성 | 유동비율 | 평균 | 106.0 | 116.2 | 125.4 | 131.1 | 133.7 | 136.3 |
| | | 소기업 | 166.2 | 156.9 | 231.5 | 199.6 | 207.6 | 209.4 |
| | | 중기업 | 107.0 | 118.5 | 119.5 | 128.4 | 135.0 | 132.6 |
| | | 대기업 | 101.5 | 106.4 | 112.0 | 113.7 | 114.0 | 115.9 |
| | 부채비율 | 평균 | 605.9 | 291.7 | 221.7 | 171.9 | 155.5 | 149.4 |
| | | 소기업 | 134.1 | 177.4 | 118.7 | 120.3 | 112.6 | 102.6 |
| | | 중기업 | 457.7 | 253.1 | 254.7 | 196.6 | 230.1 | 208.6 |
| | | 대기업 | 883.0 | 366.9 | 248.0 | 183.6 | 154.1 | 155.0 |
| | 자기자본비율 | 평균 | 14.2 | 25.5 | 31.1 | 36.8 | 39.1 | 40.1 |
| | | 소기업 | 42.7 | 36.1 | 45.7 | 45.4 | 47.0 | 49.4 |
| | | 중기업 | 17.9 | 28.3 | 28.2 | 33.7 | 30.3 | 32.4 |
| | | 대기업 | 10.2 | 21.4 | 28.7 | 35.3 | 39.4 | 39.2 |
|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 평균 | - 1.8 | 4.0 | 4.4 | 4.5 | 5.6 | 5.5 |
| | | 소기업 | 4.8 | 1.6 | 4.1 | 4.1 | 4.7 | 5.5 |
| | | 중기업 | 3.5 | 6.4 | 5.8 | 5.8 | 6.2 | 6.1 |
| | | 대기업 | - 3.8 | 5.2 | 4.0 | 4.1 | 5.9 | 5.3 |
| | 매출액경상이익률 | 평균 | - 11.1 | - 0.9 | 0.2 | 2.3 | 4.8 | 5.6 |
| | | 소기업 | 3.4 | 0.0 | 2.8 | 3.1 | 4.3 | 5.3 |
| | | 중기업 | - 2.8 | 0.1 | 1.5 | 4.4 | 4.6 | 5.3 |
| | | 대기업 | - 14.6 | - 2.0 | - 0.7 | 1.4 | 5.0 | 5.9 |
| | 자기자본경상이익률 | 평균 | - 72.2 | - 3.2 | 0.8 | 7.5 | 12.7 | 14.6 |
| | | 소기업 | 7.9 | 0.2 | 6.6 | 8.5 | 13.2 | 13.2 |
| | | 중기업 | - 10.7 | 0.2 | 4.8 | 12.7 | 15.1 | 17.0 |
| | | 대기업 | - 143.7 | - 6.4 | - 2.6 | 5.1 | 12.1 | 14.6 |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경영분석, 2005.

생산성 측면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율은 전체적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6%에서 16.2%로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 건설업체의 부가가치율은 감소(소기업이 같은 기간 29.8%에서 22.6%) 또는 정체(중기업이 15.4%에서 15.0%)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0.8%에서 13.6%로 크게 향상되었다.

<표Ⅱ-9> 규모별 활동성, 생산성 주요 지표 추이

(단위: %)

| 구분 |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 활동성 | 총자본회전율 | 평균 | 0.9 | 1.0 | 1.1 | 1.2 | 1.0 | 1.0 |
| | | 소기업 | 1.0 | 1.9 | 1.1 | 1.3 | 1.4 | 1.2 |
| | | 중기업 | 0.7 | 0.8 | 0.9 | 1.0 | 1.0 | 1.0 |
| | | 대기업 | 1.0 | 0.7 | 1.1 | 1.3 | 0.9 | 1.0 |
| | 자기자본회전율 | 평균 | 6.4 | 3.8 | 3.4 | 3.3 | 2.7 | 2.6 |
| | | 소기업 | 2.4 | 5.3 | 2.4 | 2.8 | 3.1 | 2.5 |
| | | 중기업 | 3.8 | 3.0 | 3.2 | 2.9 | 3.3 | 3.2 |
| | | 대기업 | 9.8 | 3.2 | 3.8 | 3.6 | 2.4 | 2.8 |
| | 자본금회전율 | 평균 | 6.9 | 6.5 | 6.3 | 6.6 | 6.3 | 6.8 |
| | | 소기업 | 2.6 | 7.1 | 3.0 | 3.6 | 4.1 | 4.0 |
| | | 중기업 | 6.1 | 7.4 | 7.0 | 8.5 | 7.5 | 9.4 |
| | | 대기업 | 8.4 | 5.8 | 8.1 | 8.2 | 7.8 | 8.6 |
| 생산성 | 부가가치율 | 평균 | 5.6 | 12.8 | 11.3 | 12.5 | 16.8 | 16.2 |
| | | 소기업 | 29.8 | 9.3 | 24.0 | 24.4 | 24.9 | 22.6 |
| | | 중기업 | 15.4 | 16.6 | 13.0 | 14.4 | 15.5 | 15.0 |
| | | 대기업 | 0.8 | 14.3 | 8.0 | 8.2 | 13.5 | 13.6 |
| | 총자본투자효율 | 평균 | 5.1 | 12.2 | 11.9 | 15.0 | 17.6 | 16.9 |
| | | 소기업 | 29.9 | 17.8 | 26.1 | 30.8 | 35.9 | 27.7 |
| | | 중기업 | 10.4 | 14.0 | 11.6 | 14.0 | 15.2 | 15.6 |
| | | 대기업 | 0.8 | 9.9 | 8.8 | 10.5 | 12.7 | 13.2 |
| | 설비투자효율 | 평균 | 22.8 | 52.1 | 51.3 | 68.0 | 87.8 | 88.6 |
| | | 소기업 | 229.3 | 93.9 | 168.8 | 330.6 | 436.3 | 235.8 |
| | | 중기업 | 53.6 | 47.6 | 40.3 | 54.9 | 74.7 | 80.5 |
| | | 대기업 | 3.2 | 43.2 | 38.0 | 42.0 | 54.1 | 60.8 |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경영분석, 2005.

4. 소결

2004년 말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9년에 비해 약 250% 정도 증가한 12,990개사이고, 이중 중소 건설업체는 1999년에 비해 150% 정도 증가한 12,922개사이다. 지역별로는 대구, 광주, 제주 지역의 업체 수의 증가가 1999년에 비해 20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100%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건설업체수가 1999년에 비해 150%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 건설공사 수주 금액은 약 100% 정도의 증가에 그쳐 건설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1사 평균 수주금액도 1999년 92억에서 2004년은 65억으로 감소하였다. 중소 건설업체의 1사 평균 수주금액은 48억에서 33억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1999년에서 2004년까지 수주 관련 통계 자료와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를 분석해보면 IMF 이후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은 2003년까지는 개선 추세를 보이다 2004년 들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금년 들어 학교공사 등의 BTL민자사업 대폭 확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대폭적인 축소, 터키·대안입찰의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 건설업체의 주요 경영성과를 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의 건설매출액증가율 추이를 보면 소기업이 6년 평균 32.2%, 중기업이 6년 평균 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은 소기업이 1999년 134.1%에서 2004년 102.6%로 감소하였고, 중기업은 2002년 196.6%까지 감소하였으나 2003년 다시 230.1%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 208.6%로 감소하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소기업은 1999년에서 2004년까지 2000년을 제외하고는 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기업은 같은 기간 3.5%에서 6.1%로 2배정도 증가하여 중소 건설업체 모두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성 측면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율은 중소 건설업체가 감소(소기업이 같은 기간 29.8%에서 22.6%) 또는 정체(중기업이 15.4%에서 15.0%)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0.8%에서 13.6%로 크게 향상되었다.

제3장

중소 건설업 실태 조사

1. 실태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2005년 7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2004년 토건 시공능력순위 78~2077위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을 시공능력순위 78위부터 정한 것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조와 8조에 근거하여 대기업을 상시종업수에 300인 이상으로 구분할 경우 2004년 시공능력순위 77위까지 대기업을 분류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중소건설업체로 한정하기 위해서이다. 조사방법은 우편조사 방법을 기본으로 실시하고, 면담조사도 병행하였다. 총 조사대상 업체 중 조사에 응한 업체는 322개업체로 응답률은 16.1%였다.

(2) 조사 업체 개관

실태조사에 응한 322개 업체 중 중기업(상시종업원 수 50인이상 300인미만)은 45개 업체로 1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기업(상시종원수 50인 미만)은 264개업체로 82.0%를 차지하고 있고, 규모를 밝히지 않은 업체도 4.0%인 13개업체에 달했다.

또한 실태조사에 응한 업체의 지역별 시공능력순위별 분포는 <표Ⅲ-1>에 제시하였고, 지역별 영업연수별 분포, 자본금별 분포, 종업원수별 분포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분석 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에,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에,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Ⅲ-1> 응답업체 개관-규모, 시공능력순위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기업규모 | | | 시공능력 순위 | | | | | | | |
|-----|--------------|--------------|---------------|-------------|-------------|--------------|--------------|--------------|----------------|-----------------|-----------------|-------------|
| | | 중기업 | 소기업 | 무응답 | 78 ~ 200 | 201 ~ 400 | 401 ~ 600 | 601 ~ 800 | 801 ~ 1,000 | 1001 ~ 1,500 | 1501 ~ 2,077 | 무응답 |
| 서울 | 18 (5.6) | 4 | 13 | 1 | 2 | 2 | 4 | | | 8 | 2 | |
| 부산 | 7 (2.2) | 1 | 6 | | | 1 | 1 | 2 | | 2 | 1 | |
| 대구 | 16 (5.0) | 2 | 12 | 2 | 1 | 1 | 3 | 2 | 3 | 2 | 3 | 1 |
| 인천 | 12 (3.7) | 1 | 11 | | 1 | 3 | 1 | 2 | | 3 | 2 | |
| 광주 | 6 (1.9) | | 6 | | | 2 | | 1 | | 2 | 1 | |
| 대전 | 9 (2.8) | 2 | 7 | | 2 | 1 | | | 2 | 2 | 2 | |
| 울산 | 3 (0.9) | | 3 | | | | | | 2 | 1 | | |
| 경기 | 35 (10.9) | 6 | 28 | 1 | 3 | 8 | 2 | 4 | 5 | 7 | 5 | 1 |
| 충북 | 24 (7.5) | | 24 | | | 1 | 2 | 1 | 4 | 10 | 6 | |
| 충남 | 24 (7.5) | 6 | 16 | 2 | 3 | 3 | 4 | 4 | | 5 | 3 | 2 |
| 경북 | 45 (14.0) | 8 | 37 | | 4 | 3 | 5 | 6 | 3 | 16 | 7 | 1 |
| 경남 | 33 (10.2) | 5 | 27 | 1 | 2 | 6 | 3 | 2 | 4 | 11 | 5 | |
| 전북 | 12 (3.7) | 1 | 11 | | 1 | | | 1 | 1 | 4 | 5 | |
| 전남 | 33 (10.2) | 6 | 25 | 2 | 1 | 7 | 2 | 3 | 3 | 4 | 12 | 1 |
| 강원 | 25 (7.8) | 3 | 22 | | 1 | 2 | | 5 | 6 | 7 | 4 | |
| 제주 | 10 (3.1) | | 10 | | 1 | | 2 | 1 | | 5 | 1 | |
| 무응답 | 10 (3.1) | | 6 | 4 | | 2 | 1 | | 1 | 1 | 1 | 4 |
| 합계 | 322 (100) | 45 (14.0) | 264 (82.0) | 13 (4.0) | 22 (6.8) | 42 (13.0) | 30 (9.3) | 34 (10.6) | 34 (10.6) | 90 (28.0) | 60 (18.6) | 10 (3.1) |

2. 경영상태 및 전망

(1) 경영상태

중소 건설업체들의 현재 경영상태를 5년 전(2000년)과 1년 전(2004)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표Ⅲ-2>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IMF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에 비해서는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2> 지역별 경영상태

(단위: 개사, %)

| 구분 | 기준 | 소계 | 대폭개선 | 개선 | 변화없음 | 악화 | 대폭악화 |
|------------|--------|-----|------------------|-------------------|------------------|-------------------|-----------------|
| 전체 | 5년전과비교 | 314 | 36 (11.5) | 123 (39.2) | 51 (16.2) | 86 (27.4) | 18 (5.7) |
| | 1년전과비교 | 319 | 4 (1.3) | 75 (23.5) | 98 (30.7) | 121(37.9) | 21 (6.6) |
| 서울 | 5년전과비교 | 18 | 2(11.1) | 5 (27.8) | 2 (11.1) | 8 (44.4) | 1 (5.6) |
| | 1년전과비교 | 18 | | 3 (16.7) | 5 (27.8) | 9 (50.0) | 1 (5.6) |
| 경기 | 5년전과비교 | 35 | 4 (11.4) | 11 (31.4) | 6 (17.1) | 10 (28.6) | 4 (11.4) |
| | 1년전과비교 | 34 | 1 (2.9) | 5 (14.7) | 5 (14.7) | 20 (58.8) | 3 (8.8) |
| 인천 | 5년전과비교 | 11 | 1 (9.1) | 5 (45.5) | 3 (27.3) | 2 (18.2) | |
| | 1년전과비교 | 12 | | 2 (16.7) | 4 (33.3) | 6 (50.0) | |
| 충북 | 5년전과비교 | 23 | 2 (8.7) | 7 (30.4) | 5 (21.7) | 6 (26.1) | 3 (13.0) |
| | 1년전과비교 | 22 | 1 (4.5) | 4 (18.2) | 4 (18.2) | 13 (59.1) | |
| 충남(대전) | 5년전과비교 | 32 | 1 (3.1) | 18 (56.3) | 6 (18.8) | 6 (18.8) | 1 (3.1) |
| | 1년전과비교 | 31 | | 9 (27.8) | 14 (42.4) | 8 (24.2) | 2 (6.1) |
| 경북(대구) | 5년전과비교 | 60 | 6 (10.0) | 30 (50.0) | 4 (6.7) | 16 (26.7) | 4 (6.7) |
| | 1년전과비교 | 61 | 1 (1.6) | 17 (28.3) | 19 (31.1) | 19 (31.1) | 5 (8.2) |
| 경남(부산, 울산) | 5년전과비교 | 41 | 8 (19.5) | 13 (31.7) | 5 (12.2) | 14 (34.1) | 1 (2.4) |
| | 1년전과비교 | 42 | | 10 (23.8) | 15 (35.7) | 13 (31.0) | 4 (9.5) |
| 전북 | 5년전과비교 | 12 | 1 (8.3) | 4 (33.3) | 3 (25.0) | 4 (33.3) | |
| | 1년전과비교 | 12 | | 4 (33.3) | 3 (25.0) | 5 (41.7) | |
| 전남(광주) | 5년전과비교 | 37 | 6 (16.2) | 14 (37.8) | 9 (24.3) | 8 (21.6) | |
| | 1년전과비교 | 39 | | 10 (25.6) | 18 (46.2) | 9 (23.1) | 2 (5.1) |
| 강원 | 5년전과비교 | 25 | 2 (8.0) | 12 (48.0) | 5 (10.0) | 5 (10.0) | 1 (4.0) |
| | 1년전과비교 | 25 | 1 (4.0) | 7 (28.0) | 7 (28.0) | 10 (40.0) | |
| 제주 | 5년전과비교 | 10 | 1 (10.0) | 4 (40.0) | 1 (10.0) | 4 (40.0) | |
| | 1년전과비교 | 10 | | 3 (30.0) | 2 (20.0) | 4 (40.0) | 1 (10.0) |
| 무응답 | 5년전과비교 | 10 | 2 (20.0) | | 2 (20.0) | 3 (30.0) | 3 (30.0) |
| | 1년전과비교 | 10 | | 1 (10.0) | 1 (10.0) | 5 (50.0) | 3 (30.0) |

주 : ()는 비중임.

구체적으로 5년 전에 비해 경영상태가 ‘개선(이하 대폭 개선 포함)된 것’으로 응답한 업체가 50.7%를 차지하고 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24.8%만이 ‘개선된 것’으로 응답하여 25.9%가 감소하였다. 반면 5년 전에 비해서 ‘악화(이하 대폭 악화 포함)된 것’으로 응답한 업체가 33.1%였으나 1년 전에 비해서 ‘악화된 것’으로 응답한 업체는 44.5%로 10%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5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대전)지역으로 약 60%업체가 경영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응답하였고, 인천, 경남(부산, 울산), 강원 지역 등도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지역은 5년 전, 1년 전과 비교해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보다 악화된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1년 전과 비교한 경영상태가 악화라고 응답한 업체가 약 70%에 달하고 있어 금년 들어 경영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대전)지역은 1년 전에 비해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응답한 업체가 30%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시공능력순위별 경영상태의 변화는 <표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 경영상태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Ⅲ-3> 시공능력순위별 경영상태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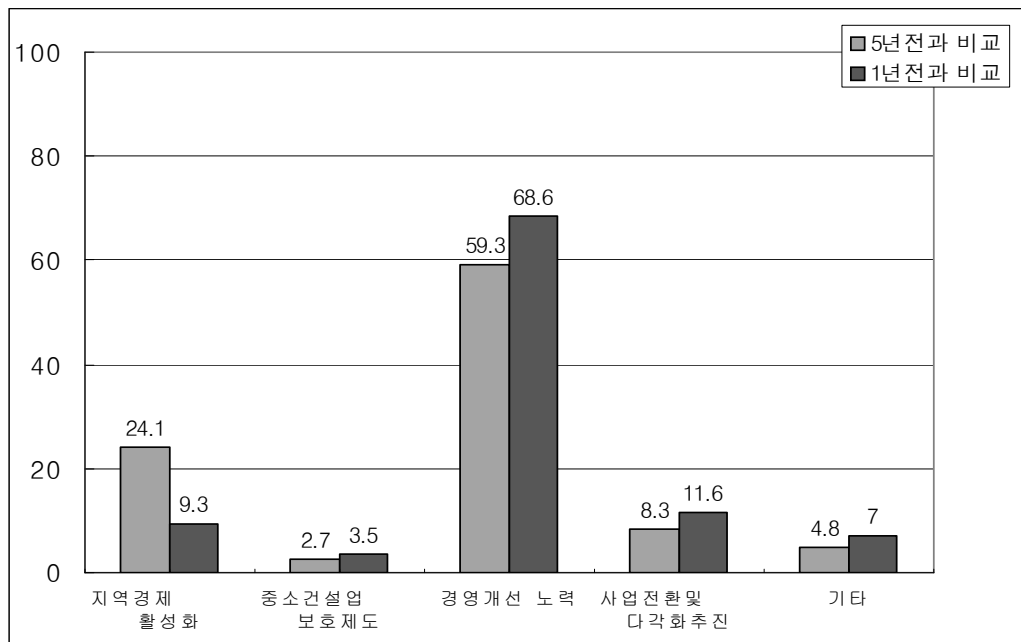
| 시공능력순위 | 기준 | 소계 | 대폭개선 | 개선 | 변화없음 | 악화 | 대폭악화 |
|-------------|--------|-----|------------------|-------------------|------------------|-------------------|-----------------|
| 전체 | 5년전과비교 | 313 | 36 (11.5) | 122 (39.0) | 51 (16.3) | 86 (27.5) | 18 (5.8) |
| | 1년전과비교 | 318 | 4 (1.3) | 74 (23.3) | 98 (30.8) | 121 (38.1) | 21 (6.6) |
| 78 ~ 200 | 5년전과비교 | 22 | 1 (4.5) | 11 (50.0) | 4 (18.2) | 4 (18.2) | 2 (9.1) |
| | 1년전과비교 | 22 | | 4 (18.2) | 11 (50.0) | 6 (27.3) | 1 (4.5) |
| 201 ~ 400 | 5년전과비교 | 40 | 4 (10.0) | 15 (37.5) | 6 (15.0) | 12 (30.0) | 3 (7.5) |
| | 1년전과비교 | 42 | | 11 (26.2) | 11 (26.2) | 16 (38.1) | 4 (9.5) |
| 401 ~ 600 | 5년전과비교 | 30 | 9 (30.0) | 11 (36.7) | 4 (13.3) | 5 (16.7) | 1 (3.3) |
| | 1년전과비교 | 30 | | 12 (40.0) | 5 (16.7) | 11 (36.7) | 2 (6.7) |
| 601 ~ 800 | 5년전과비교 | 34 | 1 (2.9) | 15 (44.1) | 6 (17.6) | 9 (26.5) | 3 (8.8) |
| | 1년전과비교 | 35 | 1 (2.9) | 7 (20.0) | 13 (37.1) | 12 (34.3) | 2 (5.7) |
| 801 ~ 1000 | 5년전과비교 | 32 | 6 (18.8) | 12 (37.5) | 5 (15.6) | 8 (25.0) | 1 (3.1) |
| | 1년전과비교 | 31 | | 8 (25.8) | 10 (32.3) | 11 (35.5) | 2 (6.5) |
| 1001 ~ 1500 | 5년전과비교 | 88 | 12 (13.6) | 34 (38.6) | 13 (14.8) | 24 (27.3) | 5 (5.7) |
| | 1년전과비교 | 89 | 2 (2.3) | 23 (25.8) | 20 (22.5) | 42 (47.7) | 2 (2.3) |
| 1501 ~ 2077 | 5년전과비교 | 58 | 1 (1.7) | 20 (34.5) | 13 (22.4) | 22 (37.9) | 2 (3.5) |
| | 1년전과비교 | 60 | 1 (1.7) | 9 (15.0) | 24 (40.0) | 19 (31.7) | 7 (11.7) |
| 무응답 | 5년전과비교 | 9 | 2 (22.2) | 4 (44.4) | | 2 (22.2) | 1 (11.1) |
| | 1년전과비교 | 9 | | 1 (11.1) | 4 (44.4) | 3 (33.3) | 1 (11.1) |

주 : ()는 비중임.

다만 시공능력순위 401~600위 업체들이 5년 전과 비교해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6.6%에 달하였으나, 1,501~2,077위 업체들이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2%로 가장 적게 나타나 시공능력순위가 낮을수록 경영 상태는 나쁜 것으로 보인다.

<그림Ⅲ-1> 경영상태 개선 이유

(단위: 개사, %)



5년·1년 전과 비교하여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설업체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응답한 업체가 59.3%(5년 전과 비교), 68.6%(1년 전과 비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에 의해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5년 전과 비교한 결과보다 1년 전과 비교한 결과가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려운 시장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소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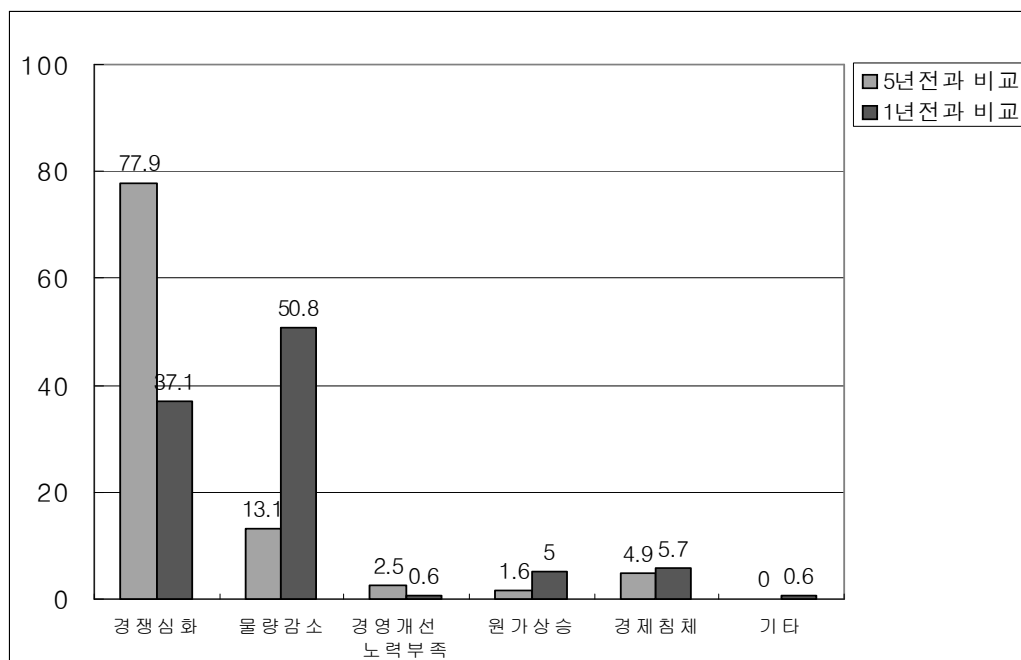
다음으로 경영상태 개선이 이루어진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24.1%, 9.3%)’, ‘중점사업전환 및 다각화 추진(8.3%, 11.6%)’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을 위한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2.7%, 3.5%에 그쳤다.

지역별(지역별 상세한 조사 결과는 부록을 참조)로 보면 강원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경우 5년 전과 비교하여 경영 상태가 개선된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응답한 경우가 45.5%로 나타나 '자율적 경영 개선 노력의 결과'로 응답한 경우(18.2%)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전남(광주) 지역의 경우도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 경영 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38.1%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5년·1년 전 모두 전체 응답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Ⅲ-2> 경영상태 악화 이유

(단위 : 개사, %)



5년·1년 전과 비교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5년 전과 비교해서는 '경쟁심화(77.9%)'가,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물량감소(37.1%)'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또는 일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인해 증가했던 상황이 최근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경북(대구), 경남(부산, 울산), 강원 등 지역의 경우는 1년 전과 비교해서 경영 상태가 악화된 이유가 ‘물량감소’보다는 여전히 ‘경쟁의 심화’로 응답한 경우가 높게 조사되었다.

(2) 경영성과

1) 매출액

4년(2000년)·1년(2003년) 전과 비교³⁾한 2004년의 매출액 변화를 조사할 결과는 4년 전과 비교하여 ‘11%이상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62.1%로 나타나 ‘11%이상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인 22.3%를 크게 초과하여 중소 건설업체 전반적으로 4년 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매출액이 ‘11%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32.6%로 4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며, ‘11%이상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43.4%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작년 또는 금년을 기점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전체 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인천 지역이 4년 전과 비교해서 ‘11%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지역이 41.7%로 조사되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경영상태의 평가와 달리 매출액,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등은 2005년의 통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유로 1년전(2003년)과 4년전(2000년)과 2004년을 비교하였음.

<표Ⅲ-4> 매출액의 변화

(단위: 개사, %)

| 구분 | 기준 | 소계 | 51%이상 증가 | 21~50% 증가 | 11~20% 증가 | ±10% | 11~20% 감소 | 21~50% 감소 | 51%이상 감소 |
|------------|--------|-----|-------------|---------------|--------------|----------|--------------|--------------|-------------|
| 전체 | 4년전과비교 | 309 | 95(30.7) | 54(17.5)) | 43(13.9) | 48(15.5) | 13(4.2) | 29(9.4) | 27(8.7) |
| | 1년전과비교 | 313 | 26(8.3) | 40(12.8)) | 36(11.5) | 75(24.0) | 42(13.4) | 58(18.5) | 36(11.5) |
| 서울 | 4년전과비교 | 18 | 6 | 4 | 2 | 4 | 1 | | 1 |
| | 1년전과비교 | 18 | | 5 | 2 | 7 | 2 | 1 | 1 |
| 경기 | 4년전과비교 | 35 | 14 | 3 | 5 | 3 | 2 | 6 | 2 |
| | 1년전과비교 | 35 | 3 | 6 | 2 | 8 | 5 | 7 | 4 |
| 인천 | 4년전과비교 | 11 | 5 | 3 | 1 | 2 | | | |
| | 1년전과비교 | 12 | | | 1 | 3 | 3 | 3 | 2 |
| 충북 | 4년전과비교 | 22 | 6 | 2 | 2 | 4 | 1 | 2 | 5 |
| | 1년전과비교 | 22 | 3 | 1 | 2 | 2 | 3 | 9 | 2 |
| 충남(대전) | 4년전과비교 | 32 | 11 | 5 | 4 | 6 | | 4 | 2 |
| | 1년전과비교 | 32 | 2 | 6 | 5 | 9 | 4 | 4 | 2 |
| 경북(대구) | 4년전과비교 | 60 | 16 | 12 | 11 | 8 | 2 | 5 | 6 |
| | 1년전과비교 | 60 | 5 | 7 | 11 | 13 | 7 | 10 | 7 |
| 경남(부산, 울산) | 4년전과비교 | 39 | 14 | 5 | 6 | 9 | 1 | 1 | 3 |
| | 1년전과비교 | 40 | 4 | 6 | 3 | 12 | 7 | 5 | 3 |
| 전북 | 4년전과비교 | 12 | 3 | 1 | 1 | 1 | 2 | 2 | 2 |
| | 1년전과비교 | 12 | 1 | 2 | | 1 | 1 | 4 | 3 |
| 전남(광주) | 4년전과비교 | 37 | 8 | 11 | 4 | | 7 | 3 | 4 |
| | 1년전과비교 | 38 | 5 | 2 | 3 | 12 | 6 | 4 | 6 |
| 강원 | 4년전과비교 | 24 | 9 | 4 | 5 | 3 | | 2 | 1 |
| | 1년전과비교 | 24 | 1 | 1 | 5 | 5 | 3 | 7 | 2 |
| 제주 | 4년전과비교 | 10 | 1 | 3 | 1 | | 2 | 3 | |
| | 1년전과비교 | 10 | 2 | 1 | 1 | 1 | 1 | 1 | 3 |
| 무응답 | 4년전과비교 | 9 | 2 | 1 | 1 | 1 | 2 | 1 | 1 |
| | 1년전과비교 | 10 | | 3 | 1 | 2 | | 3 | 1 |

주 : ()는 비중임.

2) 경상이익률

중소 건설업체의 수익성 측면을 나타내는 경상이익률의 변화를 보면 4년 전(2000년)과 비교하여 ‘1%이상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5.4%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1%

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31.5%로 조사되었다. 반면 4년 전과 비교하여 경상이익률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4.4%에 불과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여 경상이익률이 '1%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46.8%로 4년 전과 비교한 경우보다 20% 정도 감소하였으며, '1~5% 범위 내에서 경상이익률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2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조사 결과는 전체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Ⅲ-5> 경상이익률의 변화

(단위: 개사, %)

| 구분 | 기준 | 소계 | 11%이상 증가 | 6~10% 증가 | 1~5% 증가 | 변화없음 | 1~5% 감소 | 6~10% 감소 | 11%이상 감소 |
|------------|--------|-----|-------------|-------------|------------|----------|------------|-------------|-------------|
| 전체 | 4년전과비교 | 283 | 89(31.5) | 34(12.0) | 62(21.9) | 29(10.2) | 24(8.5) | 18(6.4) | 27(9.5) |
| | 1년전과비교 | 291 | 45(15.5) | 23(7.9) | 68(23.4) | 54(18.6) | 46(15.8) | 15(5.2) | 46(15.8) |
| 서울 | 4년전과비교 | 17 | 8 | 2 | 2 | | 3 | 2 | |
| | 1년전과비교 | 17 | 6 | 3 | 2 | | 5 | 1 | |
| 경기 | 4년전과비교 | 27 | 10 | 2 | 6 | 3 | 1 | 3 | 2 |
| | 1년전과비교 | 29 | 3 | 4 | 5 | 5 | 6 | | 6 |
| 인천 | 4년전과비교 | 10 | 3 | 1 | 3 | 1 | | | 2 |
| | 1년전과비교 | 11 | 2 | | 1 | 2 | 3 | 1 | 2 |
| 충북 | 4년전과비교 | 24 | 9 | 1 | 5 | 2 | 1 | 2 | 4 |
| | 1년전과비교 | 24 | 6 | 1 | 3 | 3 | 5 | 2 | 4 |
| 충남(대전) | 4년전과비교 | 30 | 10 | 2 | 6 | 5 | 3 | 2 | 2 |
| | 1년전과비교 | 31 | 6 | 2 | 6 | 7 | 6 | 1 | 3 |
| 경북(대구) | 4년전과비교 | 58 | 16 | 9 | 16 | 4 | 3 | 4 | 6 |
| | 1년전과비교 | 58 | 7 | 4 | 15 | 15 | 6 | 6 | 5 |
| 경남(부산, 울산) | 4년전과비교 | 36 | 8 | 9 | 6 | 6 | 2 | | 5 |
| | 1년전과비교 | 38 | 3 | 4 | 11 | 9 | 6 | | 5 |
| 전북 | 4년전과비교 | 11 | 4 | 1 | 2 | 1 | 3 | | |
| | 1년전과비교 | 11 | 3 | | 3 | 3 | 1 | | 1 |
| 전남(광주) | 4년전과비교 | 32 | 12 | 2 | 7 | 4 | 4 | 1 | 2 |
| | 1년전과비교 | 33 | 6 | 2 | 8 | 8 | 5 | 1 | 3 |
| 강원 | 4년전과비교 | 21 | 5 | 4 | 3 | 2 | 3 | 2 | 2 |
| | 1년전과비교 | 21 | | 3 | 7 | 2 | 2 | 2 | 5 |
| 제주 | 4년전과비교 | 9 | 4 | | 3 | 1 | | 1 | |
| | 1년전과비교 | 9 | 3 | | 4 | | 1 | | 1 |
| 무응답 | 4년전과비교 | 8 | | 1 | 3 | | 1 | 1 | 2 |
| | 1년전과비교 | 9 | | | 3 | | | 1 | 5 |

주 : ()는 비중임.

3) 부채비율

중소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의 변화를 보면 4년 전과 비교하여 부채비율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42.9%로,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인 32.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1년 전과 비교하여 부채비율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0.9%와 30.4%로 조사되어 4년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Ⅲ-6> 부채비율의 변화

(단위: 개사, %)

| 구분 | 기준 | 소계 | 51%이상 증가 | 31~50% 증가 | 11~3% 증가 | 1~10%증 가 | 변화없음 | 1~10% 감소 | 11~30%감 소 | 31~50% 감소 | 51%이상 감소 |
|------------|--------|-----|-------------|--------------|-------------|-------------|----------|-------------|--------------|--------------|-------------|
| 전체 | 4년전과비교 | 287 | 24(8.4) | 12(4.2) | 27(9.4) | 31(10.8) | 70(24.4) | 47(16.4) | 29(10.1) | 18(6.3) | 29(10.1) |
| | 1년전과비교 | 296 | 19(6.4) | 10(3.4) | 24(8.1) | 37(12.5) | 85(28.7) | 50(16.9) | 40(13.5) | 16(5.4) | 15(5.1) |
| 서울 | 4년전과비교 | 17 | 2 | 2 | 2 | 2 | 2 | | 2 | 1 | 4 |
| | 1년전과비교 | 17 | 2 | | 3 | 2 | 2 | 2 | 1 | 3 | 2 |
| 경기 | 4년전과비교 | 28 | 2 | 1 | 1 | | 8 | 3 | 5 | 3 | 5 |
| | 1년전과비교 | 30 | 3 | 1 | 2 | 3 | 7 | 5 | 5 | 2 | 2 |
| 인천 | 4년전과비교 | 10 | 1 | | 1 | 2 | 2 | 3 | | 1 | |
| | 1년전과비교 | 11 | | | 1 | 4 | 2 | 1 | 2 | | 1 |
| 충북 | 4년전과비교 | 24 | 4 | | 3 | 1 | 8 | 5 | 1 | | 2 |
| | 1년전과비교 | 24 | 3 | | 2 | 2 | 10 | 3 | 3 | 1 | |
| 충남(대전) | 4년전과비교 | 30 | 2 | 1 | 3 | 5 | 10 | 3 | 3 | 1 | 2 |
| | 1년전과비교 | 31 | 4 | | 1 | 5 | 11 | 3 | 4 | 2 | 1 |
| 경북(대구) | 4년전과비교 | 59 | 5 | 4 | 3 | 12 | 9 | 8 | 8 | 8 | 2 |
| | 1년전과비교 | 61 | 4 | 5 | 4 | 7 | 16 | 10 | 12 | 1 | 2 |
| 경남(부산, 울산) | 4년전과비교 | 36 | 3 | 2 | 4 | 2 | 9 | 5 | 4 | 1 | 6 |
| | 1년전과비교 | 38 | 3 | 1 | 5 | 1 | 12 | 10 | 5 | | 1 |
| 전북 | 4년전과비교 | 11 | | | 1 | 1 | 2 | 5 | 1 | | 1 |
| | 1년전과비교 | 11 | | | 1 | 1 | 4 | 2 | 2 | | 1 |
| 전남(광주) | 4년전과비교 | 33 | 4 | 1 | 3 | 2 | 8 | 4 | 4 | 3 | 4 |
| | 1년전과비교 | 34 | | 2 | 1 | 5 | 10 | 6 | 3 | 3 | 4 |
| 강원 | 4년전과비교 | 22 | | 1 | 3 | 2 | 5 | 8 | 1 | | 2 |
| | 1년전과비교 | 22 | | | 3 | 5 | 5 | 5 | 2 | 1 | 1 |
| 제주 | 4년전과비교 | 9 | | | 2 | 1 | 3 | 2 | | | 1 |
| | 1년전과비교 | 9 | | 1 | | | 3 | 2 | | 3 | |
| 무응답 | 4년전과비교 | 8 | 1 | | 1 | 1 | 4 | 1 | | | |
| | 1년전과비교 | 8 | | | 1 | 2 | 3 | 1 | 1 | | |

주 : ()는 비중임.

이러한 결과는 PQ, 적격심사 등에서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수주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과 자체적으로 미래의 불투명한 경영 환경에 대비하여 경영의 기초를 안정성 위주로 전개한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지역별 결과도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건설경기 전망

중소 건설업체들이 전망하는 향후 건설 경기 전망은 단기(1~2년내), 중장기(3년 이후)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단기 건설경기 전망은 ‘부정적(이하 매우 부정적 포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4.0%에 달하고 있는 반면 ‘낙관적(이하 매우 낙관적 포함)’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1%에 그치고 있다. 중장기 건설 경기 전망은 단기 전망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감소(11.2%)하였으나, 62.8%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낙관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4.3%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중소 건설업체들은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는 건설경기가 당분간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설경기의 회복은 적어도 3년 이후에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회복된다 해도 본격적인 회복으로는 전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표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 건설경기 전망이 가장 부정적인 지역은 강원(92.0%), 인천(90.9%), 경기(85.7%), 전북(81.8%) 지역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장기 건설 경기 전망은 충북(79.2%), 전북(72.7%) 등이 부정적으로 전망한 경우가 높았으며, 경남(부산·울산, 53.7%), 전남(광주, 52.6%) 지역 등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적었다.

<표Ⅲ-7> 지역별 건설경기 전망

(단위: 개사, %)

| 구분 | 기준 | 소계 | 매우 낙관적 | 낙관적 | 변화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전체 | 단기 | 311 | 1 (0.3) | 18 (5.8) | 62 (19.9) | 198 (63.7) | 32 (10.3) |
| | 중장기 | 309 | 4 (1.3) | 71 (23.0) | 40 (12.9) | 151 (48.9) | 43 (13.9) |
| 서울 | 단기 | 17 | | 3 | 5 | 9 | |
| | 중장기 | 17 | | 8 | 1 | 6 | 2 |
| 경기 | 단기 | 35 | | 2 | 3 | 26 | 4 |
| | 중장기 | 35 | | 9 | 2 | 16 | 8 |
| 인천 | 단기 | 11 | | | 1 | 9 | 1 |
| | 중장기 | 11 | | 3 | 2 | 5 | 1 |
| 충북 | 단기 | 24 | | 2 | 4 | 16 | 2 |
| | 중장기 | 24 | | 5 | | 14 | 5 |
| 충남(대전) | 단기 | 31 | | | 7 | 23 | 1 |
| | 중장기 | 31 | | 2 | 7 | 17 | 5 |
| 경북(대구) | 단기 | 60 | | 5 | 17 | 33 | 5 |
| | 중장기 | 59 | 1 | 14 | 8 | 28 | 8 |
| 경남(부산,울산) | 단기 | 41 | | 3 | 8 | 20 | 10 |
| | 중장기 | 41 | 1 | 9 | 9 | 18 | 4 |
| 전북 | 단기 | 11 | | | 2 | 6 | 3 |
| | 중장기 | 11 | | 1 | 2 | 5 | 3 |
| 전남(광주) | 단기 | 38 | 1 | 2 | 10 | 22 | 3 |
| | 중장기 | 38 | 2 | 13 | 3 | 16 | 4 |
| 강원 | 단기 | 25 | | 1 | 1 | 23 | |
| | 중장기 | 24 | | 5 | 3 | 13 | 3 |
| 제주 | 단기 | 9 | | | 4 | 5 | |
| | 중장기 | 9 | | 2 | 2 | 5 | |
| 무응답 | 단기 | 9 | | | | 6 | 3 |
| | 중장기 | 9 | | | 1 | 8 | |

주 : ()는 비중임.

시공능력순위별로 향후 건설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57.1~82.3%),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그룹은 단기적으로는 시공능력순위 601~800위 업체들이 부정적인 전망이 82.3%로 가장 높았으며, 비교적 상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78~200위 업체들이 57.1%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Ⅲ-8> 시공능력순위별 건설경기 전망

(단위: 개사, %)

| 시공능력순위 | 기준 | 소계 | 매우 낙관적 | 낙관적 | 변화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전체 | 단기 | 310 | 1 (0.3) | 18 (5.8) | 62 (20.0) | 197 (63.5) | 32 (10.3) |
| | 중장기 | 308 | 4 (1.3) | 71 (23.1) | 40 (13.0) | 150 (48.7) | 43 (14.0) |
| 78 ~ 200 | 단기 | 21 | | 3 | 6 | 10 | 2 |
| | 중장기 | 21 | | 6 | 4 | 8 | 3 |
| 201 ~ 400 | 단기 | 41 | | 1 | 8 | 28 | 4 |
| | 중장기 | 41 | | 11 | 2 | 22 | 6 |
| 401 ~ 600 | 단기 | 30 | 1 | 3 | 5 | 19 | 2 |
| | 중장기 | 30 | 1 | 7 | 2 | 15 | 5 |
| 601 ~ 800 | 단기 | 34 | | | 6 | 24 | 4 |
| | 중장기 | 33 | | 8 | 7 | 14 | 4 |
| 801 ~ 1,000 | 단기 | 31 | | | 7 | 20 | 4 |
| | 중장기 | 31 | | 7 | 4 | 16 | 4 |
| 1,001 ~ 1,500 | 단기 | 86 | | 5 | 20 | 52 | 9 |
| | 중장기 | 86 | | 23 | 11 | 44 | 8 |
| 1,501 ~ 2,077 | 단기 | 58 | | 5 | 10 | 39 | 4 |
| | 중장기 | 57 | 3 | 8 | 8 | 26 | 12 |
| 무응답 | 단기 | 9 | | 1 | | 5 | 3 |
| | 중장기 | 9 | | 1 | 2 | 5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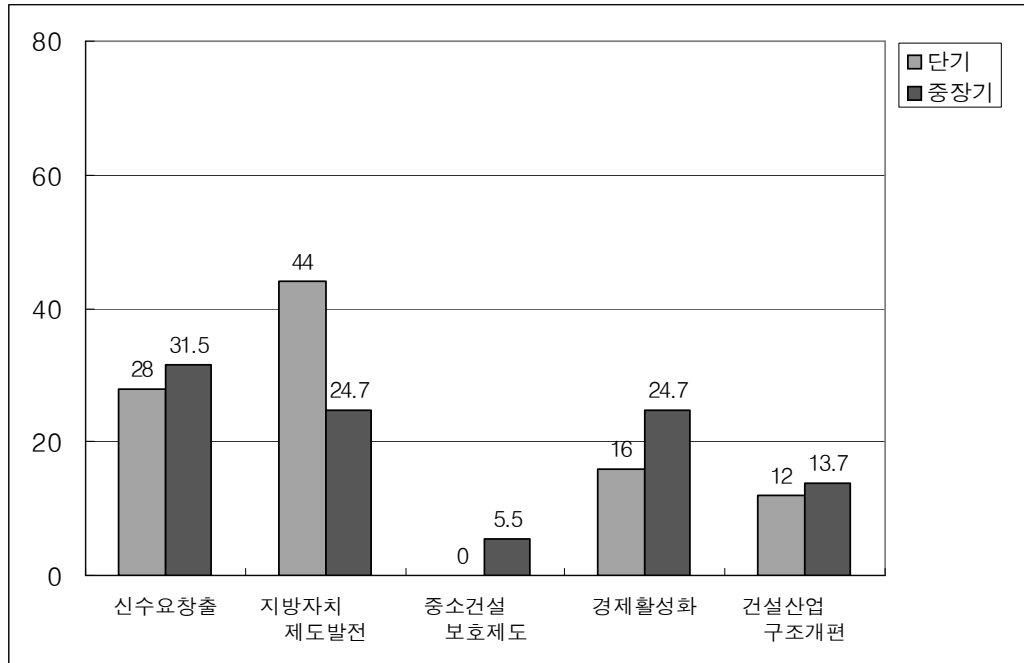
주 : ()는 비중임.

향후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 또는 ‘낙관적’으로 각각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선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그림 Ⅲ-3>과 같다. 단기적으로 향후 건설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을 통한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응답한 경우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수요 창출(28.0%)’, ‘경제 활성화(16.0%)’, ‘건설 산업 구조개편(12.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장기적으로 건설경기를 낙관하는 이유로는 ‘신수요 창출’로 인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31.5%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제도 발전’ 이 24.7%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업체 수가 부족하여 신뢰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향후 건설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업체들은 지속적인 지방화 및 「지방계약법」 등의 제정·시행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수요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Ⅲ-3> 건설경기 낙관적 전망 근거

(단위: %)



다음으로 향후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소규모공사의 축소 및 BTL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물량 축소’로 응답한 경우가 39.5%, ‘국가경제 회복 난망’으로 응답한 경우가 3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경쟁의 심화’로 인해 건설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8.9%로 조사되었다. 참고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건설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6%에 불과했다. 중장기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경우 ‘공사물량의 축소’라고 응답한 경우가 41.7%로 단기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경제회복 난망(31.6%)’, ‘경쟁의 심화(16.5%)’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단기적으로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회복의 난망이 향후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조사된 지역은 경기, 경남(부산, 울산), 전남(광주), 강원 지역 등이었다. 반면 중소 건설업체 물량 축소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조사된 지역은 충북, 충남(대전), 전북 지역 등이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전체적인 건설 물량의 축소, 제도적 변화(예, BTL 확대 등)에 의한 물량 축소 등이 반영되고, 여기에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Ⅲ-9> 건설 경기 부정적 전망 근거

(단위: 개사, %)

| 구분 | 기준 | 소계 | 경제회복 난망 | 공사물량 축소 | 경쟁심화 | 원가상승 | 부동산 경기침체 | 기타 |
|-----------|-----|-----|------------|------------|-----------|----------|-------------|---------|
| 전체 | 단기 | 233 | 78 (33.5) | 92 (39.5) | 44 (18.9) | 4 (1.7) | 13 (5.6) | 2 (0.9) |
| | 중장기 | 206 | 65 (31.6) | 86 (41.7) | 34 (16.5) | 15 (7.3) | 3 (1.5) | 3 (1.5) |
| 서울 | 단기 | 9 | 2 | 3 | | | 4 | |
| | 중장기 | 9 | 5 | 2 | | | 1 | 1 |
| 경기 | 단기 | 29 | 15 | 7 | 4 | | 3 | |
| | 중장기 | 25 | 10 | 12 | 2 | 1 | | |
| 인천 | 단기 | 8 | 1 | 4 | 2 | | | |
| | 중장기 | 6 | 3 | 1 | 1 | 1 | | |
| 충북 | 단기 | 20 | 2 | 14 | 4 | | | |
| | 중장기 | 19 | 2 | 12 | 5 | | | |
| 충남(대전) | 단기 | 25 | 7 | 10 | 6 | 1 | 1 | |
| | 중장기 | 24 | 7 | 8 | 6 | 2 | 1 | |
| 경북(대구) | 단기 | 40 | 16 | 19 | 4 | 1 | | |
| | 중장기 | 37 | 10 | 15 | 7 | 5 | | |
| 경남(부산,울산) | 단기 | 30 | 13 | 10 | 5 | 1 | 1 | |
| | 중장기 | 25 | 11 | 6 | 6 | 2 | | |
| 전북 | 단기 | 9 | | 6 | 2 | | 1 | |
| | 중장기 | 7 | 1 | 5 | 1 | | | |
| 전남(광주) | 단기 | 27 | 10 | 9 | 8 | | | |
| | 중장기 | 21 | 5 | 13 | 1 | 1 | 1 | |
| 강원 | 단기 | 22 | 9 | 5 | 7 | 1 | | |
| | 중장기 | 19 | 5 | 8 | 3 | 3 | | |
| 제주 | 단기 | 5 | 2 | 1 | 1 | | 1 | |
| | 중장기 | 5 | 4 | | 1 | | | |
| 무응답 | 단기 | 9 | 1 | 4 | 1 | | 1 | 2 |
| | 중장기 | 9 | 2 | 4 | 1 | | | 2 |

주 : ()는 비중임.

(4) 경영상태 전망

향후 자사의 경영상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단기적으로는 ‘개선(이하 대폭 개선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경우가 36.0%로 ‘악화(이하 대폭 악화 포함)될 것’으로 응답한 경우인 30.3%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Ⅲ-10> 경영상태 전망

(단위: 개사, %)

| 구분 | 기준 | 소계 | 대폭 개선 | 개선 | 변화없음 | 악화 | 대폭 악화 |
|------------|-----|-----|----------|------------|------------|-----------|----------|
| 전체 | 단기 | 317 | 5 (1.6) | 109 (34.4) | 107 (33.8) | 91 (28.7) | 5 (1.6) |
| | 중장기 | 317 | 11 (3.5) | 132 (41.6) | 68 (21.5) | 95 (30.0) | 11 (3.5) |
| 서울 | 단기 | 18 | 2 | 8 | 3 | 5 | |
| | 중장기 | 18 | 1 | 11 | 1 | 5 | |
| 경기 | 단기 | 35 | | 19 | 7 | 8 | 1 |
| | 중장기 | 35 | 3 | 17 | 5 | 9 | 1 |
| 인천 | 단기 | 12 | | 2 | 6 | 4 | |
| | 중장기 | 12 | | 6 | 2 | 4 | |
| 충북 | 단기 | 23 | | 5 | 6 | 12 | |
| | 중장기 | 23 | | 5 | 4 | 14 | |
| 충남(대전) | 단기 | 33 | 1 | 11 | 15 | 6 | |
| | 중장기 | 33 | | 9 | 10 | 11 | 3 |
| 경북(대구) | 단기 | 59 | 2 | 18 | 26 | 12 | 1 |
| | 중장기 | 59 | 2 | 25 | 16 | 15 | 1 |
| 경남(부산, 울산) | 단기 | 42 | | 14 | 9 | 18 | 1 |
| | 중장기 | 42 | 2 | 18 | 8 | 10 | 4 |
| 전북 | 단기 | 12 | | 1 | 5 | 6 | |
| | 중장기 | 12 | | 2 | 4 | 6 | |
| 전남(광주) | 단기 | 39 | | 17 | 13 | 9 | |
| | 중장기 | 39 | 2 | 21 | 8 | 8 | |
| 강원 | 단기 | 24 | | 9 | 9 | 5 | 1 |
| | 중장기 | 24 | 1 | 12 | 5 | 5 | 1 |
| 제주 | 단기 | 10 | | 2 | 6 | 2 | |
| | 중장기 | 10 | | 3 | 3 | 4 | |
| 무응답 | 단기 | 10 | | 3 | 2 | 4 | 1 |
| | 중장기 | 10 | | 3 | 2 | 4 | 1 |

주 : ()는 비중임.

중장기적으로는 경영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단기보다 다소 증가하여 45.1%로 조사되었으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도 다소 증가하여 33.5%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는 부정적인 건설경기 전망과 다르게 대체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 자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경기(**54.3%** : 25.7%), 충남(대전, **36.4%** : 18.2%), 경북(대구, **33.9%** : 22.0%), 전남(광주, **43.6%** : 23.1%), 강원(**37.5%** : 25.0%) 지역 등이다. 반면 개선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충북(21.7% : **52.2%**), 전북(0.8% : **50.0%**) 지역 등으로 조사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북 지역(16.7% : **50.0%**)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업체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업체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시공능력순위별 향후 경영상태 전망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그룹이 많으나 801~1000위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개선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Ⅲ-11> 시공능력순위별 경영상태 전망

(단위: 개사, %)

| 시공능력순위 | 기준 | 소계 | 대폭개선 | 개선 | 변화없음 | 악화 | 대폭악화 |
|---------------|-----|-----|----------|------------|------------|-----------|----------|
| 전체 | 단기 | 316 | 5 (1.6) | 109 (34.5) | 107 (33.9) | 90 (28.5) | 5 (1.6) |
| | 중장기 | 316 | 11 (3.5) | 132 (41.8) | 68 (21.5) | 94 (29.7) | 11 (3.5) |
| 77 ~ 200 | 단기 | 22 | | 6 | 12 | 4 | |
| | 중장기 | 22 | 1 | 9 | 5 | 7 | |
| 201 ~ 400 | 단기 | 41 | | 17 | 12 | 12 | |
| | 중장기 | 41 | 5 | 16 | 7 | 12 | 1 |
| 401 ~ 600 | 단기 | 30 | | 9 | 12 | 9 | |
| | 중장기 | 30 | 1 | 10 | 8 | 10 | 1 |
| 601 ~ 800 | 단기 | 35 | | 13 | 14 | 7 | 1 |
| | 중장기 | 35 | 1 | 13 | 14 | 6 | 1 |
| 801 ~ 1,000 | 단기 | 32 | | 10 | 9 | 10 | 3 |
| | 중장기 | 32 | | 14 | 6 | 10 | 2 |
| 1,001 ~ 1,500 | 단기 | 88 | 4 | 31 | 30 | 23 | |
| | 중장기 | 88 | 3 | 40 | 19 | 23 | 3 |
| 1,501 ~ 2,077 | 단기 | 59 | 1 | 20 | 17 | 20 | 1 |
| | 중장기 | 59 | | 27 | 8 | 22 | 2 |
| 무응답 | 단기 | 9 | | 3 | 1 | 5 | |
| | 중장기 | 9 | | 3 | 1 | 4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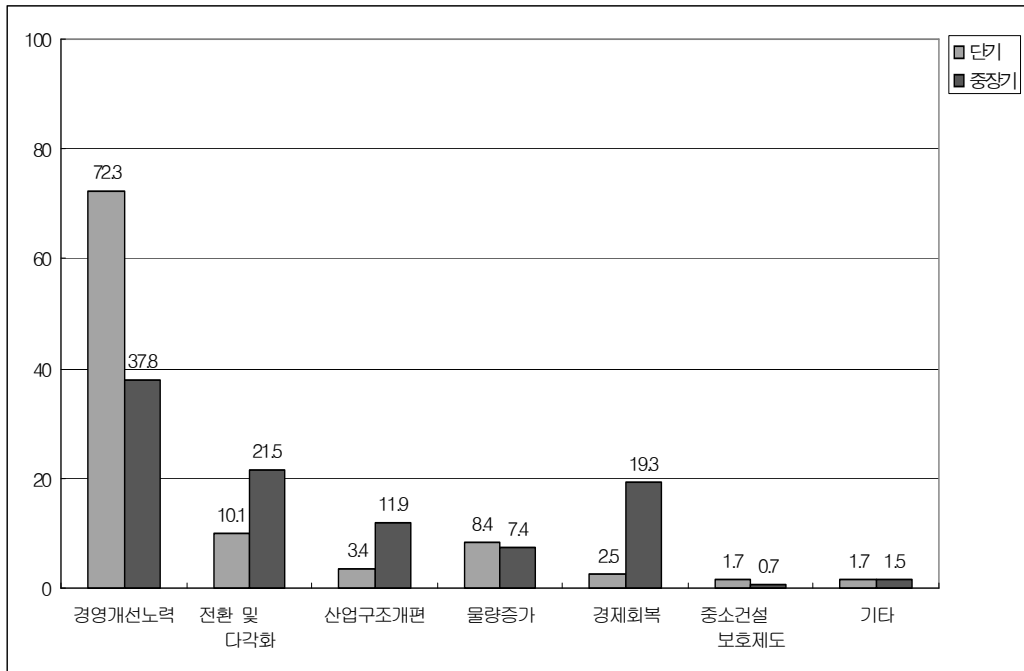
주 : ()는 비중임.

자사의 향후 경영상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단기, 중장기 모두 부정적인 건설 경기 전망에 대응하여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경영 상태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경영 상태 개선 전망의 이유로 단기적으로는 ‘경영 개선 노력’으로 응답한 경우가 72.3%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중점 사업 전환 및 사업 다각화(21.5%)’, ‘물량 증가(8.4%)’, ‘산업구조 개편(3.4%)’, ‘중소건설보호제도(1.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 경영 상태 개선을 전망하고 있는 경우가 37.8%로 단기에 비해 큰 폭(34.5%)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점 사업의 전환 및 다각화’로 인한 경영상태의 개선을 전망한 경우가 21.5%로 두 배 증가하였으며,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회복’을 이유로 경영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도 19.3%에 달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중장기적으로는 ‘중점 사업 전환 및 사업다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Ⅲ-4> 경영상태 개선 전망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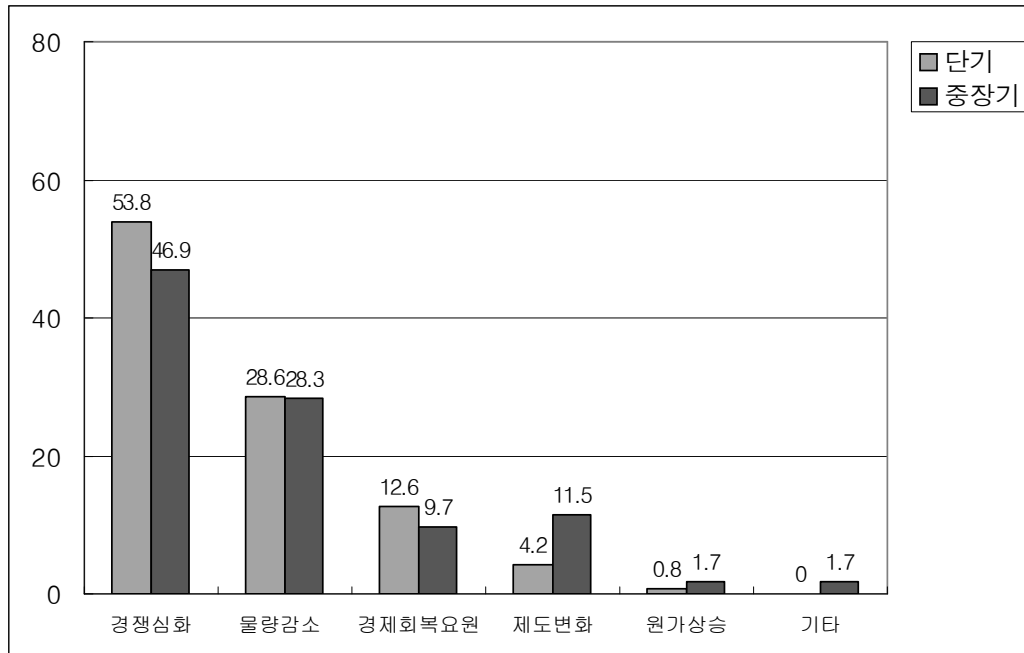


향후 자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경쟁의 심화’가 경영 상태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8%(단기), 46.9%(중장기)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물량 감소’가 28.6%(단기), 28.3%(중장기)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지역별 조사 결과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⁴⁾

4) 경쟁의 심화는 어느 정도의 물량 확보는 가능한 상황이고, 물량의 감소는 실제로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구분하였음.

<그림Ⅲ-5> 경영상태 악화 전망 이유

(단위 : %)



(5) 경영애로 요인 및 극복 과제

1) 경영애로 요인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은 예상대로 물량부족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가장 큰 경영 애로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물량 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1.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쟁의 심화’로 응답한 경우가 11.0%,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침체’가 8.2%로 조사되었으며, ‘건설 산업 규제(3.5%)’,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미비(1.9%)’, ‘원가상승(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공공 건설공사 물량이 축소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국책 사업 및 BTL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인해 중소 건설업체들이 주로 수주해온 규모의 건설공사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현재 가장 큰 경영 애로 요인으로 ‘물량 부족’을 지적한 업체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대구, 83.1%), 경남(부산·울산, 76.7%), 강원(75.0%) 지역 등이며, 시공능력 순위별 조사 결과 또한 전체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Ⅲ-12> 경영애로요인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인재확 보곤란 | 물량 부족 | 금융지 원미비 | 기술개 발미비 | 경쟁 심화 | 원가 상승 | 민원 증가 | 규제 | 경제 침체 | 기타 |
|-----------|-----|------------|---------------|------------|------------|--------------|------------|------------|-------------|-------------|----|
| 전체 | 317 | 3 (0.9) | 228 (71.9) | 6 (1.9) | 2 (0.6) | 35 (11.0) | 5 (1.6) | 1 (0.3) | 11 (3.5) | 26 (8.2) | - |
| 서울 | 18 | | 12 | 2 | | 2 | | | | 2 | |
| 경기 | 34 | | 23 | 1 | | 4 | | | 2 | 4 | |
| 인천 | 12 | | 5 | | 1 | 2 | | | 1 | 3 | |
| 충북 | 23 | 1 | 17 | | | 3 | | | | 2 | |
| 충남(대전) | 33 | 1 | 22 | 1 | | 3 | 1 | | 2 | 3 | |
| 경북(대구) | 59 | | 49 | | | 6 | 1 | | 1 | 2 | |
| 경남(부산,울산) | 43 | 1 | 33 | 1 | | 6 | | | | 2 | |
| 전북 | 12 | | 10 | | | 2 | | | | | |
| 전남(광주) | 39 | | 23 | | 1 | 4 | 2 | 1 | 3 | 5 | |
| 강원 | 24 | | 18 | 1 | | 2 | | | 1 | 2 | |
| 제주 | 10 | | 9 | | | | | | | 1 | |
| 무응답 | 10 | | 7 | | | 1 | 1 | | 1 | | |

<표Ⅲ-13> 시공능력순위별 경영애로요인

(단위: 개사, %)

| 시공능력순위 | 소계 | 인재확 보곤란 | 물량 부족 | 금융지 원미비 | 기술개 발미비 | 경쟁 심화 | 원가 상승 | 민원 증가 | 규제 | 경제 침체 | 기타 |
|---------------|-----|------------|---------------|------------|------------|--------------|------------|------------|-------------|-------------|----------|
| 전체 | 316 | 3 (0.9) | 227 (71.8) | 6 (1.9) | 2 (0.6) | 35 (11.1) | 5 (1.6) | 1 (0.3) | 11 (3.5) | 26 (8.2) | 0 (-) |
| 77 ~ 200 | 22 | | 13 | | 1 | 3 | | | 3 | 2 | |
| 201 ~ 400 | 41 | | 27 | | 1 | 5 | 1 | | 2 | 5 | |
| 401 ~ 600 | 29 | | 25 | 1 | | 1 | | | | 2 | |
| 601 ~ 800 | 36 | | 23 | 1 | | 7 | 2 | | | 3 | |
| 801 ~ 1,000 | 32 | 1 | 27 | | | 2 | | | 1 | 1 | |
| 1,001 ~ 1,500 | 88 | 2 | 71 | 2 | | 8 | | | 2 | 3 | |
| 1,501 ~ 2,077 | 59 | | 37 | 2 | | 8 | 1 | 1 | 1 | 9 | |
| 무응답 | 9 | | 4 | | | 1 | 1 | | 2 | 1 | |

2) 경영애로 극복과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은 현재의 경영 애로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건설업체 자율적인 과제로는 ‘영업력 강화’로 응답한 경우가 47.7%로 조사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다각화’가 26.0%, ‘경비 절감’이 13.2%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목할만한 것은 ‘인재 육성(3.3%)’, ‘기술 개발(2.3%)’ 등을 경영 애로 요인 극복과제로 응답한 경우가 매우 적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재 육성, 기술개발 등이 단기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없고,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능력상 적극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아니라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에 기인한 결과로 보이나, 이러한 인식은 장기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약화의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일본의 중소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 애로 극복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⁵⁾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35.5% : 51.6%), 강원지역(26.1% : 34.8%), 경남(부산·울산, 39.0% : 46.3%) 지역 등이 ‘영업력 강화’보다 ‘사업다각화·중점사업전환’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다각화·중점사업전환’도 중요한 경영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5) 복수응답이 가능하게 조사한 결과 영업력강화(71.4%), 인재 육성(59.3%), 신시장 개척(54.0%), 생산 기술 향상(54.0%), 외주비 절감(51.2%), 간접 경비 절감(인건비 제외, 44.9%), 신기술·공법 개발(35.7%), 임금 삭감(22.3%), 인력 감축(19.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中小建設産業の新分野・新市場開拓のための企業連携にするガイドライン」, 中小建設産業の連携による新市場開拓研究委員会, 2002. 7).

<표Ⅲ-14> 경영애로 극복 과제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영업력 강화 | 인재 육성 | 사업 다각화 | 경비 절감 | 기술 개발 | 인력구조 조정 | 중점사업 전환 | 기타 |
|-----------|-----|-----------|----------|-----------|----------|----------|------------|------------|----|
| 전체 | 304 | 145(47.7) | 10(3.3) | 79(26.0) | 40(13.2) | 7(2.3) | 8(2.6) | 15(4.9) | |
| 서울 | 18 | 8 | | 7 | 1 | 1 | | 1 | |
| 경기 | 31 | 11 | 1 | 12 | 3 | | | 4 | |
| 인천 | 12 | 6 | | 3 | | 2 | | 1 | |
| 충북 | 23 | 15 | | 4 | 1 | 2 | | 1 | |
| 충남(대전) | 31 | 16 | 3 | 4 | 6 | | 1 | 1 | |
| 경북(대구) | 56 | 25 | 3 | 16 | 10 | | 1 | 1 | |
| 경남(부산,울산) | 41 | 16 | 1 | 15 | 3 | 1 | 1 | 4 | |
| 전북 | 11 | 4 | | 4 | 2 | | 1 | | |
| 전남(광주) | 38 | 25 | 2 | 5 | 5 | | | 1 | |
| 강원 | 23 | 6 | | 7 | 6 | 1 | 2 | 1 | |
| 제주 | 10 | 5 | | 2 | 3 | | | | |
| 무응답 | 10 | 8 | | | | | 2 | | |

시공능력순위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영 애로 극복 과제를 ‘영업력 강화’로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78~200위 업체들의 경우 ‘영업력 강화’와 ‘사업다각화중점사업전환’으로 응답한 비율이 같았으며(38.1%), 1,001~1,500위 업체들의 경우 ‘사업다각화중점사업전환’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35.3%).

<표Ⅲ-15> 시공능력순위별 경영애로 극복 과제

(단위: 개사, %)

| 시공능력순위 | 소계 | 영업력 강화 | 인재 육성 | 사업 다각화 | 경비 절감 | 기술 개발 | 인력구조 조정 | 중점사 업전환 | 기타 |
|---------------|-----|-----------|----------|-----------|----------|----------|------------|------------|----|
| 전체 | 303 | 145(47.9) | 9(2.9) | 79(26.1) | 40(13.2) | 7(2.3) | 8(2.6) | 15(5.0) | - |
| 78 ~ 200 | 21 | 8 | 2 | 6 | 2 | 1 | | 2 | |
| 201 ~ 400 | 39 | 18 | 2 | 12 | 3 | 2 | | 2 | |
| 401 ~ 600 | 28 | 15 | 1 | 8 | 2 | | | 2 | |
| 601 ~ 800 | 34 | 19 | | 9 | 3 | | 1 | 2 | |
| 801 ~ 1,000 | 29 | 14 | 1 | 8 | 3 | 2 | | 1 | |
| 1,001 ~ 1,500 | 85 | 39 | 3 | 26 | 11 | 1 | 1 | 4 | |
| 1,501 ~ 2,077 | 58 | 28 | | 10 | 12 | 1 | 5 | 2 | |
| 무응답 | 9 | 4 | | | 4 | | 1 | | |

3)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앞에서 조사된 현재 중소 건설업체의 주요 경영 애로 요인인 건설 물량 부족과 경쟁의 심화를 극복할 정부의 정책 및 제도로는 전체 응답업체 중 51.3%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물량 확대’로 응답하였고,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제도적 물량 확대’로 응답한 경우도 22.6%에 해당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공사 물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업체의 약 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5.2%로 조사되었고, 진입장벽 강화(4.2%), 규제철폐(3.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기술 개발, 금융 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로 응답한 경우는 각각 0.6%, 1.3%로 매우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 조사 결과와 시공능력 순위별 조사 또한 전체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Ⅲ-16> 경영애로 극복 정책 및 과제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컨설팅 지원 | 지자체 물량확대 | 제도적 물량확대 | 금융 지원 | 규제 철폐 | 기술 개발 | 진입장벽 강화 | 경제 활성화 | 민원 해결 | 기타 |
|------------|-----|------------|---------------|--------------|------------|-------------|------------|-------------|--------------|----------|----|
| 전체 | 310 | 3 (1.0) | 159 (51.3) | 70 (22.6) | 4 (1.3) | 12 (3.9) | 2 (0.6) | 13 (4.2) | 47 (15.2) | - | - |
| 서울 | 16 | | 7 | 4 | | 1 | | | 4 | | |
| 경기 | 31 | | 13 | 7 | 1 | 2 | | | 8 | | |
| 인천 | 12 | 1 | 4 | 2 | | | | 1 | 4 | | |
| 충북 | 23 | | 10 | 11 | | | | 1 | 1 | | |
| 충남(대전) | 32 | | 15 | 8 | | 2 | | 3 | 4 | | |
| 경북(대구) | 58 | 1 | 31 | 12 | 1 | 1 | 2 | 2 | 8 | | |
| 경남(부산, 울산) | 43 | | 28 | 6 | 1 | | | 1 | 7 | | |
| 전북 | 12 | | 8 | 2 | | | | 1 | 1 | | |
| 전남(광주) | 39 | 1 | 22 | 9 | | 1 | | 1 | 5 | | |
| 강원 | 24 | | 10 | 6 | 1 | 2 | | 3 | 2 | | |
| 제주 | 10 | | 7 | 1 | | 1 | | | 1 | | |
| 무응답 | 10 | | 4 | 2 | | 2 | | | 2 | | |

향후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계약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차별성을 두어 공사 발주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법」을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와 금융 지원 제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중소 건설업 관련 정책·제도

(1) 중소 건설 관련 제도

여기에서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제도의 동향에 대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평가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중소 건설업체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동향으로는 「지방계약법」의 시행, 'BTL사업의 확대', '직접시공의무제도 도입', '지역제한입찰공사 확대',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유지', '지역업체 가산제도', '조달청 등급별 입찰제도', '턴키·대안공사 확대' 등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제도에 대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Ⅲ-20>과 같다. 조사 대상 중 현재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는 '지역업체 가산점 부과 제도'이며, 다음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제한입찰공사 확대', 「지방계약법」의 제정·시행, '조달청 등급별 입찰제도'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는 'BTL사업의 확대', '턴키·대안공사의 확대' 등으로 조사되었다. 각 정책·제도별 조사 결과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표Ⅲ-17> 중소 건설업 관련 정책·제도 평가

| 구분 | 지방 계약법 | BTL확대 | 직접시공 의무제도 | 지역제한 입찰확대 | 지역의무 공동도급 | 지역업체 가산점 | 조달청등 급입찰 | 턴키· 대안확대 |
|------------|------------|------------|--------------|--------------|--------------|-------------|-------------|-------------|
| 전체 | 2.3 | 4.2 | 2.7 | 2.0 | 1.9 | 1.8 | 2.3 | 3.5 |
| 서울 | 2.6 | 4.0 | 2.4 | 2.9 | 2.9 | 2.4 | 2.7 | 3.7 |
| 경기 | 2.4 | 4.5 | 2.9 | 1.9 | 1.9 | 1.9 | 2.4 | 3.7 |
| 인천 | 2.2 | 4.6 | 3.1 | 1.8 | 1.9 | 1.6 | 2.1 | 3.4 |
| 충북 | 2.1 | 4.6 | 3.2 | 2.6 | 2.2 | 2.1 | 2.7 | 4.4 |
| 충남(대전) | 2.2 | 4.4 | 2.9 | 1.9 | 1.7 | 1.8 | 2.3 | 3.9 |
| 경북(대구) | 2.4 | 4.3 | 2.8 | 1.9 | 2.1 | 2.0 | 2.5 | 3.7 |
| 경남(부산, 울산) | 2.4 | 4.1 | 2.8 | 1.9 | 1.8 | 1.7 | 2.3 | 3.3 |
| 전북 | 2.4 | 4.4 | 3.0 | 2.7 | 2.0 | 2.0 | 2.8 | 3.9 |
| 전남(광주) | 2.2 | 3.9 | 2.9 | 2.5 | 1.8 | 2.3 | 2.7 | 4.0 |
| 강원 | 2.2 | 4.0 | 2.6 | 1.7 | 1.8 | 2.0 | 2.1 | 3.3 |
| 제주 | 2.6 | 3.7 | 2.6 | 1.3 | 2.0 | 1.4 | 2.3 | 3.3 |
| 무응답 | 2.5 | 4.4 | 3.1 | 1.6 | 2.0 | 1.9 | 2.5 | 3.3 |

주 : 위의 수치는 매우긍정적(1), 긍정적(2), 영향없음(3), 부정적(4), 매우 부정적(5)으로 조사하여 평균을 구한 것임.

1) 지방계약법 제정·시행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이 한창인 「지방계약법」의 제정·시행에 대해서 중소 건설업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계약법」의 제정·시행이 중소 건설업체에 ‘긍정적(이하 매우 긍정적 포함)’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경우가 응답업체의 63.6%로, ‘부정적(이하 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예상하고 있는 경우인 4.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81.8%), 충북(73.9%), 충남(대전, 72.7%), 강원(70.8%) 지역 등이 높은 비율의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전남(광주, 41.6%) 지역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표Ⅲ-18> 지방계약법 제정·시행에 대한 평가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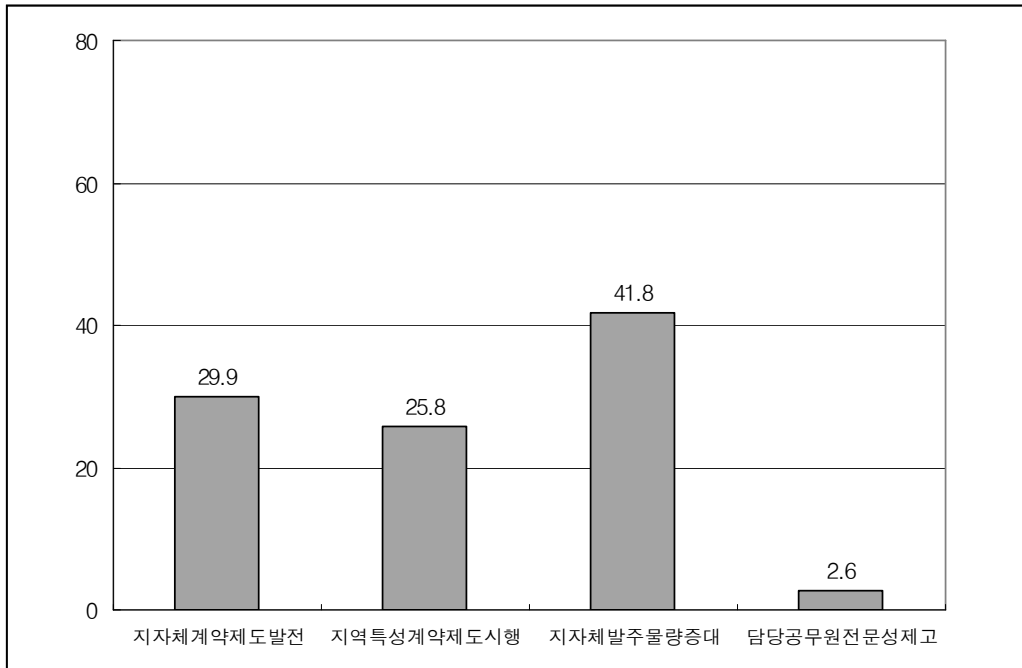
| 구분 | 소계 | 매우긍정적 | 긍정적 | 영향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전체 | 308 | 20 (6.5) | 176 (57.1) | 99 (32.1) | 13 (4.2) | - |

이와 같이 「지방계약법」 제정·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지방계약법」의 제정·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발주 물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41.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발전(29.9%)’, ‘지역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시행(25.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이유들은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물량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요인들로 판단된다.

지역적으로는 전체 결과와 비슷한 조사 결과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 지역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발전(50.0%)’이 ‘지방자치단체 발주 물량 증가(31.3%)’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Ⅲ-6> 지방계약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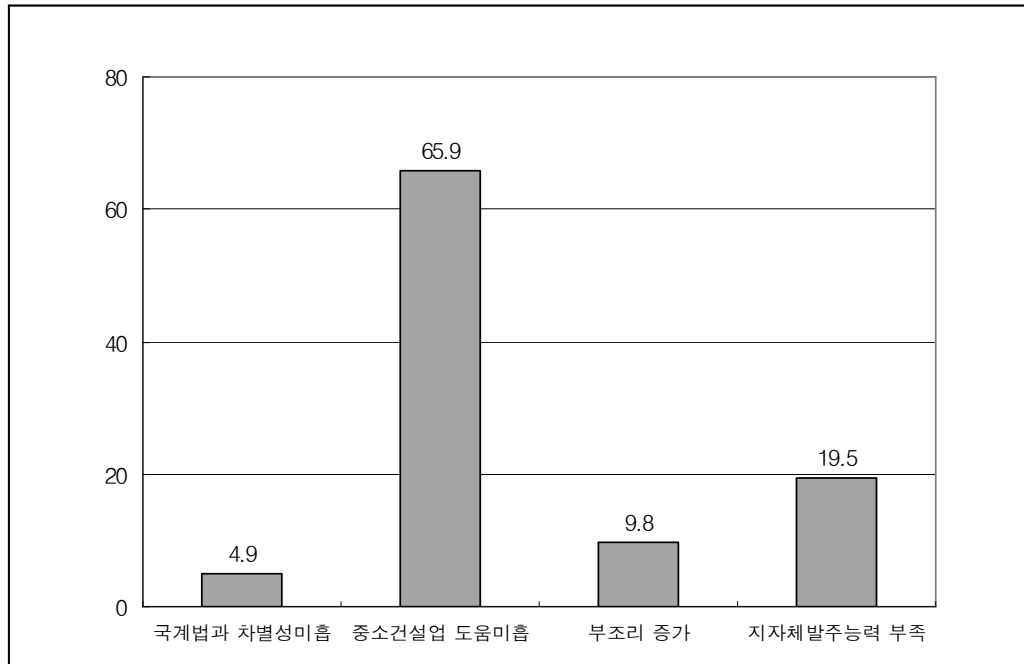


반면 「지방계약법」 제정·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중인 「지방계약법」의 내용이 ‘중소 건설업체에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능력’이 부족하여 중소 건설업체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19.5%, ‘국가계약법과 차별성 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경우가 4.9%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앞에서 조사된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해 중소 건설업체 물량 확보 결과로 이어지는 정책·제도의 필요성이 높게 조사된 결과를 놓고 볼 때 향후 「지방계약법」의 시행을 통해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그림Ⅲ-7> 지방계약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

(단위: %)



2) BTL 사업 확대

최근 들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에 대한 BTL방식의 민자사업 확대는 예상대로 중소 건설업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BTL사업의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약 80%에 달하고 있는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7.2%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의 15.4%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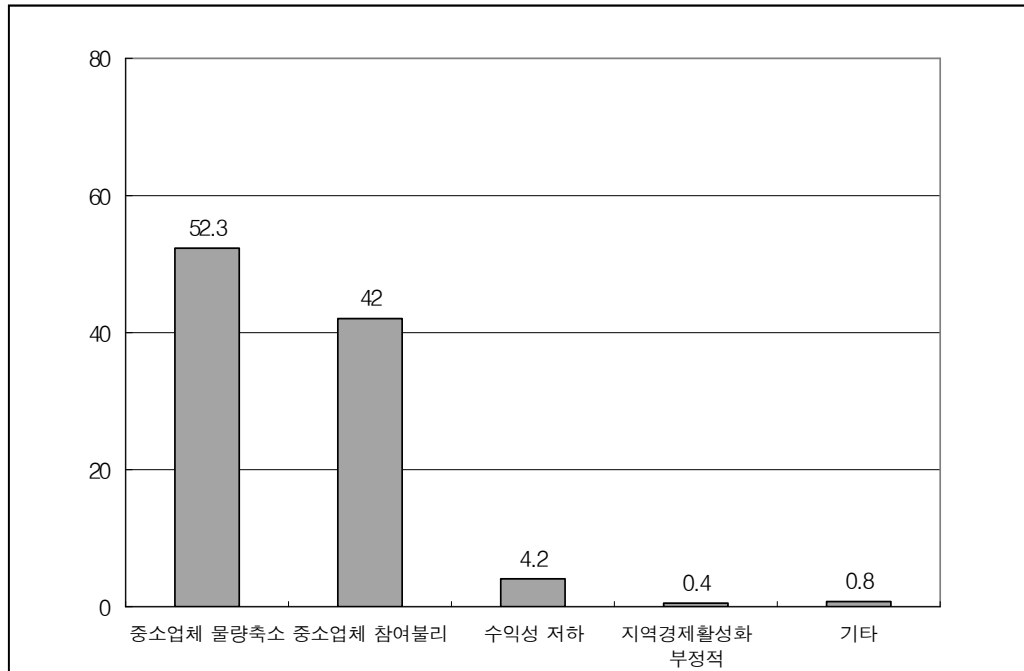
<표Ⅲ-19> BTL사업 확대에 대한 평가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매우긍정적 | 긍정적 | 영향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전체 | 309 | 3 (1.0) | 19 (6.2) | 34 (11.0) | 92 (29.8) | 151 (48.9) |

<그림Ⅲ-8> BTL 사업 확대 부정적 평가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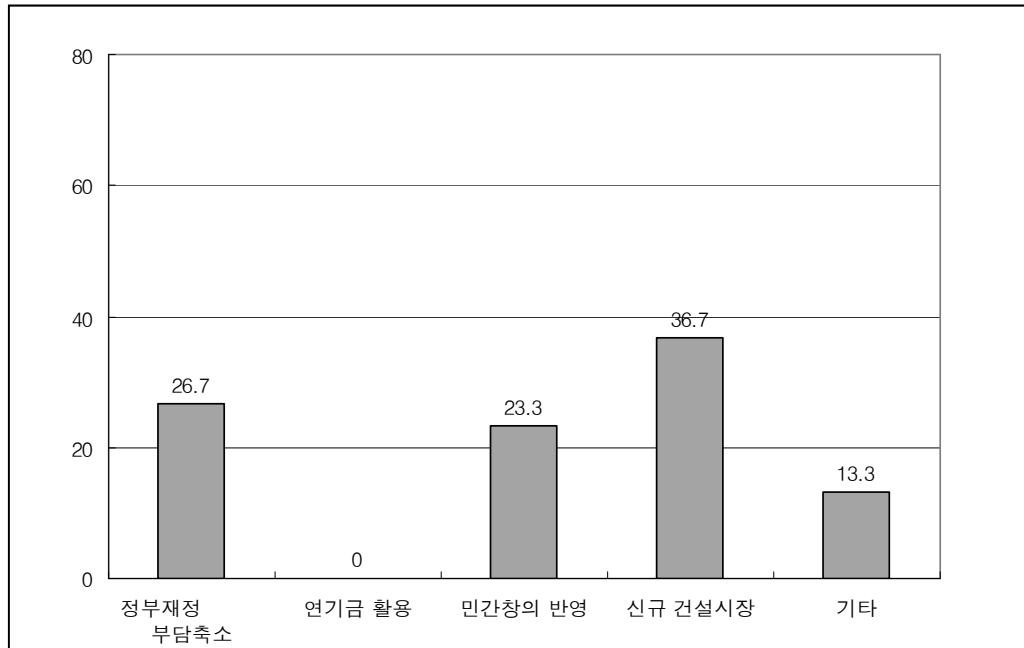


BTL 방식의 민자사업 확대가 중소 건설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위의 <그림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 건설업체의 물량 축소’라고 응답한 경우가 52.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중소 건설업체 참여가 불리’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2.0%로 조사되었다. ‘수익성 저하’로 응답한 경우도 4.2%로 나타났다. 이는 BTL 민자사업 자체가 중소 건설업체들보다는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데 유리한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놓고 볼때 정부는 BTL 방식의 발주 확대를 검토함에 있어 중소 건설업체의 물량 축소 부분을 고려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조사 결과와 시공능력순위별 조사 결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BTL 방식의 민자 사업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규 건설시장의 창출(36.7%)’, ‘정부 재정 부담 축소(26.7%)’, ‘민간 창의 반영(23.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Ⅲ-9> BTL 사업 확대 긍정적 평가 이유

(단위: %)



3)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내년부터 3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원도급업자가 도급 공사의 30% 이상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해서는 ‘중소 건설업체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9.2%에 달했으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7.6%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13.3%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시행되어도 중소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다소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표Ⅲ-20>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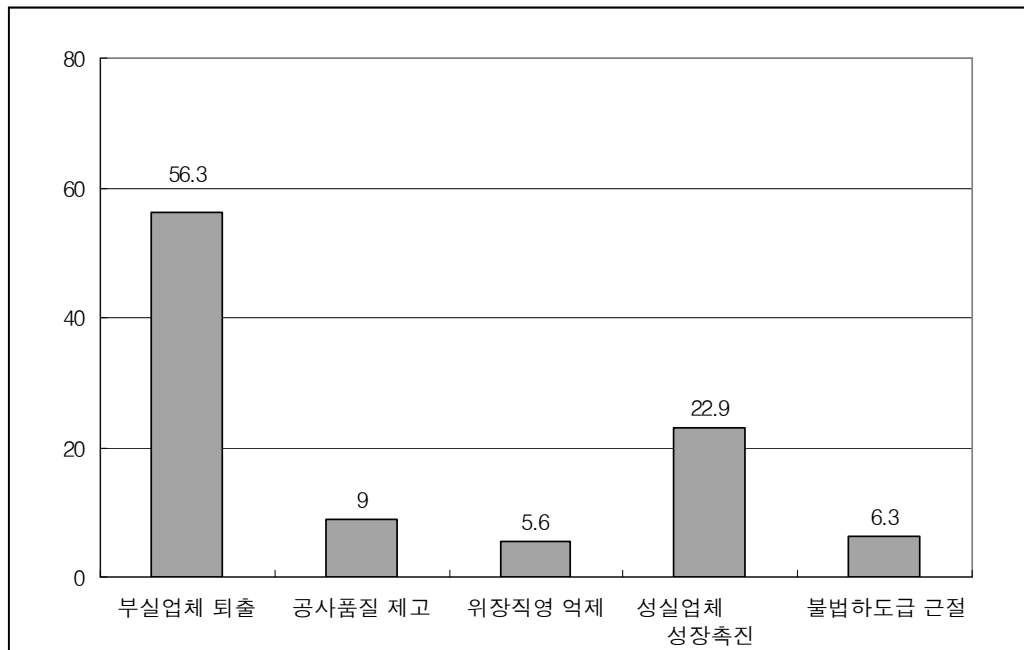
| 구분 | 소계 | 매우긍정적 | 긍정적 | 영향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전체 | 309 | 8 (2.6) | 108 (35.0) | 152 (49.2) | 34 (11.0) | 7 (2.3) |
| 서울 | 16 | 1 | 8 | 7 | | |
| 경기 | 33 | | 12 | 13 | 7 | 1 |
| 인천 | 11 | | 3 | 5 | 2 | 1 |
| 충북 | 23 | 2 | 9 | 8 | 2 | 2 |
| 충남(대전) | 33 | | 10 | 17 | 5 | 1 |
| 경북(대구) | 58 | 1 | 20 | 32 | 5 | |
| 경남(부산,울산) | 42 | 2 | 15 | 17 | 6 | 2 |
| 전북 | 11 | | 4 | 7 | | |
| 전남(광주) | 38 | 1 | 12 | 24 | 1 | |
| 강원 | 25 | 1 | 11 | 11 | 2 | |
| 제주 | 9 | | 3 | 4 | 2 | |
| 무응답 | 10 | | 1 | 7 | 2 | |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응답한 경우보다 높게 조사된 지역은 강원(48.0%), 충북(43.5%) 지역 등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유는 동 제도의 시행으로 실제 시공은 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기는 ‘부실업체가 퇴출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6.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건설시장에서 성실한 업체의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2.9%, ‘건설공사 품질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9.0% 등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시공능력순위별 조사 결과 또한 전체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림Ⅲ-10>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긍정적 평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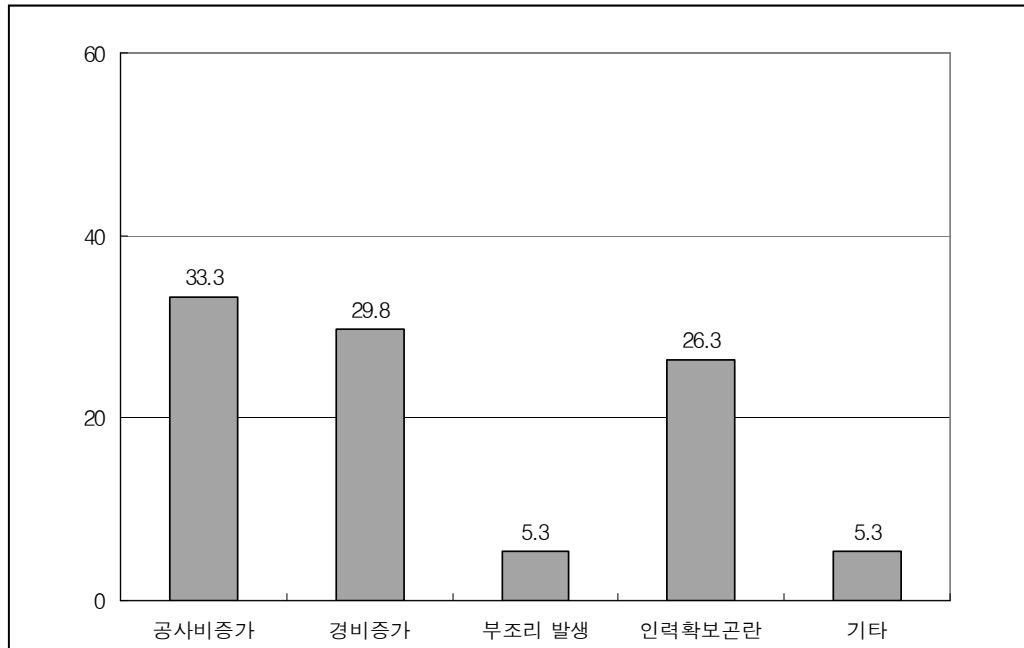
(단위: %)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한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들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공사비 증가’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비 증가(29.8%)’, ‘인력 확보 곤란(26.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Ⅲ-11>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부정적 평가 이유

(단위: %)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직접 시공비율을 조사한 결과 40~60%미만 직접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이상 직접 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35.8%에 달하고 있다. 반면 20%미만으로 직접 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2%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이 60% 이상 직접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0%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 미만으로 직접 시공하는 비율은 충남(대전) 지역이 18.2%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Ⅲ-21> 중소 건설업체 직접시공비율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20%이내 | 20~40% 미만 | 40~60% 미만 | 60~80% 미만 | 80%이상 |
|------------|-----|-----------------|------------------|------------------|------------------|------------------|
| 전체 | 305 | 25 (8.2) | 77 (25.2) | 93 (30.5) | 62 (20.3) | 48 (15.7) |
| 서울 | 18 | 2 (11.1) | 5 (27.8) | 3 (16.7) | 3 (16.7) | 5 (27.8) |
| 경기 | 30 | 2 (6.7) | 9 (30.0) | 10 (33.3) | 6 (20.0) | 3 (10.0) |
| 인천 | 12 | 4 (33.3) | 2 (16.7) | 2 (16.7) | 1 (8.3) | 3 (25.0) |
| 충북 | 23 | — | 2 (8.7) | 6 (26.1) | 8 (34.8) | 7 (30.4) |
| 충남(대전) | 33 | 6 (18.2) | 9 (27.3) | 8 (24.2) | 9 (27.3) | 1 (3.0) |
| 경북(대구) | 57 | — | 15 (26.3) | 16 (28.1) | 14 (24.6) | 12 (22.8) |
| 경남(부산, 울산) | 40 | 4 (10.0) | 12 (30.0) | 14 (35.0) | 9 (22.5) | 1 (2.5) |
| 전북 | 12 | 1 (8.3) | 4 (33.3) | 4 (33.3) | — | 3 (25.0) |
| 전남(광주) | 38 | 1 (2.6) | 13 (34.2) | 17 (44.7) | 2 (5.3) | 5 (13.2) |
| 강원 | 25 | 2 (8.0) | 2 (8.0) | 5 (20.0) | 9 (36.0) | 7 (28.0) |
| 제주 | 9 | 2 (22.2) | 3 (33.3) | 3 (33.3) | 1 (11.1) | |
| 무응답 | 8 | 1 (12.5) | 1 (12.5) | 5 (62.5) | | 1 (12.5) |

시공능력순위별 직접 시공비율은 <표Ⅲ-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Ⅲ-22> 시공능력순위별 직접시공비율

(단위: 개사, %)

| 시공능력순위 | 소계 | 20%이내 | 20~40%미만 | 40~60%미만 | 60~80%미만 | 80%이상 |
|-------------|-----|-----------------|------------------|------------------|------------------|------------------|
| 전체 | 304 | 25 (8.2) | 77 (25.3) | 93 (30.6) | 62 (20.4) | 48 (15.8) |
| 77~200 | 20 | 1 | 3 | 6 | 6 | 4 |
| 201~400 | 39 | 6 | 9 | 14 | 4 | 6 |
| 401~600 | 26 | 2 | 8 | 9 | 3 | 4 |
| 601~800 | 35 | 6 | 8 | 12 | 7 | 2 |
| 801~1,000 | 32 | 2 | 6 | 7 | 12 | 5 |
| 1,001~1,500 | 87 | 4 | 23 | 28 | 15 | 17 |
| 1,501~2,077 | 56 | 3 | 16 | 15 | 13 | 9 |
| 무응답 | 9 | 1 | 3 | 2 | 2 | 1 |

4) 기타 정책·제도

우선 ‘지역제한입찰대상 공사’ 확대에 대해서는 80.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7%로 조사되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대해서는 최근 감사원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사에 대한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83.8%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제도는 전체 응답업체의 86.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조달청 등급별 입찰제도는 65.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모두 중소 건설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턴키·대안공사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51.2%로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4.8%에 달하고 있어 중소 건설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와 지역별 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세한 지역별 조사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Ⅲ-23> 기타 제도에 대한 평가

(단위: 개사, %)

| 제도 | 소계 | 매우긍정적 | 긍정적 | 영향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지역제한입찰제도 확대 | 311 | 99 (31.8) | 150 (48.2) | 38 (12.2) | 19 (6.1) | 5 (1.6) |
|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 308 | 81 (26.3) | 177 (57.5) | 34 (8.9) | 16 (5.2) | - |
| 지역업체 가산 제도 | 309 | 96 (31.1) | 172 (55.7) | 34 (11.0) | 7 (2.3) | - |
| 조달청 등급별 입찰제도 | 306 | 36 (11.8) | 165 (53.9) | 76 (24.8) | 25 (8.2) | 4 (1.3) |
| 턴키·대안공사 확대 | 301 | - | 37 (12.3) | 110 (36.5) | 102 (33.9) | 52 (17.3) |

다음으로 지역제한입찰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조달청 등급별 입찰공사가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연간 공사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를 <표Ⅲ-24>에 제시하였다. 각각 연간 공사 물량의 58.4%, 17.7%, 1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제도들이 중소 건설업체의 물량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 공사 물량에서 지역제한입찰공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지역으로 지역제한입찰공사가 연간 물량의 7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으로 29.6%로 조사되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가 연간 공사 물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지역이 23.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제주 지역이 7.7%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조달청 등급별 입찰 공사가 연간 공사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이 26.5% 가장 높았으며, 인천(23.0%), 충남(대전, 23.9%) 지역 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전북(9.55), 제주(7.25), 충북(14.9) 지역 등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Ⅲ-24>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조달청 등급별 입찰 공사 비중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지역제한 입찰공사 | 소계 |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 | 소계 | 조달청등급별 입찰공사 |
|------------|-----|--------------|-----|----------------|-----|----------------|
| 전체 | 289 | 58.4 | 285 | 17.7 | 285 | 18.7 |
| 서울 | 12 | 36.9 | 11 | 23.0 | 11 | 26.5 |
| 경기 | 32 | 51.0 | 31 | 19.6 | 32 | 20.6 |
| 인천 | 10 | 29.6 | 10 | 18.1 | 10 | 23.0 |
| 충북 | 23 | 68.6 | 23 | 14.4 | 23 | 14.9 |
| 충남(대전) | 31 | 53.1 | 30 | 21.2 | 31 | 23.9 |
| 경북(대구) | 57 | 57.0 | 56 | 17.9 | 56 | 18.9 |
| 경남(부산, 울산) | 40 | 64.3 | 41 | 19.7 | 40 | 16.8 |
| 전북 | 10 | 64.2 | 9 | 20.3 | 10 | 9.5 |
| 전남(광주) | 33 | 58.8 | 33 | 15.0 | 33 | 21.3 |
| 강원 | 22 | 76.5 | 22 | 12.4 | 21 | 12.4 |
| 제주 | 10 | 68.5 | 10 | 7.0 | 9 | 7.2 |
| 무응답 | 9 | 55.6 | 9 | 22.0 | 9 | 22.4 |

지역제한입찰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조달청 등급별 입찰 공사가 연간 공사물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시공능력순위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Ⅲ-25>에 제시하였다. 지역 제한입찰공사의 경우는 시공능력순위가 낮아질수록 연간 공사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역의무공동공사와 조달청 등급별 입찰공사는 시공능력순위가 높을수록 연간 공사물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Ⅲ-25> 지역제한, 지역의무, 조달청 등급별 입찰제도

(단위: 개사, %)

| 시공능력순위 | 소계 | 지역제한 입찰공사 | 소계 |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 | 소계 | 조달청등급별 입찰공사 |
|---------------|-----|--------------|-----|----------------|-----|----------------|
| 전체 | 289 | 58.4 | 284 | 17.7 | 284 | 18.7 |
| 78 ~ 200 | 21 | 31.2 | 19 | 23.7 | 19 | 31.7 |
| 201 ~ 400 | 35 | 42.0 | 35 | 28.8 | 35 | 24.2 |
| 401 ~ 600 | 28 | 55.8 | 28 | 24.1 | 28 | 25.5 |
| 601 ~ 800 | 32 | 57.1 | 31 | 21.2 | 32 | 20.2 |
| 801 ~ 1,000 | 30 | 62.2 | 31 | 11.6 | 30 | 14.4 |
| 1,001 ~ 1,500 | 83 | 62.9 | 83 | 16.6 | 82 | 15.2 |
| 1,501 ~ 2,077 | 51 | 70.0 | 49 | 9.6 | 50 | 13.3 |
| 무응답 | 8 | 74.6 | 8 | 5.4 | 8 | 20.0 |

(2) 건설업 업역 제한 폐지

최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되어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겸업제한의 폐지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61.3%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경우인 25.5%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충남(대전, 72.45), 전북(72.7%) 지역 등이었다.

<표Ⅲ-26> 업역제한 철폐에 관한 의견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찬성 | 반대 | 관심없음 |
|-----------|-----|------------------|-------------------|------------------|
| 전체 | 302 | 77 (25.5) | 185 (61.3) | 40 (13.2) |
| 서울 | 17 | 6 (35.3) | 11 (64.7) | - |
| 경기 | 34 | 11 (32.3) | 19 (55.9) | 4 (11.8) |
| 인천 | 11 | 3 (27.3) | 7 (63.6) | 1 (9.0) |
| 충북 | 24 | 8 (33.3) | 13 (54.2) | 3 (12.5) |
| 충남(대전) | 29 | 6 (20.7) | 21 (72.4) | 2 (6.9) |
| 경북(대구) | 58 | 17 (29.3) | 31 (53.4) | 10 (17.2) |
| 경남(부산,울산) | 39 | 3 (7.7) | 28 (71.8) | 8 (20.5) |
| 전북 | 11 | 2 (18.2) | 8 (72.7) | 1 (9.0) |
| 전남(광주) | 35 | 8 (22.9) | 24 (68.6) | 3 (8.6) |
| 강원 | 25 | 5 (20.0) | 14 (56.0) | 6 (24.0) |
| 제주 | 9 | 2 (22.2) | 7 (77.8) | - |
| 무응답 | 10 | 6 (60.0) | 2 (20.0) | 2 (20.0) |

시공능력순위별로 일반·전문간 업역제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601~800위 업체들의 반대 의견이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1~600위 업체들은 찬성 의견이 51.9%로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표Ⅲ-27> 시공능력순위별 업역제한 폐지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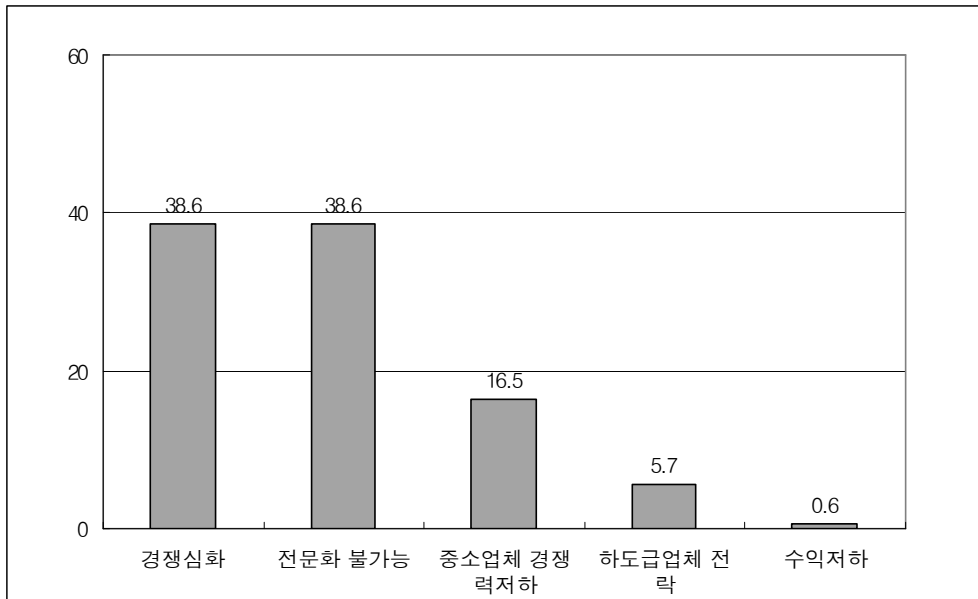
(단위: 개사, %)

| 시공능력순위 | 소계 | 찬성 | 반대 | 관심없음 |
|-------------|-----|------------------|-------------------|------------------|
| 전체 | 302 | 77 (25.5) | 185 (61.3) | 40 (13.2) |
| 78~200 | 20 | 8 (40.0) | 10 (50.0) | 2 (10.0) |
| 201~400 | 40 | 5 (12.5) | 27 (67.5) | 8 (20.0) |
| 401~600 | 27 | 14 (51.9) | 12 (44.4) | 1 (3.7) |
| 601~800 | 35 | 2 (5.7) | 26 (74.3) | 7 (20.0) |
| 801~1,000 | 32 | 10 (31.3) | 17 (53.1) | 5 (15.6) |
| 1,001~1,500 | 87 | 23 (26.4) | 56 (64.4) | 8 (9.2) |
| 1,501~2,077 | 51 | 12 (23.5) | 31 (60.8) | 8 (15.7) |
| 무응답 | 10 | 3 (10.0) | 6 (60.0) | 1 (10.0) |

일반·전문간 업역 제한 규제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중소 건설업체 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의 심화’와 ‘중소 건설업체들의 전문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38.6%로 같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16.5%로 조사되었다.

<그림Ⅲ-12> 업역제한 폐지 반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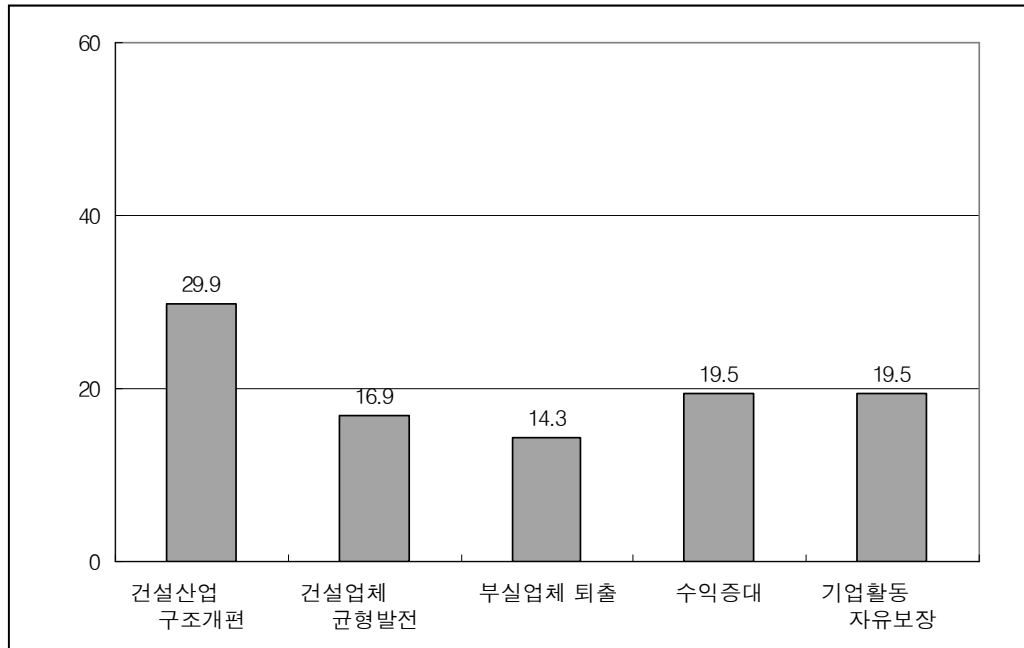
(단위: 개사, %)



일반·전문간 업역 규제의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건설 산업의 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수익증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19.5%로 같았다. ‘대·중·소 건설업체의 균형 발전 측면’과 ‘부실업체 퇴출 측면’을 평가하고 있는 경우도 각각 16.9%와 14.3%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조사결과도 전체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Ⅲ-13> 업역제한 폐지 찬성 이유

(단위: 개사, %)



일반건설업체인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규제가 폐지될 경우 전문 업종에 진출할 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 업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63.5%로 ‘진출하겠다’는 의견 36.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55.6%), 충북(57.1%), 제주(55.6%)로 전문 건설업종에 ‘진출하겠다’는 의견이 ‘진출하지 않겠다’는 의견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전북(81.8%), 경남(부산·울산, 74.3%), 경기(66.7%) 지역의 업체들이 전문건설업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표Ⅲ-28> 업역제한 폐지 시 전문업종 진출 의사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있다 | 없다 |
|-----------|-----|-------------------|-------------------|
| 전체 | 277 | 101 (36.5) | 176 (63.5) |
| 서울 | 16 | 6 (37.5) | 10 (62.5) |
| 경기 | 30 | 10 (33.3) | 20 (66.7) |
| 인천 | 9 | 5 (55.6) | 4 (44.4) |
| 충북 | 21 | 12 (57.1) | 9 (42.9) |
| 충남(대전) | 29 | 11 (37.9) | 18 (62.1) |
| 경북(대구) | 50 | 18 (36.0) | 32 (64.0) |
| 경남(부산,울산) | 35 | 9 (25.7) | 26 (74.3) |
| 전북 | 11 | 2 (18.2) | 9 (81.8) |
| 전남(광주) | 34 | 15 (44.1) | 19 (55.9) |
| 강원 | 23 | 5 (21.7) | 18 (78.3) |
| 제주 | 9 | 5 (55.6) | 4 (44.4) |
| 무응답 | 10 | 3 (30.0) | 7 (70.0) |

시공능력순위별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규제가 폐지될 경우 전문건설업종 진출 의사를 조사한 결과 위의 지역별 조사 결과와 큰 차이점이 없었다.

<표Ⅲ-29> 시공능력순위별 업역제한 철폐시 전문업종 진출 의사

(단위: 개사, %)

| 시공능력순위 | 소계 | 있다 | 없다 |
|---------------|-----|-------------------|-------------------|
| 전체 | 276 | 101 (36.6) | 175 (63.4) |
| 78 ~ 200 | 20 | 7 (35.0) | 13 (65.0) |
| 201 ~ 400 | 38 | 13 (34.2) | 25 (65.8) |
| 401 ~ 600 | 28 | 11 (39.3) | 17 (60.7) |
| 601 ~ 800 | 31 | 7 (22.6) | 24 (77.4) |
| 801 ~ 1,000 | 27 | 12 (44.4) | 15 (55.6) |
| 1,001 ~ 1,500 | 75 | 27 (36.0) | 48 (64.0) |
| 1,501 ~ 2,077 | 48 | 22 (45.8) | 26 (54.2) |
| 무응답 | 9 | 2 (22.2) | 7 (77.8)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규제가 폐지될 경우 전문건설업종 진출할 경우 진출을 희망하는 전문건설업종을 조사한 결과 ‘토공사업(32.2%)’,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8%)’, ‘시설물유지관리업(12.3%)’, ‘실내건축공사업(8.2%)’, ‘상하수도설비공사업(7.6%)’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들 업종은 전문건설업종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일반 건설업종과의 차이(전문성)가 그리 크지 않은 업종들로 판단된다. 지역별 조사결과는 <표Ⅲ-30>에, 시공능력순위별 조사결과는 <표Ⅲ-31>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표Ⅲ-30> 업역제한 철폐시 진출 전문업종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전체 | 171 | 토공사업 55 (32.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7 (15.8) | 시설물유지관리업 21 (12.3) | 실내건축공사업 14 (8.2)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3 (7.6) |
| 서울 | 1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 | 토공사업 2 | 실내건축공사업 2 | - | - |
| 경기 | 23 | 토공사업 8 | 시설물유지관리업 5 | 조경식재공사업 3 | - | - |
| 인천 | 5 | 토공사업 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 | 수중공사업 1 | - | - |
| 충북 | 1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 | 토공사업 3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 - | - |
| 충남(대전) | 19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 | 토공사업 2 | - | - |
| 경북(대구) | 37 | 토공사업 15 | 시설물유지관리업 6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 | - | - |
| 경남 (부산, 울산) | 17 | 토공사업 9 | 시설물유지관리업 3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 - | - |
| 전북 | 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 토공사업 1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 | - | - |
| 전남(광주) | 15 | 시설물유지관리업 3 | 토공사업 2 | 철강재설치공사업 2 | - | - |
| 강원 | 12 | 토공사업 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 시설물유지관리업 1 | - | - |
| 제주 | 7 | 토공사업 3 | 실내건축공사업 2 | 수중공사업 1 | - | - |
| 무응답 | 5 | 토공사업 2 | 시설물유지관리업 1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 | - | - |

<표Ⅲ-31> 시공능력순위별 업역제한 철폐시 진출 전문업종

(단위: 개사, %)

| 시공능력 순위 | 소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전체 | 170 | 토공사업 55 (32.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7 (15.9) | 시설물유지관리업 20 (11.8) | 실내건축공사업 14 (8.2)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3 (7.6) |
| 77 ~ 200 | 15 | 토공사업 4 | 시설물유지관리업 6 | 실내건축공사업 2 | | |
| 201 ~ 400 | 21 | 토공사업 10 | 포장공사업 3 | 철근콘크리트공사 업 2 | | |
| 401 ~ 600 | 18 | 토공사업 7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 | 시설물유지관리업 2 | | |
| 601 ~ 800 | 12 | 토공사업 5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 | 시설물유지관리업 2 | | |
| 801 ~ 1,000 | 20 | 토공사업 7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 | 시설물유지관리업 3 | | |
| 1,001 ~ 1,500 | 46 | 토공사업 1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8 | 조경식재공사업 6 | | |
| 1,501 ~ 2,077 | 34 | 실내건축공사업 6 | 토공사업 5 | 철근콘크리트공사 업 5 | | |
| 무응답 | 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 | 시설물유지관리업 1 | | |

(3) PQ적격심사 중 경영상태 평가

PQ적격심사 중 경영상태 평가 항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개선할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6.6%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19.3%)’, ‘관심없다(14.7%)’보다 높게 나타나 중소 건설업체들은 경영상태 평가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32> PQ, 적격심사 경영상태 개선 필요성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있다 | 관심없다 | 없다 |
|----|-----|-----------|-----------|------------|
| 전체 | 285 | 55 (19.3) | 42 (14.7) | 188 (66.0) |

PQ 및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항목 중 적절하지 못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업체 중 20.1%가 ‘매출액순이익률’로 응답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9.2%,

‘부채비율’이 12.2%로 각각 조사되었다. 시공능력순위별 조사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최근 들어 건설업체 전반적인 재무상태의 개선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로 인해 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을 받지 못하는 중견·중소건설업체가 늘어난 이유로 만점을 받기 위해 분식 회계를 자행하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Ⅲ-33> 재무비율 평가 항목 중 적절치 못한 것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전체 | 229 | 매출액순이익률 46 (20.1) | 매출액영업이익률 44 (19.2) | 부채비율 28 (12.2) | 신용평가등급 21 (9.2) | 총자산대비영업 현금흐름비율 17 (7.4) |
| 서울 | 11 | 부채비율 5 | 매출액영업이익률 3 | 신용평가등급 2 | | |
| 경기 | 26 | 매출액영업이익률 5 | 매출액순이익률 5 | 신용평가등급 5 | | |
| 인천 | 8 | 부채비율 3 | 매출액순이익률 2 | 총자산대비영업 현금흐름비율 1 | | |
| 충북 | 18 | 매출액순이익률 4 | 매출액영업이익률 3 | 부채비율 2 | | |
| 충남(대전) | 21 | 자산회전율 7 | 부채비율 3 | 총자산대비영업 현금흐름비율 3 | | |
| 경북(대구) | 48 | 매출액순이익률 12 | 매출액영업이익률 11 | 차입금의존도 6 | | |
| 경남(부산,울산) | 33 | 매출액순이익률 8 | 매출액영업이익률 7 | 영업기간 4 | | |
| 전북 | 7 | 영업이익대비 자보상비율 2 | 매출액순이익률 1 | 총자산대비영업 현금흐름비율 1 | | |
| 전남(광주) | 28 | 매출액영업이익률 8 | 자산회전율 4 | 부채비율 3 | | |
| 강원 | 17 | 매출액순이익률 5 | 신용평가등급 3 | 부채비율 3 | | |
| 제주 | 5 | 부채비율 2 | 매출액영업이익률 1 | 총자산순이익률 1 | | |
| 무응답 | 7 | 매출액순이익률 3 | 매출액영업이익률 2 | 총자산순이익률 1 | | |

4. 기술 개발 및 자금 조달

(1) 기술개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우선 기술 개발에 대한 중소 건설업체의 입장을 조사하였다. 중소 건설업체들은 ‘기술 개발에 관심은 있으나 여건상 기술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업체의 76.4%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14개 업체 중 20개 업체로 6.4%로 조사되었으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5.9%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청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에 달하고 있어 주목할만하지만 신뢰할만한 결과는 아니다. 또 시공능력순 위별로 조사한 결과도 지역별 조사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다.

<표Ⅲ-34> 신기술개발에 대한 의견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관심없음 | 관심은 있으나 여건상못함 | 적극투자 | 기타 |
|-----------|-----|-----------|------------------|----------|---------|
| 전체 | 314 | 50 (15.9) | 241 (76.4) | 20 (6.4) | 3 (1.0) |
| 서울 | 18 | 1 | 16 | 1 | |
| 경기 | 32 | 4 | 26 | 2 | |
| 인천 | 12 | 3 | 9 | | |
| 충북 | 24 | 3 | 16 | 4 | 1 |
| 충남(대전) | 32 | 5 | 25 | 2 | |
| 경북(대구) | 61 | 7 | 53 | 1 | |
| 경남(부산,울산) | 43 | 9 | 27 | 5 | 2 |
| 전북 | 12 | 2 | 10 | | |
| 전남(광주) | 37 | 5 | 29 | 3 | |
| 강원 | 23 | 6 | 17 | | |
| 제주 | 10 | 3 | 6 | 1 | |
| 무응답 | 10 | 2 | 7 | 1 | |

위와 같은 기술 개발에 대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입장을 기초로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기술 개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191개 업체의 평균 기술 개발 건수 0.3개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 지

역이 평균 1.5개로 기술 개발 실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공능력순위별로는 801 ~ 1,000위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평균 0.8개로 가장 높은 기술 개발 실적을 보였다.

<표Ⅲ-35> 신기술 개발 실적

(단위: 건)

| 지역별 | 소계 | 기술개발 건수 | 평균 | 시공능력 순위별 | 소계 | 기술개발 건수 | 평균 |
|-----------|-----|------------|------|----------------|-----|------------|-----|
| 전체 | 191 | 47 | 0.3 | 전체 | 191 | 47 | 0.3 |
| 서울 | 10 | 4 | 0.4 | 78 ~ 200위 | 15 | 2 | 0.1 |
| 경기 | 26 | 5 | 0.2 | 201 ~ 400위 | 28 | 8 | 0.3 |
| 인천 | 4 | - | - | 401 ~ 600위 | 15 | 3 | 0.2 |
| 충북 | 11 | 17 | 1.5 | 601 ~ 800위 | 24 | 6 | 0.3 |
| 충남(대전) | 23 | 5 | 0.2 | 801 ~ 1,000위 | 16 | 12 | 0.8 |
| 경북(대구) | 42 | 1 | 0.02 | 1,001 ~ 1,500위 | 50 | 9 | 0.2 |
| 경남(부산,울산) | 22 | 5 | 0.2 | 1,501 ~ 2,077위 | 38 | 6 | 0.2 |
| 전북 | 6 | - | - | 무응답 | 5 | 1 | 0.2 |
| 전남(광주) | 23 | 6 | 0.3 | | | | |
| 강원 | 14 | 2 | 0.1 | | | | |
| 제주 | 5 | 1 | 0.2 | | | | |
| 무응답 | 5 | 1 | 0.2 | | | | |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중소 건설업체들의 최근 3년 동안의 기술 개발 실적이 평균 0.3건으로 낮은 상황에서 현행 건설기술 개발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현행 제도가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6%에 그쳤으며, ‘실제 효과가 미미하거나 기술 개발 유도 효과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75%에 달하고 있어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을 유도할 있는 정책의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시공능력순위별 조사 결과 모두 전체 조사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다.

<표Ⅲ-36> 관련 제도의 평가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매우 긍정적임 | 긍정적임 | 실제효과 미미 | 전혀없음 |
|----|-----|----------|-----------|------------|-----------|
| 전체 | 289 | 13 (4.5) | 61 (21.1) | 169 (58.5) | 46 (15.9) |

중소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유도할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주문한 경우가 전체의 48.0%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중소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개발 유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는 27.3%로 조사되었고,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은 요원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4.7%에 달했다. 지역별 조사 결과와 시공능력 순위별 조사결과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Ⅲ-37> 신기술개발 유도 대책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현행 제도 골격 보완 | 중소업체 별도 제도 필요 | 기술개발 요원 |
|----|-----|-------------|---------------|-----------|
| 전체 | 271 | 130 (48.0) | 74 (27.3) | 67 (24.7) |

중소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유도할 구체적 제도를 조사한 결과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기술개발 실적의 각종 입찰심사에 반영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사발주 시 관련신기술 의무적인 설계반영 법제도화, 업체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개발 정보 공유, 기술개발 이후의 철저한 관리감독, 중소기업기술연구소 설립(개별회사 연구소 통합), 중소기업업체만을 위한 기술평가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기술개발관련 교육 및 세미나 제도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어떤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 요원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현실상 기술 개발에 투자할 경제적 여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2) 자금 조달

중소 건설업체의 금융 조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우선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를 조사하였다. <표Ⅲ-3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번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의 평균 차입금의존도는 14.0%로 조사되어 중소기업들의 차입금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지역 중소기업들의 차입금 의존도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7.7%), 전남(광주, 10.3%) 지역의 업체들의 차입금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10% 미만인 업체가 55.4%로 나타났고, 차입금 의존도가 0%인 업체도 2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차입금 의존도가 50% 이상인 업체는 2.8%에 그쳤다.

<표Ⅲ-38> 지역별 차입금 의존도

(단위: 개사, %)

| 구분 | 평균 | 소계 | 0 | 0.1~5 | 5.1~10 | 10.1~15 | 15.1~20 | 20.1~25 | 25.1~30 | 30.1~35 | 35.1~40 | 40.1~50 | 50.1~80 | 80 이상 |
|------------|------|-----|--------------|--------------|--------------|-------------|-------------|-------------|-------------|------------|------------|------------|------------|------------|
| 전체 | 14.0 | 253 | 72 (28.5) | 28 (11.1) | 40 (15.8) | 25 (9.9) | 25 (9.9) | 16 (6.3) | 18 (7.1) | 7 (2.8) | 9 (3.6) | 6 (2.4) | 4 (1.6) | 3 (1.2) |
| 서울 | 37.0 | 15 | 1 | 1 | | | 2 | 1 | 2 | 1 | 2 | 3 | 1 | 1 |
| 경기 | 18.3 | 21 | 4 | 3 | 5 | 1 | 1 | 1 | 2 | | | 1 | 1 | 1 |
| 인천 | 19.7 | 10 | 3 | 1 | | | 2 | 1 | 1 | 1 | 1 | | 1 | |
| 충북 | 14.7 | 20 | 12 | 1 | 1 | 1 | 2 | 1 | | | 1 | | | 1 |
| 충남(대전) | 11.8 | 29 | 9 | 3 | 6 | 3 | 2 | 2 | 1 | 1 | 1 | | 1 | |
| 경북(대구) | 11.5 | 49 | 13 | 6 | 10 | 6 | 3 | 4 | 5 | 1 | | 1 | | |
| 경남(부산, 울산) | 11.2 | 37 | 14 | 4 | 1 | 4 | 7 | 2 | 1 | 1 | 3 | | | |
| 전북 | 12.7 | 12 | 4 | | 3 | 2 | | | 1 | 1 | 1 | | | |
| 전남(광주) | 10.3 | 26 | 4 | 4 | 7 | 4 | 2 | 1 | 3 | 1 | | | | |
| 강원 | 12.7 | 21 | 3 | 4 | 4 | 3 | 2 | 3 | 1 | | | 1 | | |
| 제주 | 7.7 | 8 | 3 | 1 | 2 | | 1 | | 1 | | | | | |
| 무응답 | 8.2 | 5 | 2 | | 1 | 1 | 1 | | | | | | | |

지방 중소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8%로 가장 높았으며, ‘공사대금’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41.4%로 조사되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9%에 달했고, ‘사채와 제3금융권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0%와 1.3%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8.5%), 경북(대구, 51.7%) 지역 등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경남(부산·울산, 43.9%), 전남(광주, 43.25) 지역 등이 공사 대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게 조사되었다.

<표Ⅲ-39> 자금조달방법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은행 | 제2 금융권 | 건설공제 조합 | 공사대금 | 사채 | 회사채 발행 | 기타 |
|-----------|------------|-----------------------|--------------------|----------------------|-----------------------|--------------------|-----------|--------------------|
| 전체 | 302 | 128 (42.4) | 4 (1.3) | 36 (11.9) | 125 (41.4) | 6 (2.0) | 0 | 3 (1.0) |
| 서울 | 14 | 10(71.4) | | | 4(28.6) | | | |
| 경기 | 33 | 16(48.5) | 1(3.0) | 4(12.1) | 11(33.3) | 1(3.0) | | |
| 인천 | 12 | 5(41.7) | | | 6(50.0) | 1(8.3) | | |
| 충북 | 22 | 4(18.2) | | 6(27.3) | 11(50.0) | 1(4.5) | | |
| 충남(대전) | 32 | 15(46.9) | | 2(6.2) | 15(46.9) | | | |
| 경북(대구) | 60 | 31(51.7) | 1(1.7) | 4(6.7) | 23(38.3) | 1(1.7) | | |
| 경남(부산,울산) | 41 | 16(39.0) | | 6(14.6) | 18(43.9) | | | 1(2.4) |
| 전북 | 11 | 5(45.5) | | 2(18.2) | 4(36.4) | | | |
| 전남(광주) | 37 | 14(37.8) | | 7(18.9) | 16(43.2) | | | |
| 강원 | 22 | 7(31.8) | 1(4.5) | 3(13.6) | 8(36.4) | 2(9.0) | | 1(4.5) |
| 제주 | 10 | 2(20.0) | 1(10.0) | 1(10.0) | 5(50.0) | | | 1(10.0) |
| 무응답 | 8 | 3(37.5) | | 1(12.5) | 4(50.0) | | | |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자금 조달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과거와 비교해서 조사한 결과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49.8%)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43.3%로 조사되어 조사에 응한 업체 중 93.1%가 과거와 비교해 현재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Ⅲ-40> 자금조달 상황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어려워짐 | 변화없음 | 쉬워짐 |
|-----------|-----|-------------------|-------------------|-----------------|
| 전체 | 291 | 145 (49.8) | 126 (43.3) | 20 (6.9) |
| 서울 | 15 | 10 (66.7) | 4 (26.7) | 1 (6.8) |
| 경기 | 29 | 16 (55.2) | 10 (34.5) | 3 (10.3) |
| 인천 | 10 | 5 (50.0) | 4 (40.0) | 1 (10.0) |
| 충북 | 21 | 11 (52.4) | 10 (47.6) | |
| 충남(대전) | 31 | 20 (64.5) | 11 (35.5) | |
| 경북(대구) | 59 | 25 (42.4) | 32 (54.2) | 2 (3.4) |
| 경남(부산,울산) | 39 | 20 (51.3) | 14 (35.9) | 5 (12.8) |
| 전북 | 10 | 4 (40.0) | 6 (60.0) | |
| 전남(광주) | 37 | 17 (45.9) | 16 (43.2) | 4 (10.9) |
| 강원 | 22 | 10 (45.5) | 10 (45.5) | 2 (9.0) |
| 제주 | 10 | 3 (30.0) | 5 (50.0) | 2 (20.0) |
| 무응답 | 8 | 4 (50.0) | 4 (50.0) | |

특히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은행권) 자금 조달 시 애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Ⅲ-44>와 같다. 금융기관 자금조달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는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온 ‘물적 담보의 요구’가 약 40%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대출한도의 부족’이 24.0%,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한 경우가 19.4%, ‘제출 서류가 과다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3%,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경우가 4.1%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시공능력순위별 조사 결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Ⅲ-41>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사항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대출한도부족 | 제출서류과다 | 복잡시간과다 | 수수료 | 담보요구 | 기타 |
|----|-----|------------------|-----------------|------------------|-----------------|-------------------|-----------------|
| 전체 | 268 | 63 (24.0) | 25 (9.3) | 52 (19.4) | 11 (4.1) | 105 (39.2) | 12 (4.5) |

5. 중점사업분야

현재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중점 사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인 ‘도로(교량·터널 포함) 공사(24.4%)’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공공공사인 ‘학교시설(14.7%)’, ‘자체 아파트 사업(10.5%)’, ‘공용청사(7.45)’, ‘민간 도급 근린시설공사(4.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점 사업 분야가 공공공사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50%에 달하고 있어 중소 건설업체들은 공공공사 위주로 중점 사업 분야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중점 사업 분야가 ‘자체 아파트 사업(18.8%)’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은 대부분 공공공사 위주로 ‘도로 공사(교량·터널 포함)’, ‘학교 시설 공사’ 등을 중점 사업으로 응답한 경우가 높게 조사되었다.

<표Ⅲ-42> 중소 건설업체 중점 사업 분야(지역별)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전체 | 258 | 도로(교량,터널) 63 (24.4) | 학교시설 38 (14.7) | 아파트(자체) 27 (10.5) | 공용청사 19 (7.4) | 근린상가(민간) 11 (4.3) |
| 서울 | 16 | 아파트(자체) 3 | 공공병원시설 2 | 민간 기타 2 | | |
| 경기 | 30 | 도로(교량,터널) 8 | 공용청사 4 | 아파트(자체) 4 | | |
| 인천 | 11 | 아파트(자체) 2 | 도로(교량,터널) 2 | 아파트(민간) 2 | | |
| 충북 | 18 | 도로(교량,터널) 4 | 학교시설 2 | 근린상가(자체) 2 | | |
| 충남(대전) | 26 | 학교시설 10 | 도로(교량,터널) 4 | 학교시설 3 | | |
| 경북(대구) | 52 | 도로(교량,터널) 15 | 학교시설 11 | 병원시설(민간) 4 | | |
| 경남(부산,울산) | 30 | 도로(교량,터널) 7 | 근린상가(자체) 5 | 아파트(자체) 5 | | |
| 전북 | 9 | 도로(교량,터널) 4 | 학교시설 2 | 아파트(자체) 2 | | |
| 전남(광주) | 32 | 도로(교량,터널) 6 | 치산치수 4 | 학교시설 3 | | |
| 강원 | 21 | 도로(교량,터널) 10 | 공용청사 3 | 전시시설(공공) 2 | | |
| 제주 | 8 | 아파트(자체) 3 | 도로(교량, 터널) 1 | 전시시설(공공) 1 | | |
| 무응답 | 5 | 학교시설 3 | 도로(교량, 터널) 1 | 근린상가(민간) 1 | | |

시공능력순위별 중점 사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순위가 높은 78~200위 업체들이 ‘자체 아파트 사업’을 중점 사업 분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공능력순위가 낮아질수록 공공공사 위주로 특히, ‘도로 공사(교량·터널 포함)’를 중점 사업 분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표Ⅲ-43> 중소 건설업체 중점 사업 분야(시공능력순위별)

(단위: 개사, %)

| 시공능력순위 | 소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전체 | 258 | 도로(교량, 터널) 63 (24.4) | 학교시설 38 (14.7) | 아파트(자체) 27 (10.5) |
| 78 ~ 200 | 20 | 아파트(자체) 6 | 도로(교량, 터널) 4 | 아파트(민간) 3 |
| 201 ~ 400 | 35 | 도로(교량, 터널) 8 | 아파트(자체) 7 | 학교시설 3 |
| 401 ~ 600 | 23 | 학교시설 4 | 도로(교량, 터널) 3 | 아파트(자체) 3 |
| 601 ~ 800 | 32 | 도로(교량, 터널) 10 | 공용청사 4 | 학교시설 3 |
| 801 ~ 1,000 | 28 | 학교시설 4 | 근린상가(민간) 3 | 근린상가(자체) 3 |
| 1,001 ~ 1,500 | 71 | 도로(교량, 터널) 18 | 학교시설 12 | 근린공사(자체) 7 |
| 1,501 ~ 2,077 | 43 | 도로(교량, 터널) 14 | 학교시설 8 | 공용청사 4 |
| 무응답 | 6 | 도로 3 | 학교시설 2 | 공용청사 1 |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현재의 중점 사업 분야와는 달리 ‘자체 아파트 사업’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비율이 22.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도로 공사(교량·터널 포함)’가 18.6%, ‘민간 아파트 도급공사’가 6.6%, ‘학교시설’이 5.8%, ‘자체 사무용빌딩분야’가 5.4%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표Ⅲ-44> 향후 진출 사업 분야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전체 | 242 | 아파트(자체) 55 (22.7) | 도로(교량, 터널) 45 (18.6) | 아파트(민간도급) 16 (6.6) | 학교시설 14 (5.8) | 사무용빌딩(자체) 13 (5.4) |
| 서울 | 15 | 아파트(자체) 3 (20.0) | 단독주택(자체) 3 (20.0) | 재건축개발(민간) 2 (13.3) | | |
| 경기 | 22 | 아파트(자체) 5 (22.7) | 도로(교량, 터널) 5 (22.7) | 아파트(민간) 2 (9.1) | | |
| 인천 | 10 | 철도, 항만 2 (20.0) | 학교시설 2 (20.0) | 아파트(민간) 2 (20.0) | | |
| 충북 | 18 | 도로(교량, 터널) 4 (22.2) | 아파트(자체) 2 (11.1) | 학교시설 2 (11.1) | | |
| 충남(대전) | 31 | 아파트(자체) 7 (22.6) | 도로(교량, 터널) 4 (12.9) | 학교시설 4 (12.9) | | |
| 경북(대구) | 51 | 도로(교량, 터널) 13 (25.5) | 아파트(자체) 9 (17.6) | 아파트(민간) 4 (7.8) | | |
| 경남(부산, 울산) | 29 | 아파트(자체) 9 (31.0) | 도로(교량, 터널) 5 (17.2) | 치산치수 3 (10.3) | | |
| 전북 | 7 | 학교시설 2 (28.6) | 근린상가(자체) 2 (28.6) | 치산치수 1 (14.3) | | |
| 전남(광주) | 29 | 아파트(자체) 9 (31.0) | 아파트(민간) 4 (13.8) | 도로(교량, 터널) 3 (10.3) | | |
| 강원 | 17 | 아파트(자체) 6 (35.3) | 도로(교량, 터널) 6 (35.3) | 사무용빌딩 3 (17.6) | | |
| 제주 | 8 | 아파트(자체) 2 (25.0) | 숙박시설(자체) 2 (25.0) | 도로(교량, 터널) 1 (12.5) | | |
| 무응답 | 5 | 도로(교량, 터널) 2 (40.0) | 아파트(자체) 1 (20.0) | 오피스텔(민간) 1 (20.0) | | |

시공능력순위별로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표Ⅲ-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등급에서 ‘자체 아파트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도로(교량·터널 포함)공사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45> 향후 진출 사업 분야

(단위: 개사, %)

| 시공능력순위 | 소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전체 | 242 | 아파트(자체) 55 (22.7) | 도로(교량, 터널) 45 (18.6) | 아파트(민간도급) 16 (6.6) |
| 77 ~ 200 | 19 | 아파트(자체) 5 (26.3) | 도로(교량, 터널) 4 (21.0) | 사무용빌딩(자체) 3 (15.8) |
| 201 ~ 400 | 34 | 아파트(자체) 11 (32.4) | 도로(교량, 터널) 8 (23.5) | 아파트(민간도급) 3 (12.5) |
| 401 ~ 600 | 24 | 아파트(자체) 7 (29.2) | 도로(교량, 터널) 4 (16.7) | 댐, 항만 등 3 (12.5) |
| 601 ~ 800 | 30 | 아파트(자체) 8 (26.7) | 도로(교량, 터널) 4 (13.3) | 용지조성 4 (13.3) |
| 801 ~ 1,000 | 23 | 아파트(자체) 7 (30.4) | 도로(교량, 터널) 4 (17.4) | 치산, 치수 3 (13.0) |
| 1,001 ~ 1,500 | 66 | 아파트(자체) 11 (16.7) | 도로(교량, 터널) 10 (15.2) | 학교시설 7 (10.6) |
| 1,501 ~ 2,077 | 40 | 아파트(자체) 6 (15.0) | 도로(교량, 터널) 6 (15.0) | 아파트(민간도급) 3 (7.5) |
| 무응답 | 6 | 도로(교량, 터널) 4 (66.6) | 문화재시설 1(16.7) | 근린상가(자체) 1 (16.7) |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중소 건설업체들은 자체 아파트 사업을 매력이 큰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아파트 사업을 중점 사업 분야로 삼고자 하는 업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 있는 8.31부동산안정화 대책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소결

(1) 경영상태 및 경기 전망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현재 경영상태는 IMF 체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1999년에 비해서는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충남(대전)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5년 전에 비해 경영상태가 개선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지역은 1년 전과 비교한 경영상태가 악화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5년·1년 전과 비교하여 경영상태가 개선된 이유는

많은 업체들이 건설업체 스스로의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평가하고 있으며, 5년·1년 전과 비교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된 원인은 ‘경쟁심화’, ‘물량감소’ 등으로 조사되었다.

중소 건설업체들은 향후 건설 경기 전망을 단기(1~2년내), 중장기(3년 이후)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단기 건설경기 전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경기의 회복은 적어도 3년 이후에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본격적인 회복은 난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로는 소규모공사의 축소 및 BTL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물량 축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자사의 경영상태는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경우가 낮게 조사되었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것은 자사의 향후 경영상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 중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경영상태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중점사업전환 및 사업다각화로 응답한 경우도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2) 경영애로 요인 및 극복 과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은 ‘물량부족’과 ‘경쟁의 심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영 애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건설업체 차원의 과제로는 ‘영업력 강화’, ‘사업다각화’ 등이 제시되었다.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물량 증가를 통한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물량 확보로 응답하였다.

향후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계약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중소 건설업 관련 정책·제도

중소 건설업체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정책은 ‘지역업체 가산점 부과 제도’로 조사되었고, 반면 ‘BTL사업의 확대’, ‘턴키·대안공사의 확대’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계약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발주 물량의 증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시행’ 등을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 건설업체의 지방계약법의 시행이 공사 물량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지역제한입찰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조달청 등급별 입찰 공사가 연간 공사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4%, 17.7%, 18.7%로 각각 조사되었다.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겸업제한의 폐지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61.3%가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중소 건설업체 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의 심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규제가 폐지될 경우 진출할 전문업종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실내건축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4) 기술개발 및 자금조달

중소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기술 개발 건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기술 개발 건수는 0.3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통합기술연구소 설립(개별회사 연구소 통합)과 중소건설업체만을 위한 기술평가제도 도입, 기술개발관련 교육 및 세미나 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어떤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중소 건설업체의 현실상 기술 개발에 투자할 경제적 여지가 없어 기술개발은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조사 대상 중소 건설업체의 평균 차입금의존도는 14.0%로 조사되었고, 차입금 의존도가 10% 미만인 업체가 55.4%이고, 차입금 의존도가 0%인 업체도 28.5%에 달하였다. 주요 자금조달 방법은 ‘은행’과 ‘공사대금’으로 조사되었으며,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과거에 비해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은 것 조사되었다. 특히,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것과 대출액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5) 중점사업분야

현재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중점 사업 분야는 ‘도로(교량터널 포함) 공사’, ‘학교시설’, ‘자체 아파트 사업’, ‘공용청사’, ‘민간 도급 근린시설공사’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 분야는 ‘자체 아파트 사업’, ‘도로 공사(교량터널 포함)’, ‘민간 아파트 도급공사’, ‘학교시설’, ‘자체 사무용빌딩분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육성 방안

1. 중소 건설업 정책의 기본 방향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시장에서 무자격 부실업체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경쟁 요소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정책 및 제도가 강력히 시행되어야 한다.

(1) 무자격 부실업체의 철저한 배제

IMF 이후 건설공사 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진입규제의 완화로 중소 건설업체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자본금 위장 납입, 자격증 대여 등으로 형식상으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무자격 부실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이는 무자격 업체들이 건설공사 수주 물량을 잠식하여 건설한 업체마저도 함께 부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무자격 부실업체들은 공사실적을 위·변조하거나 수주한 공사를 중간 마진만 챙기고 타업자에게 전매 또는 일괄하도급하거나, 10~20개의 건설업체를 위장 등록하고 위장 등록한 건설업체들이 집단화하여 특정 건설시장을 독점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시장에 무자격 부실업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 정책, 특히 중소 건설업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무자격 부실업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및 퇴출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부터는 무자격 부실업체의 시장 참여 배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원도급업체가 일정 부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시행되어 무자격 부실업체의 시장 참여 배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간담회에서는 최소한 4대 보험료(의료, 고용, 국민연금, 산재보험)를 체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건설한 업체가 시장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무자격 부실업체의 시장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2) 중소 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먼저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건설업체와의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제고하는 것이다. 물론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제고하여 대형건설업체와의 수주 불균형을 통해 대·중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된 결과, 이러한 수주불균형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일반건설업체 중 0.5%에 불과한 대형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 비중이 약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형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제고하는 정책 및 제도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다. 재정경제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는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제고하는 정책 및 제도들을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관련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자율화를 강조하는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제고를 중요한 육성 정책⁶⁾으로 파악하여 WTO 등 국제적 질서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이러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WTO 등 국제 질서의 범위 내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주기회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주 기회의 제고 다음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 요소 확보에 중요한 것은 중소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정 공사 및 분야에 대한 중소 건설업체의 전문화는 앞으로 시장에서의 생존 및 향후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문화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일반·전문 건설업체간의 겸업 및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중소 건설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전문 건설업 공사로 진출하는 방법으

6) 이의섭·강운산, 대·중소 건설업체 균형발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2. 지방계약법의 적극적 활용

내년부터 지방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공공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방계약법」이 시행되는데, 이러한 「지방계약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차별성을 두어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쟁 요소 확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 요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1) 발주 방식 및 발주 규모 검토 조항 신설

「지방계약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의 발주 방식을 결정하거나, 공사의 발주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하여 대·중소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는데, 미국의 경우 공사 발주(정부 조달)에 있어서 경쟁과 균형을 고려하여 공공공사의 발주 방식이나 공사 발주 규모를 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보를 경쟁의 기본 요소로 파악하고, 완전공개경쟁이 아닌 발주 방식을 채택할 경우는 반드시 발주관청의 경쟁담당자(Competition Advocate)와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규모로 발주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가(Small Business Specialist)와 조정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⁷⁾,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복합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소규모 개별 프로젝트로 발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건설공사는 기획단계, 설계단계, 계약단계, 시공단계,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 건설공사의 1건 발주 규모는 턴키공사의 경우는 기획단계에서, 턴키공사 이외의 공사는 설계단계에서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공사 1건 발주 규모는 중소 건설업체 수주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규모가 작을수록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는 제고된다. 따라서 건설공사 1건 발주규모를 적절

7) FAR Subpart 7.1-Acquisition Plan.

하게 조절할 경우 이는 대·중·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건설공사를 분할 발주하도록 하고, 독일의 경우도 공사 발주 규모를 작게 하여 실제적으로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심사위원회”같은 기관을 구성하여, 공사의 발주방식 및 발주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경우 “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특정 공사를 턴키 대상 공사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중·소 건설기업 규모별 균형 발전을 위한 요소를 포함시키고, 해당 공사 발주 전까지의 대·중·소 건설기업간 수주 현황을 참고하여 분할 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 발주를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 발주단계에서 대·중·소 균형 발전, 즉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제고를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입찰우대(bid preference) 제도 도입·시행

현재 중소 및 지역 업체 수주 기회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 또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는 기업간에 경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있고,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가 경쟁하는 경우에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하는 제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계약법」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하는 경우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입찰우대 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도입하여 대·중·소 건설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입찰우대 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에 있어서는 약자소유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보면, 우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공 수주 확대를 위하여 입찰에서 비록 가격이 최저가가 아니라도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한 우대(bid preference) 조치를 하는 방안이 있다.

〈표Ⅳ-1〉 캘리포니아주의 입찰 우대 제도 적용 방법(Ⅰ)

| 입찰참여자 | 입찰액 | 입찰우대 결과 | 낙찰자 |
|------------------|----------|----------|-----|
| A | \$30,750 | \$30,750 | |
| B | \$28,975 | \$28,975 | |
| C | \$29,520 | \$29,520 | |
| D (인증받은 중소기업) | \$29,870 | \$28,421 | √ |

자료 : California, State Contracting Manual, 2004

최저가 입찰 공사에 대해서 주 조달청이 인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고 5만 달러를 한도로 입찰가격의 5%를 우대해주는 방식으로 〈표Ⅳ-1〉은 건설공사에 4개 건설업체가 입찰하여 입찰 우대 제도를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Ⅳ-1〉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는 \$28,975를 제시한 인증 받은 중소기업이 아닌 B 회사로, 입찰우대제도가 없다면 낙찰자로 결정된다. 그러나 인증 받은 중소기업인 D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므로 입찰 우대 제도가 적용되어 D회사의 입찰가는 \$29,970가 아닌 최저 입찰 금액인 \$28,975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448.75(= \$28,975 × 0.5)를 뺀 \$28,421이 되어 낙찰자로 결정되게 된다.

다음은 입찰가격 외에 다른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에 입찰 우대 제도의 적용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Ⅳ-2〉는 가격 외에 다른 심사항목이 있으며, 인증 받은 2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 우대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표Ⅳ-2〉에서 A와 C 회사가 인증 받은 중소기업이며, 입찰 결과 B가 80점을 취득하여 1위를 하였다. 그러나 입찰 우대 제도가 적용되어 최고 득점을 한 B의 점수인 80점의 5%, 즉 4.0점을 인증 받은 중소기업인 A와 C에 가산한 결과 A가 최고득점자가 되어 낙찰자로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표Ⅳ-2> 캘리포니아주의 입찰 우대 제도 적용 방법(Ⅱ)

| 입찰참여자 | A | B | C | D |
|--------------|---------|---------|---------|---------|
| 심사항목1(만점 15) | 11 | 14 | 13 | 12 |
| 심사항목2(만점 25) | 21 | 21 | 14 | 19 |
| 심사항목3(만점 30) | 18 | 15 | 15 | 18 |
| 가격 (만점 30) | 29.1 | 30.0 | 28.3 | 29.7 |
| (입찰가) | (\$103) | (\$100) | (\$106) | (\$101) |
| 총 점 | 79.1 | 80.0 | 70.3 | 78.7 |
| 입찰 우대 점수 | 4.0 | | 4.0 | |
| 최종 점수 | 83.1 | 80.0 | 74.3 | 78.7 |
| 낙찰자 | √ | | | |

자료 : California, State Contracting Manual, 2004

3.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한 정부 재정의 운용

금년 들어 정부가 재정(세수)의 부족을 이유로 중소 건설업체의 주요 수주물량인 학교시설, 하수관거 시설 등을 BTL민자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70억~80억 규모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발주가 예년에 비해 40%정도 감소하였으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금년도 예산액을 지나치게 적게 책정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에 BTL방식으로 발주할 규모는 4조9,939억원(현재까지 고시된 규모는 3조3,782억원)이며, 내년에는 발주규모가 8조3,147억원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발주규모가 70억인 공사를 가급적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내년도 여전히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 물량은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기본관리비 수준에도 부족한 예산 책정 현실도 중소 건설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되며, 특히, 정부의 재정 운용과 건설업은 그 관계가 밀접하여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하는 재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건설업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의 사정을 배려하여 재정을 운용하는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

체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을 고려하여 민자 방식 또는 재정 투입 방식 등을 결정하고, 장기계속공사의 예산 배정 등에도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중소 건설업체 기술 개발 유도 정책의 실시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설문조사에 응한 중소 건설업체의 3년 평균 기술개발 건수가 0.3건에 그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이 저조한 이유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경영에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 스스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정책보다는 중소 건설업체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설 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는 정책을 펴거나, 중소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기술연구소를 운영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신기술 지정은 아니지만 특허를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 건설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형 공공공사에서 채택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의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앞으로 공공공사 건설물량은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대형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점차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제고하는 것 또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 건설업체들이 건설 산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유인이 더 크다.

실제로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사업다각화'로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30%정도에 달하고 있어, 중소 건설업체간에서도 사업다각화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3>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애로 극복 과제

| 구분 | 소계 | 영업력 강화 | 인재 육성 | 사업 다각화 | 경비 절감 | 기술 개발 | 인력구조 조정 | 중점사업 전환 | 기타 |
|----|-----|----------------|--------------|----------------------|---------------|-------------|-------------|--------------|----|
| 전체 | 304 | 145 (47.7%) | 10 (3.3%) | 79 (30.0%) | 40 (13.2%) | 7 (2.3%) | 8 (2.6%) | 15 (4.9%) | - |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은 시기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 <표IV-4>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중소 건설업체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표 IV-4> 일본의 중소 건설업 신분야 진출 지원 제도

| 구분 | 세부 내용 | 시행시기 |
|---------------------|--|----------|
| 농업분야 진출 지원제도 | 농지 리스 방식에 의한 농업 참가 지원 | 2003년 |
| | 금융 지원(제도 자금 융자 / 농업 신용보증 보험 / 농업 법인등에 대한 출자와 융자를 위한 체제 정비) | - |
| | 지역기업 협동 기반 정비 추진 대책(농업 참가 촉진 기반 정비 실증 사업등) | 2005년 |
| | 농업경쟁력 강화 교부금 중 담당자 육성 대책 농업 경영 종합 대책 중 담당자 종합 지원 사업 | 2005년 |
| | 농업 경쟁력 강화 교부금 중 신규 농업진출 촉진 대책 농업 경영 종합 대책 중 신규 농업진출 촉진 종합 지원 사업 | 2005년 |
| 환경분야 진출 지원제도 | 토양오염 대책법의 시행 | 2002년 |
| | 폐기물 처리법의 일부 개정에 의한 「광역 인정 제도」의 정비 | 2003년 |
| | 학교 등 에코 개수환경 교육 모델 사업 | 2005년 |
| | 환경 카운셀러 등록제도 | 1996년 |
| | 지방 환경 대책 조사관 사무소 설치 | 2001년 |
| 복지분야 진출 지원제도 | 지역개호복지 공간 정비 교부금 창설에 의한 지역개호서비스 기반 정비 | 2005년 |
| 건설관련 분야 진출 지원 제도 | PFI 방식에 의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의 자금조달 원활화 | 2004년 |
|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 | 중소기업벤처 종합 지원 센터에 의한 전문가 파견, 세미나 등의 개최 | 2000년 |
| | 중소기업 재생 지원 협의회에 의한 중소기업 재생의 지원 | 2002년 |
| | 중소기업 신사업 활동 촉진법(가칭)의 창설 | 2005년 |
| 고용보호 지원 제도 | 건설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 2004년 |
| | 신규성장 분야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 1997년 |
| | 지역 고용 개발 촉진 조성금 | 2001년 |
| | 지역 고용 지원사업 특별 장려금 | 2002년 |
| | 중소기업 기반 인재 확보 조성금 | 2003년 |
| | 중소기업 고용 관리 개선 조성금 | 2003년 |
| | 신규 노동력 수급 조정 시스템 등을 포함한 향후의 건설 노동 대책의 검토 | 2005년이 후 |
| | 건설업 신분야 정착 촉진 지원금(가칭) | 2005년 |
| 노동자 능력개발 지원제도 |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 능력개발 조성금 | 2001년 |
| | 건설업 신규성장 분야 진출 교육 훈련 조성금 | 2002년 |
| 종합적 신분야진출 지원제도 | 원스톱 서비스 센터의 설치(건설업 신분야 진출 촉진 지원 사업) | 2005년 |
| | 지역의 중소중견 건설업의 신분야 진출 촉진 모델 구축 지원 사업 | 2005년 |
| | 「건설업 신분야 진출 세미나」의 개최 | 2004년 |

자료 : 일본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중소 건설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무자격 부실 업체의 시장 참여를 철저히 차단과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제고는 가장 효과적인 육성방안이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의 발주 방식을 결정하거나, 공사의 발주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하여 대·중·소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할 것과 중소 건설업체와 대형 건설업체가 경쟁하는 경우 중소 건설업체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입찰우대 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도입하여 대·중·소 건설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앞으로 정부의 재정 운영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소 건설업체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은 중소 건설업체 스스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정책보다는 중소 건설업체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설 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는 정책을 펴거나, 중소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기술연구소를 운영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방안과 특허를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 건설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형 공공공사에서 채택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해 건설 산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를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업체 개관-영업연수

(단위: 개사, %)

| | 소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20년미만 | 20년이상~ 30년미만 | 30년이상 | 무응답 |
|------------|--------------|-------------|----------------|-----------------|-----------------|-----------------|--------------|------------|
| 서울 | 18 | | 3 | 7 | 1 | 5 | 2 | |
| 부산 | 7 | 1 | 1 | 2 | 2 | | 1 | |
| 대구 | 16 | 3 | 3 | 6 | 2 | | 2 | |
| 인천 | 12 | 1 | 5 | 5 | | 1 | | |
| 광주 | 6 | 2 | 2 | 1 | 1 | | | |
| 대전 | 9 | 1 | 3 | 2 | 2 | 1 | | |
| 울산 | 3 | | 1 | | | 1 | 1 | |
| 경기 | 35 | 3 | 7 | 12 | 2 | 5 | 6 | |
| 충북 | 24 | | 6 | 9 | 5 | 1 | 3 | |
| 충남 | 24 | 3 | 7 | 8 | 2 | 1 | 2 | 1 |
| 경북 | 45 | 2 | 11 | 16 | 5 | 1 | 8 | 2 |
| 경남 | 33 | 3 | 13 | 13 | 1 | 1 | 2 | |
| 전북 | 12 | 2 | 6 | 3 | | | 1 | |
| 전남 | 33 | 3 | 9 | 7 | 6 | 3 | 4 | 1 |
| 강원 | 25 | | 11 | 10 | 1 | 1 | 1 | 1 |
| 제주 | 10 | 1 | 2 | 2 | 1 | 4 | | |
| 무응답 | 10 | 1 | 2 | 2 | | 1 | | 4 |
| 합계 (비율) | 322 (100) | 26 (8.1) | 92 (28.6) | 105 (32.6) | 31 (9.6) | 26 (8.1) | 33 (10.2) | 9 (2.8) |

(2) 응답업체 개관 -자본금

(단위: 개사, %)

| | 소계 | 5억미만 | 5억이상~ 10억미만 | 10억이상~ 15억미만 | 15억이상~ 20억미만 | 20억이상~ 30억미만 | 30억이상~ 50억미만 | 50억이상~1 00억미만 | 100억 이상 | 무응답 |
|------------|--------------|------------|----------------|-----------------|-----------------|-----------------|-----------------|------------------|-------------|-------------|
| 서울 | 18 | | | 2 | 8 | 2 | 2 | 1 | 3 | |
| 부산 | 7 | | | 2 | 2 | 1 | 1 | 1 | | |
| 대구 | 16 | | | 10 | 3 | 1 | | | 1 | 1 |
| 인천 | 12 | | | 4 | 1 | 2 | 1 | 2 | 2 | |
| 광주 | 6 | | | 3 | 1 | 1 | | 1 | | |
| 대전 | 9 | | | 4 | 3 | | 2 | | | |
| 울산 | 3 | | | 1 | 2 | | | | | |
| 경기 | 35 | 2 | | 7 | 10 | 8 | 2 | 4 | 2 | |
| 충북 | 24 | | | 13 | 4 | 4 | 3 | | | |
| 충남 | 24 | 1 | | 6 | 4 | 5 | 3 | 3 | | 2 |
| 경북 | 45 | | | 23 | 7 | 8 | 5 | 1 | 1 | |
| 경남 | 33 | | | 14 | 4 | 6 | 3 | 5 | 1 | |
| 전북 | 12 | | | 7 | 2 | 2 | 1 | | | |
| 전남 | 33 | 2 | | 10 | 3 | 9 | 6 | | 1 | 2 |
| 강원 | 25 | | | 8 | 7 | 5 | 3 | | 1 | 1 |
| 제주 | 10 | | | 6 | 3 | 1 | | | | |
| 무응답 | 10 | | | 3 | | 1 | | | 1 | 5 |
| 합계 (비율) | 322 (100) | 5 (1.6) | | 123 (38.2) | 64 (19.9) | 56 (17.4) | 32 (9.9) | 18 (5.6) | 13 (4.0) | 11 (3.4) |

(3) 응답업체 개관-종업원수

(단위: 개사, %)

| | 소계 | 11~20 | 21~30 | 31~40 | 41~50 | 51~100 | 101~200 | 201~300 | 301이상 | 무응답 |
|-----|--------------|---------------|--------------|--------------|-------------|-------------|------------|------------|------------|-------------|
| 서울 | 18 | 4 | 7 | 1 | 1 | 1 | 1 | 1 | 1 | 1 |
| 부산 | 7 | 2 | 2 | 1 | 1 | 1 | | | | |
| 대구 | 16 | 7 | 5 | 2 | | 1 | | | 1 | |
| 인천 | 12 | 3 | 2 | 5 | 1 | | 1 | | | |
| 광주 | 6 | 3 | 1 | 2 | | | | | | |
| 대전 | 9 | 4 | 3 | | | 2 | | | | |
| 울산 | 3 | 2 | 1 | | | | | | | |
| 경기 | 35 | 7 | 11 | 6 | 4 | 6 | | | | 1 |
| 충북 | 24 | 19 | 2 | 3 | | | | | | |
| 충남 | 24 | 11 | 3 | 2 | 2 | 3 | 1 | | | 2 |
| 경북 | 45 | 20 | 8 | 5 | 6 | 5 | 1 | | | |
| 경남 | 33 | 17 | 7 | 2 | 2 | 2 | 1 | 1 | | 1 |
| 전북 | 12 | 8 | 1 | 1 | 1 | 1 | | | | |
| 전남 | 33 | 12 | 9 | 1 | 3 | 5 | 1 | | | 2 |
| 강원 | 25 | 12 | 8 | 1 | 1 | 2 | 1 | | | |
| 제주 | 10 | 6 | 4 | | | | | | | |
| 무응답 | 10 | 2 | 1 | 3 | | | | | | 4 |
| 합계 | 322 (100) | 139 (43.2) | 75 (23.3) | 35 (10.9) | 22 (6.8) | 29 (9.0) | 7 (2.2) | 2 (0.6) | 2 (0.6) | 11 (3.4) |

(4) 경영상태가 개선된 이유

(단위: 개사, %)

| 구분 | 기준 | 소계 |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건설업 보호제도 | 경영개선 노력 | 사업전환및 다각화추진 | 기타 |
|------------|--------|-----|------------------|----------------|------------------|------------------|----------------|
| 전체 | 5년전과비교 | 145 | 35 (24.1) | 4 (2.7) | 86 (59.3) | 12 (8.3) | 7 (4.8) |
| | 1년전과비교 | 86 | 8 (9.3) | 3 (3.5) | 59 (68.6) | 10 (11.6) | 6 (7.0) |
| 서울 | 5년전과비교 | 5 | | | 3 | 2 | |
| | 1년전과비교 | 3 | | | 2 | 1 | |
| 경기 | 5년전과비교 | 14 | 4 | | 7 | 2 | 1 |
| | 1년전과비교 | 7 | 1 | | 3 | 2 | 1 |
| 인천 | 5년전과비교 | 4 | 1 | 1 | 2 | | |
| | 1년전과비교 | 2 | | | 2 | | |
| 충북 | 5년전과비교 | 8 | 1 | 5 | | | 2 |
| | 1년전과비교 | 5 | 1 | 2 | 1 | | 1 |
| 충남(대전) | 5년전과비교 | 17 | 4 | 1 | 12 | | |
| | 1년전과비교 | 9 | | | 8 | 1 | |
| 경북(대구) | 5년전과비교 | 35 | 6 | | 23 | 3 | 3 |
| | 1년전과비교 | 20 | 2 | | 14 | 1 | 3 |
| 경남(부산, 울산) | 5년전과비교 | 19 | 4 | 1 | 13 | 1 | |
| | 1년전과비교 | 16 | 1 | 1 | 10 | 4 | |
| 전북 | 5년전과비교 | 5 | 1 | | 3 | 1 | |
| | 1년전과비교 | 4 | | 1 | 3 | | |
| 전남(광주) | 5년전과비교 | 21 | 8 | | 12 | 1 | |
| | 1년전과비교 | 13 | 1 | | 12 | | |
| 강원 | 5년전과비교 | 11 | 5 | 1 | 2 | 2 | 1 |
| | 1년전과비교 | 7 | 2 | | 4 | 1 | |
| 제주 | 5년전과비교 | 5 | 1 | | 4 | | |
| | 1년전과비교 | 4 | | | 3 | | 1 |
| 무응답 | 5년전과비교 | 1 | | | | 1 | |
| | 1년전과비교 | | | | | | |

(5) 경영상태가 악화된 이유

(단위: 개사, %)

| 구분 | 기준 | 소계 | 경쟁심화 | 물량감소 | 경영개선 노력부족 | 원가상승 | 경제침체 | 기타 |
|------------|--------|-----|------------------|------------------|----------------|----------------|----------------|----------------|
| 전체 | 5년전과비교 | 122 | 95 (77.9) | 16 (13.1) | 3 (2.5) | 2 (1.6) | 6 (4.9) | |
| | 1년전과비교 | 159 | 59 (37.1) | 81 (50.8) | 1 (0.6) | 8 (5.0) | 9 (5.7) | 1 (0.6) |
| 서울 | 5년전과비교 | 10 | 7 | 2 | 1 | | | |
| | 1년전과비교 | 10 | 3 | 5 | | | 2 | |
| 경기 | 5년전과비교 | 18 | 14 | 3 | 1 | | 1 | |
| | 1년전과비교 | 25 | 9 | 13 | | 1 | 2 | |
| 인천 | 5년전과비교 | 4 | 3 | | | | 1 | |
| | 1년전과비교 | 6 | | 5 | | | 1 | |
| 충북 | 5년전과비교 | 9 | 7 | 2 | | | | |
| | 1년전과비교 | 12 | 5 | 6 | | 1 | | |
| 충남(대전) | 5년전과비교 | 9 | 9 | | | | | |
| | 1년전과비교 | 13 | 3 | 9 | | | 1 | |
| 경북(대구) | 5년전과비교 | 23 | 21 | 2 | | | | |
| | 1년전과비교 | 28 | 13 | 13 | 1 | 1 | | |
| 경남(부산, 울산) | 5년전과비교 | 14 | 11 | 2 | | | 1 | |
| | 1년전과비교 | 19 | 9 | 8 | | 2 | | |
| 전북 | 5년전과비교 | 7 | 7 | | | | | |
| | 1년전과비교 | 7 | 4 | 3 | | | | |
| 전남(광주) | 5년전과비교 | 9 | 7 | 1 | | | | 1 |
| | 1년전과비교 | 13 | 4 | 7 | | | 2 | |
| 강원 | 5년전과비교 | 8 | 6 | | | 1 | 1 | |
| | 1년전과비교 | 12 | 6 | 5 | | 1 | | |
| 제주 | 5년전과비교 | 4 | | 2 | 1 | 1 | | |
| | 1년전과비교 | 5 | | 4 | | 1 | | |
| 무응답 | 5년전과비교 | 6 | 3 | 2 | | | 1 | |
| | 1년전과비교 | 7 | 2 | 3 | | 2 | | |

(6) 건설경기 낙관적 전망 근거(단기, 중장기)

(단위: 개사, %)

| 구분 | 기준 | 소계 | 신수요창출 | 지방자치제 도발전 | 중소건설보 호제도 | 경제활성화 | 건설산업구 조개편 | 기타 |
|------------|-----|----|-----------|--------------|--------------|-----------|--------------|----|
| 전체 | 단기 | 25 | 7 (28.0) | 11 (44.0) | | 4 (16.0) | 3 (12.0) | |
| | 중장기 | 73 | 23 (31.5) | 18 (24.7) | 4 (5.5) | 18 (24.7) | 10 (13.7) | |
| 서울 | 단기 | 4 | 3 | | 1 | | | |
| | 중장기 | 8 | 4 | 1 | | 2 | 1 | |
| 경기 | 단기 | 3 | | 2 | | | 2 | |
| | 중장기 | 9 | 2 | 2 | | 3 | 2 | |
| 인천 | 단기 | 0 | | | | | | |
| | 중장기 | 3 | 1 | 1 | | 1 | | |
| 충북 | 단기 | 5 | | 3 | | 2 | | |
| | 중장기 | 5 | 1 | 3 | | | 1 | |
| 충남(대전) | 단기 | 3 | 1 | | 2 | | | |
| | 중장기 | 3 | 1 | | 2 | | | |
| 경북(대구) | 단기 | 8 | 1 | 3 | | 3 | 1 | |
| | 중장기 | 15 | 6 | 1 | 4 | 3 | 1 | |
| 경남(부산, 울산) | 단기 | 3 | 2 | 1 | | | | |
| | 중장기 | 9 | 5 | 2 | | 1 | 1 | |
| 전북 | 단기 | 0 | | | | | | |
| | 중장기 | 1 | | | | | 1 | |
| 전남(광주) | 단기 | 4 | 3 | | | | 1 | |
| | 중장기 | 14 | 3 | 6 | | 3 | 2 | |
| 강원 | 단기 | 1 | | 1 | | | | |
| | 중장기 | 4 | | 1 | | 2 | 1 | |
| 제주 | 단기 | 0 | | | | | | |
| | 중장기 | 2 | | 1 | | 1 | | |
| 무응답 | 단기 | 0 | | | | | | |
| | 중장기 | 0 | | | | | | |

(7) 향후 경영상태 낙관적 전망 근거(단기, 중장기)

(단위: 개사, %)

| 구분 | 기준 | 소계 | 경영개선 노력 | 전환 및 다각화 | 산업구조 개편 | 물량증가 | 경제회복 | 중소건설 보호제도 | 기타 |
|------------|-----|-----|------------|-------------|------------|----------|-----------|--------------|---------|
| 전체 | 단기 | 119 | 86 (72.3) | 12 (10.1) | 4 (3.4) | 10 (8.4) | 3 (2.5) | 2 (1.7) | 2 (1.7) |
| | 중장기 | 135 | 51 (37.8) | 29 (21.5) | 16 (11.9) | 10 (7.4) | 26 (19.3) | 1 (0.7) | 2 (1.5) |
| 서울 | 단기 | 10 | 7 | 2 | | 1 | | | |
| | 중장기 | 11 | 2 | 7 | | 1 | 1 | | |
| 경기 | 단기 | 19 | 18 | | 1 | | | | |
| | 중장기 | 18 | 7 | 3 | 3 | 2 | 3 | | |
| 인천 | 단기 | 2 | 1 | | | 1 | | | |
| | 중장기 | 6 | 3 | 1 | | | 2 | | |
| 충북 | 단기 | 6 | 4 | 1 | 1 | | | | |
| | 중장기 | 5 | 3 | 1 | | | 1 | | |
| 충남(대전) | 단기 | 12 | 8 | 1 | | 3 | | | |
| | 중장기 | 10 | 5 | 1 | 2 | | 2 | | |
| 경북(대구) | 단기 | 22 | 16 | 2 | | 1 | 1 | 1 | 1 |
| | 중장기 | 22 | 8 | 5 | 1 | 2 | 3 | 1 | 1 |
| 경남(부산, 울산) | 단기 | 14 | 9 | 3 | | 1 | 1 | | |
| | 중장기 | 19 | 7 | 3 | 4 | 3 | 2 | | |
| 전북 | 단기 | 2 | 2 | | | | | | |
| | 중장기 | 3 | | 1 | 1 | | 1 | | |
| 전남(광주) | 단기 | 16 | 12 | 2 | 1 | 1 | | | |
| | 중장기 | 21 | 9 | 1 | 4 | 4 | 7 | | |
| 강원 | 단기 | 11 | 6 | 1 | 1 | 2 | | 1 | |
| | 중장기 | 14 | 5 | 4 | 1 | 2 | 2 | | |
| 제주 | 단기 | 2 | 2 | | | | | | |
| | 중장기 | 3 | 2 | 1 | | | | | |
| 무응답 | 단기 | 3 | 1 | | | | 1 | | 1 |
| | 중장기 | 3 | | 1 | | | 1 | | 1 |

(8) 향후 경영상태 비관적 전망 근거(단기, 중장기)

(단위: 개사, %)

| 구분 | 기준 | 소계 | 경쟁 심화 | 물량감소 | 경제회복 요원 | 제도변화 | 원가상승 | 기타 |
|------------|-----|-----|------------------|------------------|------------------|------------------|----------------|----------------|
| 전체 | 단기 | 119 | 64 (53.8) | 34 (28.6) | 15 (12.6) | 5 (4.2) | 1 (0.8) | |
| | 중장기 | 113 | 53 (46.9) | 32 (28.3) | 11 (9.7) | 13 (11.5) | 2 (1.8) | 2 (1.8) |
| 서울 | 단기 | 5 | 3 | 1 | 1 | | | |
| | 중장기 | 5 | 2 | 3 | | | | |
| 경기 | 단기 | 11 | 5 | 3 | 3 | | | |
| | 중장기 | 10 | 2 | 6 | 1 | 1 | | |
| 인천 | 단기 | 5 | 2 | 1 | 1 | 1 | | |
| | 중장기 | 6 | 1 | 3 | | 1 | | 1 |
| 충북 | 단기 | 14 | 10 | 4 | | | | |
| | 중장기 | 14 | 7 | 5 | | 2 | | |
| 충남(대전) | 단기 | 12 | 7 | 5 | | | | |
| | 중장기 | 15 | 10 | 2 | 2 | 1 | | |
| 경북(대구) | 단기 | 20 | 9 | 5 | 3 | 3 | | |
| | 중장기 | 19 | 9 | 5 | 2 | 2 | 1 | |
| 경남(부산, 울산) | 단기 | 19 | 9 | 6 | 4 | | | |
| | 중장기 | 15 | 8 | 2 | 3 | 2 | | |
| 전북 | 단기 | 8 | 5 | 2 | | 1 | | |
| | 중장기 | 6 | 3 | 1 | 1 | 1 | | |
| 전남(광주) | 단기 | 10 | 6 | 3 | 1 | | | |
| | 중장기 | 8 | 4 | 2 | 1 | 1 | | |
| 강원 | 단기 | 6 | 3 | 2 | | | 1 | |
| | 중장기 | 7 | 4 | 1 | 1 | | 1 | |
| 제주 | 단기 | 4 | 1 | 2 | 1 | | | |
| | 중장기 | 4 | 1 | 1 | | 1 | | 1 |
| 무응답 | 단기 | 5 | 4 | | 1 | | | |
| | 중장기 | 4 | 2 | 1 | | 1 | | |

(9) 지방계약법 제정 평가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매우긍정적 | 긍정적 | 영향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전체 | 308 | 20 (6.5) | 176 (57.1) | 99 (32.1) | 13 (4.2) | |
| 서울 | 16 | | 7 | 8 | 1 | |
| 경기 | 34 | 2 | 18 | 12 | 2 | |
| 인천 | 11 | | 9 | 2 | | |
| 충북 | 23 | 3 | 14 | 6 | | |
| 충남(대전) | 33 | 3 | 21 | 8 | 1 | |
| 경북(대구) | 52 | 1 | 29 | 16 | 6 | |
| 경남(부산, 울산) | 32 | | 18 | 12 | 2 | |
| 전북 | 11 | | 7 | 4 | | |
| 전남(광주) | 24 | | 10 | 13 | 1 | |
| 강원 | 24 | 3 | 14 | 7 | | |
| 제주 | 9 | | 4 | 5 | | |
| 무응답 | 10 | 1 | 3 | 6 | | |

(10) 지방계약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유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지자체계약 제도발전 | 지역특성계 약제도시행 | 지자체발주 물량 증대 | 담당공무원 전문성제고 | 기타 |
|------------|-----|---------------|----------------|----------------|----------------|----|
| 전체 | 194 | 58 (29.9) | 50 (25.8) | 81 (41.8) | 5 (2.6) | |
| 서울 | 7 | | 5 | 2 | | |
| 경기 | 21 | 6 | 5 | 10 | | |
| 인천 | 9 | 6 | 2 | 1 | | |
| 충북 | 16 | 2 | 5 | 8 | 1 | |
| 충남(대전) | 19 | 9 | 4 | 5 | 1 | |
| 경북(대구) | 40 | 10 | 11 | 18 | 1 | |
| 경남(부산, 울산) | 27 | 7 | 7 | 12 | 1 | |
| 전북 | 7 | 2 | 1 | 3 | 1 | |
| 전남(광주) | 24 | 6 | 5 | 13 | | |
| 강원 | 16 | 8 | 3 | 5 | | |
| 제주 | 4 | 1 | 1 | 2 | | |
| 무응답 | 4 | 1 | 1 | 2 | | |

(11) BTL사업 확대에 대한 평가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매우긍정적 | 긍정적 | 영향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전체 | 309 | 3 (0.9) | 19 (6.1) | 34 (11.0) | 92 (29.8) | 151 (48.9) |
| 서울 | 16 | | 1 | 5 | 3 | 7 |
| 경기 | 34 | | 1 | 4 | 6 | 23 |
| 인천 | 11 | | | 1 | 2 | 8 |
| 충북 | 23 | | | 1 | 8 | 14 |
| 충남(대전) | 33 | | 1 | 5 | 8 | 19 |
| 경북(대구) | 57 | 1 | 3 | 2 | 26 | 25 |
| 경남(부산, 울산) | 41 | | 3 | 7 | 13 | 18 |
| 전북 | 11 | | 1 | | 4 | 6 |
| 전남(광주) | 39 | 2 | 4 | 4 | 9 | 20 |
| 강원 | 25 | | 3 | 3 | 11 | 8 |
| 제주 | 9 | | 2 | 2 | 2 | 3 |
| 무응답 | 10 | | 1 | | 3 | 6 |

(12) BTL 사업 확대 부정적 평가 이유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중소업체 물량축소 | 중소업체 참여불리 | 수익성 저하 | 지역경제활 성화부정적 | 기타 |
|------------|-----|-------------------|-------------------|-----------------|----------------|----------------|
| 전체 | 262 | 137 (52.3) | 110 (42.0) | 11 (42.) | 1 (0.4) | 2 (0.8) |
| 서울 | 12 | 4 | 6 | 1 | | 1 |
| 경기 | 30 | 18 | 11 | 1 | | |
| 인천 | 11 | 8 | 2 | 1 | | |
| 충북 | 23 | 13 | 10 | | | |
| 충남(대전) | 27 | 13 | 13 | 1 | | |
| 경북 | 50 | 27 | 20 | 3 | | |
| 경남(부산, 울산) | 33 | 20 | 12 | 1 | | |
| 전북 | 11 | 5 | 6 | | | |
| 전남(광주) | 30 | 15 | 14 | 1 | | |
| 강원 | 20 | 7 | 9 | 2 | 1 | 1 |
| 제주 | 6 | 2 | 4 | | | |
| 무응답 | 9 | 5 | 4 | | | |

(13)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유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지자체계약 제도발전 | 지역특성계 약제도시행 | 지자체발주 물량 증대 | 담당공무원 전문성제고 | 기타 |
|-----------|-----|------------------|-----------------|----------------|------------------|----------------|
| 전체 | 144 | 81 (56.3) | 13 (9.1) | 8 (5.6) | 33 (22.9) | 9 (6.3) |
| 서울 | 10 | 3 | | | 7 | |
| 경기 | 16 | 11 | | 1 | 4 | |
| 인천 | 4 | 2 | 1 | | | 1 |
| 충북 | 14 | 11 | 1 | | 1 | 1 |
| 충남(대전) | 13 | 9 | 1 | 1 | 1 | 1 |
| 경북(대구) | 28 | 12 | 3 | 4 | 8 | 1 |
| 경남(부산,울산) | 22 | 12 | 3 | | 5 | 2 |
| 전북 | 5 | 3 | 2 | | | |
| 전남(광주) | 15 | 10 | | | 4 | 1 |
| 강원 | 12 | 6 | 2 | 1 | 1 | 2 |
| 제주 | 4 | 1 | | 1 | 2 | |
| 무응답 | 1 | 1 | | | | |

(14) 지역제한입찰제도 확대에 대한 평가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매우긍정적 | 긍정적 | 영향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전체 | 311 | 99 (31.8) | 150 (48.2) | 38 (12.2) | 19 (6.1) | 5 (1.6) |
| 서울 | 16 | | 7 | 4 | 4 | 1 |
| 경기 | 34 | 11 | 16 | 5 | 2 | |
| 인천 | 11 | 5 | 4 | 1 | 1 | |
| 충북 | 24 | 5 | 14 | 2 | 2 | 1 |
| 충남(대전) | 33 | 14 | 12 | 4 | 2 | 1 |
| 경북(대구) | 59 | 23 | 27 | 7 | 1 | 1 |
| 경남(부산,울산) | 41 | 12 | 24 | 3 | 1 | 1 |
| 전북 | 11 | 3 | 6 | | 2 | |
| 전남(광주) | 38 | 6 | 21 | 8 | 3 | |
| 강원 | 25 | 11 | 11 | 2 | 1 | |
| 제주 | 9 | 6 | 2 | 1 | | |
| 무응답 | 10 | 3 | 6 | 1 | | |

(15)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대한 평가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매우긍정적 | 긍정적 | 영향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전체 | 308 | 81 (26.3) | 177 (57.5) | 34 (11.0) | 16 (5.2) | |
| 서울 | 16 | | 7 | 3 | 6 | |
| 경기 | 34 | 7 | 22 | 5 | | |
| 인천 | 11 | 4 | 5 | 1 | 1 | |
| 충북 | 24 | 6 | 15 | 2 | 1 | |
| 충남(대전) | 32 | 12 | 17 | 3 | | |
| 경북(대구) | 58 | 11 | 37 | 6 | 4 | |
| 경남(부산, 울산) | 42 | 14 | 24 | 3 | 1 | |
| 전북 | 9 | 4 | 5 | | | |
| 전남(광주) | 38 | 9 | 21 | 8 | | |
| 강원 | 25 | 10 | 11 | 3 | 1 | |
| 제주 | 9 | 2 | 6 | | 1 | |
| 무응답 | 10 | 2 | 7 | | 1 | |

(16) 지역업체가산제도에 대한 평가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매우긍정적 | 긍정적 | 영향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전체 | 309 | 96 (31.1) | 172 (55.7) | 34 (11.0) | 7 (2.3) | |
| 서울 | 16 | 2 | 7 | 6 | 1 | |
| 경기 | 34 | 10 | 18 | 5 | 1 | |
| 인천 | 11 | 6 | 3 | 2 | | |
| 충북 | 23 | 9 | 11 | 3 | | |
| 충남(대전) | 33 | 10 | 20 | 3 | | |
| 경북(대구) | 58 | 15 | 38 | 3 | 2 | |
| 경남(부산, 울산) | 42 | 15 | 25 | 1 | 1 | |
| 전북 | 10 | 4 | 6 | | | |
| 전남(광주) | 38 | 12 | 19 | 6 | 1 | |
| 강원 | 25 | 6 | 14 | 4 | 1 | |
| 제주 | 9 | 5 | 4 | | | |
| 무응답 | 10 | 2 | 7 | 1 | | |

(17) 조달청 등급별 입찰제도에 대한 평가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매우긍정적 | 긍정적 | 영향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전체 | 306 | 36 (11.8) | 165 (53.9) | 76 (24.8) | 25 (8.2) | 4 (1.3) |
| 서울 | 16 | 2 | 5 | 5 | 4 | |
| 경기 | 32 | 3 | 15 | 11 | 3 | |
| 인천 | 11 | 1 | 8 | 2 | | |
| 충북 | 23 | 4 | 13 | 3 | 2 | 1 |
| 충남(대전) | 33 | 6 | 15 | 10 | 1 | 1 |
| 경북(대구) | 57 | 3 | 35 | 16 | 3 | |
| 경남(부산, 울산) | 41 | 5 | 25 | 5 | 5 | 1 |
| 전북 | 10 | 1 | 6 | 2 | 1 | |
| 전남(광주) | 39 | 6 | 17 | 11 | 5 | |
| 강원 | 25 | 5 | 13 | 6 | 1 | |
| 제주 | 9 | | 6 | 3 | | |
| 무응답 | 10 | | 7 | 2 | | 1 |

(18) 일반전문 건설업 업역제한 철폐 찬성 이유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건설산업 구조개편 | 건설업체 균형발전 | 부실업체 퇴출 | 수익증대 | 기업활동 자유보장 |
|------------|----|--------------|--------------|------------|-----------|--------------|
| 전체 | 77 | 23 (29.9) | 13 (16.9) | 11 (14.3) | 15 (19.5) | 15 (19.5) |
| 서울 | 6 | 2 | 1 | | | 3 |
| 경기 | 10 | 5 | 2 | 1 | 2 | |
| 인천 | 3 | 1 | | | | 2 |
| 충북 | 9 | 3 | 1 | 2 | 3 | |
| 충남(대전) | 6 | 2 | 2 | | 2 | |
| 경북(대구) | 16 | 3 | 3 | 4 | 1 | 5 |
| 경남(부산, 울산) | 4 | 2 | 1 | | 1 | |
| 전북 | 2 | | | | 1 | 1 |
| 전남(광주) | 8 | 2 | 1 | 3 | 2 | |
| 강원 | 5 | 2 | 1 | | 1 | 1 |
| 제주 | 2 | 1 | | 1 | | |
| 무응답 | 6 | | 1 | | 2 | 3 |

(19) 일반전문 건설업 업역제한 철폐 반대 이유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경쟁 심화 | 전문화 불가능 | 중소업체 경쟁력저하 | 하도급업체 전략 | 수익저하 |
|------------|-----|-----------|-----------|------------|----------|---------|
| 전체 | 176 | 68 (38.6) | 68 (38.6) | 29 (16.5) | 10 (5.7) | 1 (0.6) |
| 서울 | 10 | 4 | 3 | 2 | | 1 |
| 경기 | 18 | 9 | 6 | 2 | 1 | |
| 인천 | 7 | 3 | 3 | 1 | | |
| 충북 | 8 | | 4 | 3 | 1 | |
| 충남(대전) | 21 | 9 | 9 | 1 | 2 | |
| 경북(대구) | 31 | 11 | 12 | 6 | 2 | |
| 경남(부산, 울산) | 28 | 10 | 14 | 3 | 1 | |
| 전북 | 7 | 6 | | 1 | | |
| 전남(광주) | 23 | 7 | 9 | 5 | 2 | |
| 강원 | 14 | 6 | 5 | 3 | | |
| 제주 | 7 | 3 | 2 | 2 | | |
| 무응답 | 2 | | 1 | | 1 | |

(20) PQ,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 방식 개선 필요성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있다 | 관심없다 | 없다 |
|------------|-----|-----------|-----------|------------|
| 전체 | 285 | 55 (19.3) | 42 (14.7) | 188 (66.0) |
| 서울 | 16 | 4 | 1 | 11 |
| 경기 | 32 | 6 | 4 | 22 |
| 인천 | 9 | 3 | 2 | 4 |
| 충북 | 23 | 2 | 3 | 18 |
| 충남(대전) | 30 | 6 | 20 | 4 |
| 경북(대구) | 52 | 10 | 8 | 34 |
| 경남(부산, 울산) | 40 | 9 | 6 | 25 |
| 전북 | 9 | 1 | | 8 |
| 전남(광주) | 32 | 8 | 6 | 18 |
| 강원 | 23 | 4 | 7 | 12 |
| 제주 | 9 | 2 | 1 | 6 |
| 무응답 | 10 | | | 10 |

(21) 재무비율 평가 항목 중 적절치 못한 항목(시공능력순위별)

(단위: 개사, %)

| 시공능력 순위 | 소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전체 | 228 | 매출액순이익률 46 (20.1) | 매출액영업이익률 44 (19.2) | 부채비율 28 (12.2) |
| 78 ~ 200 | 16 | 부채비율 5 | 신용평가등급 3 |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비율 3 |
| 201 ~ 400 | 34 | 매출액순이익률 7 | 매출액영업이익률 7 | 부채비율 6 |
| 401 ~ 600 | 23 | 매출액영업이익률 5 | 매출액순이익률 5 | 부채비율 3 |
| 601 ~ 800 | 22 | 매출액순이익률 4 | 자산회전율 3 | 신용평가등급 3 |
| 801 ~ 1000 | 25 | 매출액영업이익률 6 | 매출액순이익률 6 | 부채비율 3 |
| 1001 ~ 1500 | 66 | 매출액영업이익률 15 | 매출액순이익률 15 |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비율 7 |
| 1501 ~ 2077 | 37 | 매출액영업이익률 8 | 매출액순이익률 6 | 자산회전율 5 |
| 무응답 | 5 | 매출액순이익률 2 | 총자산순이익률 2 | 부채비율 1 |

(22) 현행 기술개발 관련제도의 평가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매우 긍정적임 | 긍정적임 | 실제효과 미미 | 전혀없음 |
|------------|-----|-----------------|------------------|-------------------|------------------|
| 전체 | 289 | 13 (4.5) | 61 (21.1) | 169 (58.5) | 46 (15.9) |
| 서울 | 15 | | 8 | 5 | 2 |
| 경기 | 28 | | 7 | 19 | 2 |
| 인천 | 10 | | 3 | 6 | 1 |
| 충북 | 24 | 1 | 2 | 18 | 3 |
| 충남(대전) | 31 | 2 | 7 | 12 | 10 |
| 경북(대구) | 54 | 1 | 4 | 40 | 9 |
| 경남(부산, 울산) | 40 | 2 | 10 | 20 | 8 |
| 전북 | 12 | | 1 | 10 | 1 |
| 전남(광주) | 35 | 4 | 10 | 17 | 4 |
| 강원 | 23 | 1 | 6 | 13 | 3 |
| 제주 | 9 | | 2 | 6 | 1 |
| 무응답 | 8 | 2 | 1 | 3 | 2 |

(23) 현행 기술개발 관련 제도의 평가(시공능력순위별)

(단위: 개사, %)

| 시공능력순위 | 소계 | 매우긍정 | 긍정적임 | 실제효과미미 | 전혀없음 |
|-------------|-----|-----------------|------------------|-------------------|------------------|
| 전체 | 289 | 13 (4.5) | 61 (21.1) | 169 (58.5) | 46 (15.9) |
| 77 ~ 200 | 21 | 2 | 8 | 9 | 2 |
| 201 ~ 400 | 40 | | 12 | 26 | 2 |
| 401 ~ 600 | 25 | 1 | 5 | 17 | 2 |
| 601 ~ 800 | 34 | 1 | 4 | 26 | 3 |
| 801 ~ 1000 | 29 | 1 | 6 | 14 | 8 |
| 1001 ~ 1500 | 79 | 4 | 16 | 44 | 15 |
| 1501 ~ 2077 | 54 | 3 | 9 | 30 | 12 |
| 무응답 | 7 | 1 | 1 | 3 | 2 |

(24) 신기술개발 유도 대책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현행 제도 골격 보완 | 중소업체 별도 제도 필요 | 기술개발 요원 |
|-----------|-----|-------------------|------------------|------------------|
| 전체 | 271 | 130 (48.0) | 74 (27.3) | 67 (24.7) |
| 서울 | 14 | 6 | 6 | 2 |
| 경기 | 27 | 14 | 8 | 5 |
| 인천 | 10 | 4 | 4 | 2 |
| 충북 | 23 | 11 | 6 | 6 |
| 충남(대전) | 27 | 14 | 5 | 8 |
| 경북(대구) | 56 | 24 | 16 | 16 |
| 경남(부산,울산) | 39 | 19 | 12 | 8 |
| 전북 | 8 | 3 | 2 | 3 |
| 전남(광주) | 33 | 20 | 6 | 7 |
| 강원 | 20 | 9 | 4 | 7 |
| 제주 | 7 | 2 | 3 | 2 |
| 무응답 | 7 | 4 | 2 | 1 |

(25)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사항

(단위: 개사, %)

| 구분 | 소계 | 대출한도부족 | 제출서류과다 | 복잡시간과다 | 수수료 | 담보요구 | 기타 |
|------------|-----|-----------|----------|-----------|----------|------------|----------|
| 전체 | 268 | 63 (23.5) | 25 (9.3) | 52 (19.4) | 11 (4.1) | 105 (39.2) | 12 (4.5) |
| 서울 | 14 | 5 | 1 | 2 | 1 | 4 | 1 |
| 경기 | 27 | 7 | 1 | 7 | 1 | 11 | |
| 인천 | 11 | 2 | | 3 | | 5 | 1 |
| 충북 | 21 | 5 | 3 | 4 | | 7 | 2 |
| 충남(대전) | 29 | 8 | 3 | 5 | 2 | 10 | 1 |
| 경북(대구) | 56 | 14 | 5 | 13 | 1 | 20 | 3 |
| 경남(부산, 울산) | 33 | 8 | 2 | 4 | 2 | 14 | 3 |
| 전북 | 8 | 1 | 1 | 2 | | 4 | |
| 전남(광주) | 34 | 6 | 6 | 7 | 3 | 12 | |
| 강원 | 22 | 3 | 2 | 2 | | 14 | 1 |
| 제주 | 6 | 2 | 1 | | 1 | 2 | |
| 무응답 | 7 | 2 | | 3 | | 2 | |

부록 2. 지역별 간담회 결과

(1) 경기지역 간담회

| | |
|---|--|
| ◆ 일시 | 2005. 8. 2(화), 10:00 |
| ◆ 장소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의실 |
| ◆ 참석자 | 송용섭(경기도회 진흥부장), 서인석(진흥부 과장), 이홍석(대일건설(주) 상무이사), 고태석(석진건설(주) 상무이사), 이광상(한동건설(주) 상무이사) |
| <p>◁ 주요 의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건설경기는 IMF때보다 어려움. 특히, 학교시설 등의 BTL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업체의 공공수주는 크게 감소하고 있음. - 건설관련 정책의 잦은 변화와 검증되지 않은 제도(예를 들어 BTL사업)의 급작스런 확대 실시로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애로점이 많으며, 중소기업체를 배려하는 재정의 운영이 필요함. - 공단 지역의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공장의 건설이 크게 축소되었음. 공장을 건립하여 예상되는 수익보다 지가의 상승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 있음. - BTL사업에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며(금융측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실시는 유보하여야 함. - 신기술지정을 받지 않은 기술이라고 해도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형 국책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하며, 하도급신고 규제의 철폐 필요 | |

(2) 대전·충남 지역 간담회

| | |
|--|---|
| 일시 | 2005. 8. 2(화), 14:00 |
| 장소 |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회의실 |
| 참석자 | 신동선(충남도회 사무처 과장), 홍성기(충남도회 사무처 대리), 박범수(한빛종합건설 차장), 김윤건(형진건설 부장), 연규정(대국건설 부장), 장우진(경남기업 업무팀) |
| <p>◁ 주요 의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사의 수주가 작년 대비 1/3 정도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으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효과도 미미하며, 이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분석됨. - 지역업체가 개발사업(골프장 건설 등)에 진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일괄 인허가 조치하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 필요 - 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해 입찰참가자격에 4대보험 완납을 조건화하는 것 필요함. 4대 보험료 납부는 국내 기업활동의 기본이므로 이의 완납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도 부실업체의 퇴출효과가 있을 것임. - 중소기업청의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출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이용이 매우 어려움.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필요함. - 직접시공의무화 제도와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는 지역 건설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건설관련 법제도의 제정 시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하는 내용이 확대되어야 함. | |

(3) 대구·경북 지역 간담회

| | |
|--|--|
| 일시 | 2005. 8. 3(수), 10:00 |
| 장소 |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의실 |
| 참석자 | 김광영(대구시회 사무처장), 김준엽(신성종합건설 차장), 이용훈(주안종합건설 이사), 박경원(삼아건설 차장), 박상원(화성개발 차장) |
| <p>◁ 주요 의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체감 경기는 매우 어려움. 실제로 지난해 대비 상빈기 수주실적이 160억 정도 감소하였으며, 계약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34개사(19%)나 되고 있음. -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공사에 대한 예산의 배정이 절실하며, BTL초기 참여 비용의 보전 대책 필요함. - 건설현장 재해 전문 브로커 근절책 검토 필요하며,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대출의 확대가 필요함. - 폐기물처리업자와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입찰질서의 왜곡이 심하므로 개선 검토 필요함. - 일부 발주 기관의 공사 원가 저가 계상으로 인해 지역업체의 불만 및 피해가 극심함.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회사에게 계약체결거부권 부여 필요. -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 완공 후 대금 수령에 어려움이 많음. 민간공사 대금수령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

(4) 부산경남 지역 간담회

| | |
|---|---|
| 일시 | 2005. 8. 3(수), 14:00 |
| 장소 |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의실 |
| 참석자 | 김태하(부산광역시회 부장), 최민욱(부산광역시회 과장), 김병수(세정건설 부장), 권영태(청진종합건설 상무) |
| <p>◁ 주요 의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은 APEC위주로 예산이 책정되어 실제로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의 물량은 크게 감소하였음. - BTL사업의 경우 SPC는 자기 책임하에 시공권을 제외한 설계, 자금조달 등 투자자로서의 운영기능만 담당토록 하고, BTL사업 물량은 단위사업별로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종전대로 관계 법령에 의거 경쟁입찰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의무화. 소규모 공사는 BTL사업에서 제외 - 지역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지자체 차원에서 재개발 예정지 주민과 정기적 간담회 개최 지역업체 참여 유도 등). - 지역의 대형공사 턴키·대안입찰 발주 자제하고, 발주예정인 대형공사는 다수의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될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분할 설계 발주하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 촉진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제도 도입과 함께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현재 기초 지자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입찰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건설업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함. | |

(5) 광주전남 지역 간담회

| | |
|--|--|
| 일시 | 2005. 8. 4(목), 10:00 |
| 장소 |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의실 |
| 참석자 | 조일환(전남도회 부장), 이현옥(세광기업 부장), 양오형(영진건설 과장), 정현희(동광건설 이사), 박종두(해동건설 이사), 안용연(양진건설 과장) |
| <p>◁ 주요 의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업체의 30% 정도가 금년들어 수주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지역업체의 체감경기가 매우 열악함. - 중소 및 중견업체의 공사물량 축소와 함께 장기계속공사에 배정되는 예산이 크게 부족하여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관리비는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의 책정이 필요함. - 골프장 등 개발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초법적 민원으로 사업 및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개발사업 관련 민원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건설공사 입찰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업무담당자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음. - BTL사업 입찰 시 지역업체 규모별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국토유지건설사무소 공사발주지역을 지역 소규모 업체 수주기회 확보와 국가계약법상의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통합발주 방식을 지양하고 종전 개별사업장별로 환원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

부록 3. 설문조사지

중소 건설업 경영실태 조사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동으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사 결과 및 자료는 실태 파악 및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시어 동봉한 반송용 봉투 또는 FAX(02-3441-0707)로 7월 27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1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부연구위원(02-3441-0819, wskang@cerik.re.kr)
안지용 연구원(02-3441-0714, 99yana@cerik.re.kr)
Fax : 02-3441-0707

◎ 일반 사항

| | | | |
|--------|--|--------------------|--|
| 회사소재지 | (광역시, 도) | 자본금 (영업용 자산평가액) | () (억원) |
| 직원수 | () 명 | 기업형태 | 법인(), 개인() |
| 회사설립연도 | () 년 | 시공능력순위 | 2004년 () 위 |
| 수주액 | 2002년() (억원), 2003년() (억원), 2004년() (억원) | | |

A. 경영 상태 및 전망

1. 현재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5년전(2000년), 1년전(2004년)과 비교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전반적인 경영상태 | 대폭 개선 | 개선 | 변화 없음 | 악화 | 대폭 악화 |
|----------------|-------|----|-------|----|-------|
| 5년전(2000년)과 비교 | | | | | |
| 1년전(2004년)과 비교 | | | | | |

1-1. (대폭개선, 개선으로 응답한 경우) 경영상태가 개선된 가장 큰 이유를 5년전(2000년), 1년전(2004년)과 비교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 대폭 개선 또는 개선된 이유 | 5년전과 비교 | 1년전과 비교 |
|--------------------------------|---------|---------|
| ①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한 공사물량증가 | | |
| ② 중소기업보호제도에 의한 공사물량 증가 | | |
| ③ 경영개선 노력 (전략수립,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 | | |
| ④ 중점사업 분야의 전환 및 사업다각화 추진 | | |
| ⑤ 기타 () | | |

1-2. (대폭악화, 악화로 응답한 경우) 경영상태가 악화된 가장 큰 이유를 5년전(2000년), 1년전(2004년)과 비교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 대폭 악화 또는 악화된 이유 | 5년전과 비교 | 1년전과 비교 |
|----------------------|---------|---------|
| ① 업체 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 | |
| ② 공사물량감소 | | |
| ③ 경영 개선 노력의 부족 | | |
| ④ 인건비, 자재비 등 원가 상승 | | |
| ⑤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 | | |
| ⑥ 기타 () | | |

2. **(2004년 기준)** 매출액을 4년전(2000년), 1년전(2003년)과 비교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 매출액의 변화 | 51% 이상 증가 | 21 ~ 50% 증가 | 11 ~ 20% 증가 | ±10% | 11 ~ 20% 감소 | 21 ~ 50% 감소 | 51% 이상 감소 |
|----------------|-----------|-------------|-------------|------|-------------|-------------|-----------|
| 4년전(2000년)과 비교 | | | | | | | |
| 1년전(2003년)과 비교 | | | | | | | |

3. **(2004년 기준)**경상이익률을 4년전(2000년), 1년전(2003년)과 비교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 경상이익률의 변화 | 11% 이상 증가 | 6 ~ 10% 증가 | 1 ~ 5% 증가 | 변화 없음 | 1 ~ 5% 감소 | 6 ~ 10% 감소 | 11% 이상 감소 |
|----------------|-----------|------------|-----------|-------|-----------|------------|-----------|
| 4년전(2000년)과 비교 | | | | | | | |
| 1년전(2003년)과 비교 | | | | | | | |

4. **(2004년 기준)**부채비율을 4년전(2000년), 1년전(2003년)과 비교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 부채비율의 변화 | 51% 이상 증가 | 31 ~ 50% 증가 | 11 ~ 30% 증가 | 1 ~ 10% 증가 | 변화 없음 | 1 ~ 10% 감소 | 11 ~ 30% 감소 | 31 ~ 50% 감소 | 50% 이상 감소 |
|----------------|-----------|-------------|-------------|------------|-------|------------|-------------|-------------|-----------|
| 4년전(2000년)과 비교 | | | | | | | | | |
| 1년전(2003년)과 비교 | | | | | | | | | |

5. 향후 건설 경기의 전망을 2년 미만(단기), 3년 이후(중장기)로 구분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 건설 경기 전망 | 매우 낙관적 | 낙관적 | 변화 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2년 미만 단기 | | | | | |
| 3년 이후 중장기 | | | | | |

5-1. (매우 낙관적, 낙관적으로 응답한 경우) 전망 이유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매우 낙관적,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 | 2년 미만 | 3년 이후 |
|-----------------------------|-------|-------|
| ① 신건설 수요의 창출을 통한 물량 증가 | | |
| ②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따른 지역공사 물량의 증가 | | |
| ③ 중소건설업 보호제도의 강화로 인한 물량 증가 | | |
| ④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전망 | | |
| ⑤ 부실건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 개편 | | |
| ⑥ 기타 () | | |

5-2. (매우 부정적,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전망 이유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매우 부정적,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 | 2년 미만 | 3년 이후 |
|----------------------------|-------|-------|
| ① 국가 및 지역 경제 회복 난망 | | |
| ② 중소건설업 보호제도의 퇴조로 공사 물량 축소 | | |
| ③ 업체 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 | |
| ④ 원가(인건비, 자재비 등)의 상승 | | |
| ⑤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부동산 경기 저조 | | |
| ⑥ 기타 () | | |

6. 향후 귀사의 경영 상태 전망을 2년 미만(단기), 3년 이후(중장기)로 구분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 경영 상태 전망 | 대폭 개선 | 개선 | 변화 없음 | 악화 | 대폭 악화 |
|-----------|-------|----|-------|----|-------|
| 2년 미만 단기 | | | | | |
| 3년 이후 중장기 | | | | | |

6-1. (대폭 개선, 개선으로 응답한 경우) 전망 이유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개선(대폭 개선 포함)으로 전망하는 이유 | 2년 미만 | 3년 이후 |
|---------------------------|-------|-------|
| ①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 | | |
| ② 중점 사업 분야의 전환 및 사업다각화 추진 | | |
| ③ 부실건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 개선 | | |
| ④ 공사 물량의 증가 | | |
| ⑤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회복 및 활성화 | | |
| ⑥ 중소 건설업 보호제도의 증가 | | |
| ⑦ 기타 () | | |

6-2. (대폭 악화, 악화로 응답한 경우) 전망 이유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악화(대폭 악화 포함)로 전망하는 이유 | 2년 미만 | 3년 이후 |
|------------------------------|-------|-------|
| ① 업체 수 증가로 인한 경쟁의 심화 | | |
| ② 중소건설업보호제도에 의한 공사물량 확보 감소 | | |
| ③ 국가 및 지역 경제 회복이 요원함 | | |
| ④ 최저가 확대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이익 감소 | | |
| ⑤ 원가(인건비, 자비재 등)의 상승 | | |
| ⑥ 기타() | | |

7. 경영상 애로사항, 건설업체 차원의 경영 애로 극복 과제,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우선 순위로 3가지만 체크하여 주십시오 (1, 2, 3으로)

| 경영 애로 사항 | 순위 | 경영애로극복과제 | 순위 | 경영애로 극복 정책 및 제도 | 순위 |
|----------------|----|---------------|----|--------------------------|----|
| ① 인재 확보의 어려움 | | ① 영업력 강화 | | ① 경영컨설팅 지원 | |
| ② 공사 물량의 부족 | | ② 인재 육성 | | ② 지자체 발주 물량의 증대 | |
| ③ 금융지원 제도의 미비 | | ③ 사업다각화 추진 | | ③ 중소건설업 보호제도를 통한 공사물량 확보 | |
| ④ 기술개발의 여건 미비 | | ④ 경비 절감 | | ④ 새로운 금융지원제도 도입 | |
| ⑤ 경쟁의 심화 | | ⑤ 신기술신공법 개발 | | ⑤ 건설관련 규제의 철폐 | |
| ⑥ 원가 상승 | | ⑥ 인력 구조 조정 | | ⑥ 신규 기술개발 제도 도입 | |
| ⑦ 공사관련 민원의 증가 | | ⑦ 중점 사업 분야 변경 | | ⑦ 건설업 진입 장벽 강화 | |
| ⑧ 비효율적 건설관련 규제 | | ⑧ 기타 () | | ⑧ 국가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적극 시행 | |
| ⑨ 국가지역 경제의 침체 | | | | ⑨ 건설공사 민원 해결 | |
| ⑩ 기타 () | | | | ⑩ 기타 () | |

B. 정책 및 제도

1. 다음은 최근 도입되거나 시행 중(개정 포함)인 것으로서 중소 건설업과 관련이 깊은 정책 및 제도입니다.

| |
|---|
| <p>※ 지방계약법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정착시키고 재정집행의 투명성·경제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5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법률로 개산계약제도 도입 등 계약절차 간소화,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 계약의 투명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인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p> <p>※ BTL(Build-Transfer-Lease) 사업 민간투자 방식의 하나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공공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임. 정부는 학교, 하수관거 등의 사업도 BTL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p> <p>※ 직접 시공의무제도 30억 미만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도급공사의 30%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될 계획임</p> <p>※ 지역제한입찰제도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내의 공사에 대해 입찰자격을 공사 현장이 있는 사·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로 국가공사는 50억 미만,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지난 해 50억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됨.</p> <p>※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사·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미만 공사에 대해 당해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건설업체 1인 이상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p> <p>※ 지역업체 가산점 부과제도 건설공사가 발주되는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말함</p> <p>※ 조달청 등급별 입찰제도 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p> |
|---|

1. 이상과 같은 중소 건설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가 귀사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정책 및 제도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영향 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1. 지방계약법의 제정 및 시행 | | | | | |
| 2. BTL 민간투자 사업의 확대 | | | | | |
| 3. 직접 시공의무제도의 도입 | | | | | |
| 4. 지역제한입찰대상공사(지자체) 확대 | | | | | |
| 5.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 | | | |
| 6. 지역업체 가산점 부과제도 | | | | | |
| 7. 조달청 등급별 입찰제도 | | | | | |
| 8. 턴키, 대안 공사의 확대 | | | | | |

2. 1번 문항에서 「지방계약법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해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 또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판단하시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긍정적, 부정적 한곳 만 응답)?

|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
|-----------------------------|-----------------------------|
| (1) 지방자치단체 계약 제도의 발전 | (1) 국가계약법과의 차별성 미약 |
| (2) 지역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시행 | (2) 중소 건설업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 |
| (3) 지방자치단체 발주 물량 증가 | (3) 지자체 재량 강화로 부조리 증가 |
| (4) 지자체 담당 공무원 전문성 제고 | (4) 지자체 계약 능력 부족으로 비현실적임 |
| (5) 기타 () | (5) 기타 () |

3. 1번 문항에서 BTL 민간투자 사업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 또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판단하시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긍정적, 부정적 한곳 만 응답)?

|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
|-----------------------------|-----------------------------|
| (1) 정부 재정 부담의 축소 | (1) 중소 건설업체 물량 축소 |
| (2) 연기금의 활용 | (2) 중소 건설업체 참여 불리 |
| (3) 민간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 (3) 수익성 저하 |
| (4) 신규 건설시장 출현 | (4)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
| (5) 기타 | (5) 기타 () |

4. 1번 문항에서 직접시공의무화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 또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판단하시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긍정적, 부정적 한곳 만 응답)?

|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
|-----------------------------|-----------------------------|
| (1) 부실업체 퇴출 | (1) 공사비 증가 |
| (2) 건설공사 품질 제고 | (2) 경비의 증가 |
| (3) 위장 직영 억제 | (3) 현장 감독시 부조리 발생 |
| (4) 성실업체 성장 촉진 | (4) 인력 확보의 어려움 |
| (5) 불법하도급 근절 | (5) 기타 |

4-1 귀사의 직접 시공 비율은? ()

- (1) 20% 이내 (2) 20% 이상 40% 미만
(3) 40% 이상 60% 미만 (4) 60% 이상 80% 미만
(5) 80% 이상

5. 지역제한입찰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조달청 등급별 입찰공사 등이 귀사의 연간 공사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2004년 기준)?

| 구분 | 비율 |
|----------------|----|
| (1) 지역제한입찰공사 | % |
| (2)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 % |
| (3) 조달청등급별입찰공사 | % |

6.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업역 제한 철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관심없다

6-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업역 제한 철폐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경우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찬성하는 이유 | 반대하는 이유 |
|---------------------|--------------------|
| (1) 건설산업구조 개편 | (1) 경쟁의 심화 |
| (2) 대중소 건설업체 균형발전 | (2) 업종별 전문화 불가능 |
| (3) 부실 건설업체 퇴출 | (3)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저하 |
| (4) 업역 확대에 의한 수익 증대 | (4) 하도급업체 전략 |
| (5)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 | (5) 이익의 감소 |

6-2. 업역 제한이 철폐될 경우 전문건설업 업종에 진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1) 있다. (6-3으로) (2) 없다.

C. 기술 개발 / 금융지원

1. 신기술 개발(특허, 실용신안, 신공법 개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1) 관심이 없음 (2) 관심은 있으나 여건상 못하고 있음
(3) 적극 투자하고 있음. **(1-2로)** (4) 기타 ()

1-2. 최근 3년 동안 신기술 개발(특허, 실용신안, 신공법 개발 등 포함) 건수는 ?
() 건)

2. 건설신기술제정제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등이 중소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 유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

- (1)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2)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음
(3)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실제적 효과(수주에 기여 등)는 전혀 없음
(4)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효과가 전혀 없음

3.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대책은?()

- (1) 현행 제도를 골격으로 중소 건설업체 기술 개발 유도 제도 보완
(2) 중소 건설업체들만을 위한 별도의 기술 개발 유도 제도 필요 **(3-1로)**
(3) 어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중소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은 활성화되지 않음 **(3-2로)**

3-1.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 유도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두가지만 제시하여 주십시오.

- (1.)
(2.)

3-2. 3에서 (3)으로 응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

4. 귀사의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는? (%)

5. 귀사의 주요 자금 조달 방법은?()

- | | |
|---------------------------------|-------------------|
| (1) 은행 | (2)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 |
| (3) 건설공제조합 | (4) 공사대금 |
| (5) 사채(私債) | (6) 회사채 발행 |
| (7) 기타 () | |

6. 과거에 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 | |
|-----------|----------|
| (1) 어려워졌음 | (2) 변화없음 |
| (3) 쉬워졌음 | |

7.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 |
|------------------------|---------------------------------|
| (1) 대출한도의 부족 | (2) 제출 서류 과다 |
| (3) 대출 절차 복잡, 기간 과다 소요 | (4) 과도한 수수료 |
| (5) 담보(인적, 물적)의 요구 | (6) 기타 () |

D. 사업구조 및 전략

1. 귀사의 현재의 중점 사업 부문과 향후 새롭게 진출할 계획이 있는 사업 부문을 순서대로 3가지만 기재하여 주십시오(1, 2, 3으로).

| 구분 | | 중점사업 부문 | 현재 | 향후 진출 |
|------|------|---------------------|----|-------|
| 자체공사 | | 아파트 | | |
| | | 다세대다가구 | | |
| | | 단독주택(전원 주택 포함) | | |
| | | 오피스텔 | | |
| | | 사무용빌딩 | | |
| | | 근린상가 | | |
| | | 숙박시설(호텔, 펜션 포함) | | |
| | | 공장시설(아파트형 공장 포함) | | |
| | | 기타 | | |
| 도급공사 | 민간공사 | 아파트 | | |
| | | 다세대다가구 | | |
| | | 단독주택(전원 주택 포함) | | |
| | | 오피스텔 | | |
| | | 사무용빌딩 | | |
| | | 근린상가 | | |
| | | 재건축재개발 | | |
| | | 병원 시설 | | |
| | | 종교용 시설 | | |
| | | 숙박시설(호텔, 펜션 포함) | | |
| | | 기타 | | |
| | 공공공사 | 공용청사 | | |
| | | 터미널 | | |
| | | 학교시설 | | |
| | | 공동주택 | | |
| | | 경기장 | | |
| | | 문화재시설 | | |
| | | 전시시설 | | |
| | | 창고시설 | | |
| | | 기타(병원 시설 등) | | |
| | 토목 | 도로(교량, 터널 포함) | | |
| | | 상하수도(관로 포함) | | |
| | | 관개수로 | | |
| | | 치산치수 및 사방 하천 | | |
| | | 용지조성(택지, 공업 용지 포함) | | |
| | | 기타(철도, 댐, 항만, 공항 등) | | |

☞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국내 문헌>

김민형·김진아,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7.2.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중소기업실태조사연구보고(1996년도분),
1998.1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각 연호
이의섭·강운산, 대·중·소 건설업체 균형발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11.

<외국 문헌>

「中小建設産業の新分野?新市場開拓のための企業連携に?するガイドライン」, 中小建設産業の連携による新市場開拓研究委員会, 2002. 7).

Abstract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scheme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Firms in Korea

The management state of S&M(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firms in Korea was a minor improvement from 1999 to 2003, but began a change for the worse at 2004 and became worse rapidly this year(2005).

It is caused by increase of privately financed project type for BTL(Build-Transfer-Lease) and turn-key projects, a reduc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project recently.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of S&M construction firms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 basic line of S&M construction firms' policy should be interception of disqualification firms' entry to construction market and the increase of S&M construction firms' market shares.

Second, it should be a rule in Local Contract Act that when the contracting agency determines the delivery method of public works and size of individual proposed acquisition, the contracting agency should consider effects on the share of public works among small, medium and large size contractors and the bid preference for small and/or medium size should be introduced to balance the share of public works among small, medium and large size contractors.

Third,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S&M construction firms in national financial operation.

Fourth, for inducing development technology of S&M construction firms, government should study a device that makes an offer economic incentive to developing technology firms.

Finally, government should enforce policy that promotes business diversification of S&M construction firms for overcoming currently business bottleneck.

○ 저자소개

강운산(wskang@cerik.re.kr)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전공)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환경법 전공)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외래교수

한국공법학회 연구위원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방지시설 계획 검토위원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북한의 건설제도 조사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환경법상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기후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기반시설부담금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등